



대외경제  
협력기금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1년 제 1 호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 수자원 인프라 개발경험과 ODA

Korea an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Cooperation beyond trade

The Aid Effectiveness Discourse from Paris,  
to Accra, and Busan: The Rhetoric and the Reality

한국과 일본의 ODA 결정요인:  
공여국 이해, 수원국 필요, 세계사회의 규범

대륙적 관점에서 본 콩고민주공화국의 인프라

'DAC 언타이드 권고' 이행현황과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확대 계획

MDGs Goal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현황

## 한국의 개발협력

---

발행 : 2011년 4월  
발행인 : 김 용 환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차 광 수  
주소 : (150-99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전화 : 02-3779-6114 (대표)  
팩스 : 02-784-1030 (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http://www.edcfkorea.go.kr)  
인쇄처 : 삼우커뮤니케이션

---

---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 목 차

## I. 한국의 개발협력

- 1.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 3  
(윤정현,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원)
- 2. 우리나라 수자원 인프라 개발경험과 ODA ..... 17  
(김영진,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처장)
- 3. Korea an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Cooperation beyond trade .. 31  
(Dr. Darwish Almoharby, Sultan Qaboos University)

## II. 개발협력 포커스

- 1. The Aid Effectiveness Discourse from Paris, to Accra, and Busan:  
The Rhetoric and the Reality ..... 55  
(Kenneth King, University of Edinburgh & NORRAG)
- 2. 한국과 일본의 ODA 결정요인: 공여국 이해, 수원국 필요, 세계사회의 규범 .... 65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Ⅲ. 개발협력 분석자료

1. 2010년 DAC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 79
2. 대륙적 관점에서 본 콩고민주공화국의 인프라 ..... 93
3. “DAC 언타이드 권고” 이행현황과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확대 계획 ..... 105
4. MDGs Goal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현황 ..... 119

### Ⅳ. 개발협력 단신

1. EDCF 원조효과성 특별 토론회 주요 내용 ..... 133
2.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남남협력회의 주요 내용 ..... 137
3. DAC 고위관리회의(SLM) 주요 내용 ..... 143

### Ⅴ. EDCF 소식

1. EDCF 지원사업 개요 ..... 149
2. EDCF 동향 ..... 157
3. 국내외 ODA 소식 ..... 165

# I. 한국의 개발협력

## 1.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윤정현,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원)

## 2. 우리나라 수자원 인프라 개발경험과 ODA

(김영진,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처장)

## 3. Korea an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Cooperation beyond trade

(Dr. Darwish Almoharby, Sultan Qaboos University)



##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윤 정 현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원

### I. 머리말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 대열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대표적인 경제개발 성공 국가인 한국이 국제 개발 협력<sup>1)</sup>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공여 비율을 2009년 0.11%에서 2015년 0.25%로 끌어 올릴 예정이며 원조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0년 G20 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개발협력과 관련한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최빈국이 많이 있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의 자원개발 및 경제성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일반적인 경제교류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의 경험을 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개발원조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나라에서는 개발원조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1) 일반적으로 개발원조와 개발협력은 거의 동일한 뜻을 갖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개발원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수원국(원조 수혜국) 자신이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여국이나 공여기관 측에서 수원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 아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공여국, 공여기관은 각자의 비교우위에 맞춰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와의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많은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아프리카 개발협력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참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기존 개발협력 사업과 차별화되는 한국 고유의 강점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수원국들도 한국에게는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방식, 다른 내용의 협력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원조 분업의 관점에서 ‘한국형 원조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실태를 한국과 비교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유망 협력사업 분야를 모색한다.

## II. 공여국간의 원조 분업

공여국간의 원조 분업은 공여국의 증가와 함께 효과성 증대에 대한 문제 인식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EU 공여국을 중심으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원칙에 의해 소수의 분야에 집중하여 원조의 가치를 제고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원조효과 파리선언(2005)’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여국간 원조조화 및 분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는데 EU는 2007년 ‘EU 개발정책에서의 보완성 및 분업에 관한 지침<sup>2)</sup>(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ity and Division of Labour in Development Policy)’을 통해 원조 분업의 필요성을 명문화하였다. 이후 2009년에도 원조 분업이 원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원조 분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아크라

---

2) 지침의 주요 내용 : EU 회원국 간 원조정책 조화를 위해 최대 3개 분야에 집중하며 수원국 내 분야별로 선도 공여국을 선정하여 원조를 조율하는데 이 선도 공여국에게 수원국과의 정책협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함.

고위급 포럼(2008)에서 채택된 아크라행동계획을 통해 원조중복의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표 1] 원조 분업의 주요 원칙

주요 내용
○ 선도 공여국의 원조 간 리더십 제고
○ 공여국 사이의 상호 협력적, 체계적 원조
○ 수원국 상황을 고려한 보다 집중화된 공여국의 원조 활동
○ 공여국 간 비교우위 분야 확인
○ 원조 분배의 합리화
○ 경쟁 유지, 원조의 분업이 타 공여국을 배제한 독점적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자료: Task Team Division of Labour and Complementarity, Division of labour among Donors - An Approach to Harmonisation (2010)

파리 선언(2005)과 아크라 행동지침(2008)에 명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원조분업이란 공여국간 원조의 중복을 없애고 행정 비용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공여국의 비교우위 분야 집중을 통한 원조의 합리화 방안’이다.

원조 분업은 대개 세 단계<sup>3)</sup>로 진행된다. 먼저 공여국에 대한 현황 평가를 진행한 후, 각 공여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모색하여 이에 대한 수원국의 선호 분야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공여국과 수원국은 기존의 원조 지원을 재프로그램하여 비교우위에 맞는 분업 체제로 원조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조 분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여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sup>4)</sup>가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아프리카 원조가 주목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에 한정된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3) 2009년 11월 발표된 ‘2nd Monitoring of the EU Fast Track Initiative on Division of Labour A Product of the EU Technical Seminar on Aid Effectiveness’에서는 원조분업이 보통 3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4) 원조분업 논의를 위한 우리나라 원조 현황 자료 (이미보, 2009),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정우진, 2010) 등에서는 연구를 통해 한국적 비교우위 분야를 모색하였음.

### III. 국제사회 및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현황 개관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들(OECD DAC 회원국들)의 원조는 1990년대 중반 한 때 정체시기를 거친 후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90년대의 원조 정체는 세계적 경제성장의 둔화, 냉전 종식 이후 정치적 원조 필요성의 감소,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인식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세계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0년대 이후 개발원조가 다시 활기를 띠었고,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몰려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빈곤 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한다.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원조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비중은 90%를 넘는다. 역사적 배경, 소득수준, 자원 부존조건 등 제반 여건이 양호한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비중은 하락한 반면, 최빈국들이 몰려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개발협력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최대 수원국들은 나이지리아, 수단,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등으로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MDGs의 발표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상승해 2003년 이후 세계 전체 원조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UN의 2010년 MDGs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목표 달성 지수가 낮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는 그 규모가 보잘것없을 뿐 아니라 전체 원조에서 아프리카에 배정하는 원조의 비중도 낮다. 주요 선진국이 적어도 전체 원조의 30%, 많게는 60%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배정하는 데 비해 한국은 대체로 10~20% 정도를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액은 2006년 4,090만 달러, 2007년 5,470만 달러, 2008년 8,810만 달러

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12년에는 2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될 전망이다.<sup>5)</sup> 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원조도 마찬가지로 증액되기 때문에 전체 원조에서 아프리카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원조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 선진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 현황(2006~2008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DAC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연평균 금액	24,880	5,623	3,236	1,828	2,463	3,371	61
전체 원조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의 비중	40.1%	33.2%	52.6%	34.7%	35.3%	60.7%	14.3%

자료: OECD DAC 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주: 원조 비중은 3개 연도의 전체 원조금액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금액을 각각 합산한 다음, 후자를 전자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임.

[표 3] 한국의 ODA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의 비중

(단위: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1.3	6.6	7.1	7.6	11.6	12.0	18.5	14.8

자료: OECD DAC

#### IV. 원조 분야별 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비교

아프리카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찾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지,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사업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들을 구체

5) 2010년 11월 5일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열린 '아프리카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은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를 2012년까지 2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0년 11월 7일자 참조.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도 대부분 사하라 이남으로 지원되고 있다.

적으로 비교하는 방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원조의 분야별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기본적 시사점은 발견할 수 있다.

OECD DAC에서는 원조 목적 코드(CRS Purpose Code)에 따라 원조 분야를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부문, 다부문(환경보호 포함), 일반 예산 지원 및 현물 원조, 외채 탕감, 인도적 원조, 행정비용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를 다시 중분류, 세분류로 나누고 있다. 주요 분야만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는 교육, 보건, 인구정책, 물 공급, 공공행정 등이 포함되고,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는 운수·보관,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이 포함되며, 생산 부문에는 농림어업, 광공업 및 건설업, 무역 및 관광 등이 포함된다.

원조의 분야별 비중을 분석할 때에는 통계상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외채 탕감은 실질적으로 원조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원조금액을 집계할 때 포함된다는 문제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아프리카 원조를 보면, 외채 탕감 부분이 30%에 가깝게 나타나는데, 이는 2005년 영국의 주도로 시행된 아프리카 외채 탕감 계획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조사업이 진행된 경우에 한정하여 원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채 탕감 부분을 제외하고 원조의 분야별 비중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주요 선진국과 한국 모두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를 가장 중시하며 여기에 약 절반 정도의 원조를 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개발협력의 목표를 경제개발 그 자체가 아니라 빈곤 퇴치로 설정하고 있고, MDGs의 주요 내용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제 분야(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와 생산 부문)에 대한 원조의 비중이 매우 낮은 데 반해, 한국의 원조에서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과거 개발원조 초기에는 경제 분야 원조가 중심을 이루었지만 사회 분야 원조에 비해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들이 점차 사회 분야 원조로 초점을 옮긴 탓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비교적 경제 분야 원조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일본조차도 그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에서는 경제 분야 원조가 사회 분야와 비슷한 정도로 중시되고 있으며, 그 주된 구성 부분은 농업 개발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이다.

이는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새마을 운동의 전파 등 한국형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외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과 한국의 원조 분야가 다른 것은 한국의 독자적 비교우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원조 분야를 조금 더 세분하여 그 비중을 비교해 보자.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앞에서 본 여러 원조 분야 중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부문 등 3개 분야에 대한 원조만을 대상으로 하여(즉 3개 분야 원조액의 합계를 100%로 하여), 그 중 중분류 또는 세분류 항목 중 어떤 분야에 많은 원조가 배정되었는지를 계산해 보았다(<표 4>). 즉 아래의 비교에서는 미국이 많이 하는 인도적 원조(주로 식량원조)나 프랑스가 많이 하는 환경보호 및 일반예산 지원 등의 항목은 제외되어 있다.

[표 4] 주요 선진국 및 한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ODA의 분야별 비중  
(2006~2008년 평균)

(단위: %)

	DAC 전체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I.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8.6	47.9	51.0	44.7	47.8
II.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6.7	2.2	6.0	14.0	17.7
III. 생산부문	5.5	2.7	9.1	12.0	30.6
IV-IX. 환경/행정비용	6.3	3.1	13.8	0.8	1.1
VI. 예산지원/식량원조	12.0	6.0	12.1	15.2	0.9
VIII. 인도적 원조	19.3	38.2	0.6	8.9	1.8
X-XII. 기타	1.7	0.0	7.3	4.4	0.2

자료: OECD DAC 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주: 원조 분야 중에서 “VII. 외채 탕감”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임.

먼저, 미국은 인구정책/생식보건(60.8%)과 보건(9.3%) 부분에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행정/시민사회(9.3%), 분쟁/평화/치안 분야(5.1%)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 분야 원조 비중이 높은 것은 미국이 세계 제약산업의 중심국으로서 보건 분야에 남다른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전통적으로 수원국의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며, 이 때문에 흔히 미국의 원조는 국제체제 관리형으로 분류된다.<sup>6)</sup> 프랑

스는 교육 분야(46.8%)를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4.2%)와 농업(12.7%) 부분에도 많은 지원을 했다. 프랑스의 아프리카 원조는 자국의 구식 민지 영토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원조는 미국, 프랑스에 비해 훨씬 고른 분포를 보인다. 교육(20.1%)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지만, 보건(14.0%), 공공행정(12.0%), 농업(11.7%), 운수 및 보관(10.7%)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다. 운수 및 보관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 인프라, 즉 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개발원조를 활용해 왔다.

[표 5] 선진국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ODA 상위 분야(2006~2008년)

(단위: %)

순위	DAC 전체		미국	
	1	I.1. 교육	19.5	I.3. 인구정책/생식 보건
2	I.3. 인구정책/생식 보건	19.1	I.2. 보건	9.3
3	I.5.a.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4.1	I.5.a.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7.9
4	I.2. 보건	11.9	I.5.b. 분쟁, 평화, 안보	5.1
5	III.1.a. 농업	6.8	I.1. 교육	4.7
순위	프랑스		일본	
1	I.1. 교육	46.8	I.1. 교육	20.1
2	I.6.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4.2	I.2. 보건	14.0
3	III.1.a. 농업	12.7	I.5.a.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2.0
4	I.2. 생식 보건	6.1	III.1.a. 농업	11.7
5	I.4. 물 공급 및 위생	4.3	II.1. 운수 및 보관	10.7

자료: OECD DAC 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에서는 농업(28.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에는 공공행정/시민사회(20.2%), 운수 및 보관(9.3%) 통신(8.4%)의 순이었다. 한국은 새마을운동 보급을 중심으로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행정 분야의 지식 전수와 교육 부문 원조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공공행정 분야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이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을 한국형 원조의

6) 주동주 외, 「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산업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연구용역 보고서), 2009, pp. 43~65.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등 행정 시스템 관련 장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 한국의 대 아프리카 내 ODA 상위 분야 순위(2006~2008)

(단위: %)

순위	한국	
1	III.1.a. 농업	28.9
2	I.5.a.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20.2
3	I.1. 교육	13.1
4	II.1. 운수 및 보관	9.4
5	II.2. 통신	8.4

자료: OECD DAC 통계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이는 민주주의 신장, 인권 강화 등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공공행정 분야 지원과 차별화되는 한국의 독자적인 사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제 인프라(운수, 통신 등)에 대한 원조 비중이 높고 그 중 특히 통신 분야 원조 비중이 높은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인프라 개발에 강하고 IT 분야의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신 분야 외의 원조에서도 전자정부의 사례에서처럼 IT와 연계한 프로젝트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 V. 잠재적 개발협력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은 그러한 비교우위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필두로 한 농업 분야와 IT 분야,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내세운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등이 한국의 강점 분야이자 개발협력 유망 사업으로 판단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원조 프로그램 중 KOICA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것<sup>7)</sup>은 직업교육 및 훈련, 전자정부 구축, 산림보전 역량 강화,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분야별 정보화 촉진, 종합 지역 개발사업, 기초교육 확대, 경제개발전략 수립 지원, IT 분야 인력 양성으로 해당

7) 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 2010, pp. 237~246.



분야들은 MDGs의 달성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개발협력 수요로 연결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상위 분야에 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현황을 파악하였다.

## 1. 농업 분야 현황

아프리카 농업은 아직도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 때문에 구조적 저개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열악한 자연조건, 인프라, 정책, 영농기술 부재, 기술 인력 부족 등의 기초 여건 미비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농업 인구의 비중이 높음에도 농업 생산성을 낮게 하였고 농업의 저개발은 빈곤의 탈출과 연계되어 악순환을 이어왔다.

때문에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는 농업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종 농업 지표에서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빈곤층 감소와 경제발전의 1차 극복 과제<sup>8)</sup>로 농업이 중요한만큼 아프리카 내 농업 개발협력 수요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보여진다.

[표 7] 아프리카의 농업관련 지표 : 국제적 비교

구분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전세계
경작가능 경지비율(%)	7.0	39.3	11.6	28.7	20.0
1인당 곡물생산량(kg)	147	224	259	128	349
곡물 수확량(kg/ha)	1,335	2,308	2,795	1,963	2,067
비료 사용량(kg/ha)	22	109	85	67	100

자료: 박영호,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2009)

8) Benno Ndulu (2007)은 다음 단계로의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농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 2. 통신 분야

정보통신 산업은 저개발국인 아프리카에서도 새로운 성장 부문으로 등장하고 있다. 통신 분야의 지원은 전통적 개발 섹터는 아니지만 정부 주도로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여 제도적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정보통신기술에 2012년까지 2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통신 시장 역시 매년 성장<sup>9)</sup>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통신 분야, 특히 IT관련 분야에의 개발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분야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sup>10)</sup>은 한국의 강점인 IT인프라 분야에서의 수요도 많이 유발할 것이다.

## 3.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공공행정/시민사회 부분은 아직 물자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개발경험의 롤 모델로서 경험 전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해당 분야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수요<sup>11)</sup>가 늘어가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압축 성장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기 바라고 있으며 성공 모델로서 그 가능성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개발경험의 공유는 각 국의 개별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협력 수요가 창출 될 것이다. 아직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산업의 발전이 더디지만 최근의 아프리카 경제 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9)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무선통신 분야의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하라 이남 지역의 무선 100명당 보급률은 2000년 1명 미만이었는데 2007년에는 평균 10명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아프리카 전체 무선통신 보급률은 평균 25%에 이른다.

10) 세계은행 통계에서 사하라 이남 지역 인터넷 사용자는 2008년 평균 5.8명으로 세계 전체 평균 28.3명에 크게 못 미친다.

11) KOAFEC 한국경제개발경험전수 워크숍을 통해 콩고, 르완다 등의 국가가 관심을 보였으며, G20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전수가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음

## VI. 시사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발협력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의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는 매년 OECD DAC 회원국의 개발원조를 주요 지표에 따라 측정하여 원조의 질을 평가한다.<sup>12)</sup> 지표들 중에는 분야별 집중과 특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각국이 자국이 가진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중요성과 함께 분야별 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각국이 가지는 강점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도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비교우위 분야를 강화하여 수원국의 수요를 이끌어 낸다면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전체 원조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이를 다수의 나라로 분산하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한국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조 사업을 너무 많은 소규모 프로젝트로 분할하다 보면, 공여국과 수원국 양측 모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며,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현지의 경제사회 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앞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강점을 강화하는 비교우위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IT 분야에서는 관련 인력의 현지 파견을 확대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현지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의 지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원국 정부에 파급력이 큰 전자정부처럼 IT 기술을 접목한 원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IT 분야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민관협력사업과 같은 최근의 개발협력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대표적 브랜드를 통해 개도국의 많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농업 분야 개발협력은 아프리카 내에서는 특히 더욱 큰 수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은 UN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와 농촌

---

12)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0.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접목하여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원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현지의 ‘자립 적 발전 여건 조성’에 성공할 경우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의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의 핵심인 산업부문 개발전략을 전수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대상 국가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일반적 경제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단지 시혜적 차원에 머무르기보다는 한국과 아프리카 상호 간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핵심 경제부문인 산업 부문에서 개발협력과 일반적 경제협력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박영호,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안미보, 원조분업 논의를 위한 우리나라 원조 현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9

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 2010

주동주 외, 「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산업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연구용역 보고서), 2009

Nancy Birdsall and Homi Kharas,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0

Task Team Division of Labour and Complementarity, Division of labour among Donors - An Approach to Harmonisation, OECD, 2010

<http://www.cgdev.org/>

<http://www.oecd.org/>



## 우리나라 수자원 인프라 개발경험과 ODA

김 영 진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처장

### I. 들어가며

물은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물에 대한 수요는 1950~1990년대 사이에 약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30년 이내에 최소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수자원 개발여건의 악화, 기상재해 증가 및 기후 변화, 수질오염의 심화, 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요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물 소비량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물소비량이 평균 20리터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은 400~500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NEP (유엔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6에 해당하는 11억명이 안전한 물에 접근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화장실 오수처리 등 적절한 위생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인구도 약 24억명에 이르며, 비위생적인 물로 인해 사망하는 인구가 연평균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있어 수량적으로 풍부하고 수질적으로도 안전한 물의 공급은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에 주요 요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를 1950년대 이후 경험하였다. 생활용수로 수질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마을 우물이나 시냇물을 이용하였고, 화장실 등의 오수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용수 역시, 전혀 개발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개발, 공업용수도와 광역상수도 건설을 통한 산업 및 생활용수의 공급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 계획에 따라 소양강 다목적댐을 비롯한 15개 다목적댐의 건설과 수도권광역상수도를 비롯한 33개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건설을 위해 소요되었던 막대한 재원 중 일부는 차관 등 외국지원에 의해 충당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였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확보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대규모 SOC의 건설은 고용창출 등 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자원분야 인프라 건설은 각종 차관 등을 통한 선진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1995년 더 이상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실상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하게 되었다. 이제는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물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우리나라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공여가 필요하다.

본고는 그 동안의 물 관련 인프라건설 경험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이 단기에 효과적으로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ODA 지원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수자원 인프라 구축사례

1960년대의 경제개발 초기 다목적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은 고용의 창출과 투자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68년부터 1990년까지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실업률을 연평균 0.02% 낮추었으며, 연평균 0.18%의 국내 총생산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은 고용 창출은 물론 저렴한 요금으로 용수 공급을 가능케 하였으며, 전염병 발생률을 거의 0% 수준으로 낮추는 등 국민 복리와 후생 증진에 막대한 기여하였다.

본고에서는 최초의 수자원 개발사례인 소양강 다목적댐과 수도권 물문제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도권광역상수도 건설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자원 개발사례 (소양강다목적댐)

###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고, 연중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으로 댐 건설을 선택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한 산업 발달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정된 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가 대형화·다양화됨에 따라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최초의 사업이 소양강 다목적댐이었던 것이다.

### 나. 건설과정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1950년대에 기초조사 및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화와 서울을 포함한 한강 하류지역의 용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댐 건설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강을 위시한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1966년에 한강유역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당시까지 고려되어온 발전 단일목적 개발을 치수와 이수를 겸한 다목적 개발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최초의 대상사업이 소양강 다목적댐이었다.

정부는 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최종계획을 결정하였으며,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동 공사는 1968년 3월 30일 제1호 가배수로 터널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이래 만 5년 반만인 1973년 10월 15일에 완료되었다.

한편, 소양강 다목적댐은 당초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설계되었으나, Rock Fill 댐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건설되었다. 댐 형식이 변경된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의 철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생산능력으로는 소양강 다목적댐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관계로, 산간벽지인 시공지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 이면에는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성 확보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소양강 다목적댐은 대형 굴착장비 및 운반장비를 활용한 시공으로 근대 Rock Fill 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계, 시공, 현장시험, 계기매설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댐 기술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 소양강 다목적댐 전경



#### 다. 원조현황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사업비로 총 32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약 37%인 117억원이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유상원조)으로 조달되었다.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은 건설장비 등 현물차관이 대부분이었는데, 대규모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Rock Fill 댐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양강댐 건설에 사용된 차관은 1990년에 상환이 완료되었다.

[표 1] 소양강 다목적댐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내 자			외 자	비 고
		계	정 부	수 공		
소양강댐	32,085	20,315	16,992	3,323	11,770 (¥7,795)	ECOP <sup>13)</sup> (상환완료 : 90년)

### 라. 소양강댐의 경제·사회적 효과

소양강 다목적댐은 홍수방수량 조절(12,620→5,500m<sup>3</sup>/초)을 통해 준공 후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경감시켰으며, 홍수조절 해당면적은 770백만m<sup>3</sup>에 달한다. 또한, 연간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생·공·농업용수는 1,213백만m<sup>3</sup>이며, 일정하게 하천을 유지하는 용수를 공급하여 수질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19만 가구의 1년 사용량인 560백만 kWh로, 경유 약 60만 드림분에 해당하는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500억원의 유류대체 효과를 가지는 규모이다.

## 2. 수도개발사례 (수도권 광역상수도)

### 가. 추진배경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 산업, 기술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도시인구 집중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생활 수준 향상 및 공업화로 물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양호한 취수원을 확보하여 대규모 용수를 광역지역에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광역공급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13) ECOP (Economic Cooperation):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재정차관에 의한 경제협력자금

## 나. 건설과정

광역상수도는 1960년대 이후 공업육성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공업용수도 건설로 시작되었으며,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120만 $m^3$ /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I 단계가 1973년에 착공되었다. 4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본 사업은 1979년 완공되어 수도권 도시의 만성적인 물부족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이후, 1976년도에는 금강광역상수도를, 1977년도에는 수도권광역상수도 II 단계를, 1979년에는 낙동강 광역상수도를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광역상수도 개발시대가 전개되었다. 현재, 수도권광역상수도는 1979년 1단계 사업이 완공된 이후 5차례의 확장을 통하여 총 6단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 최대 828.5만 $m^3$ 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림 2] 수도권 3, 4단계 광역상수도 시설 (성남정수장) 전경



## 다. 수도권광역상수도의 경제·사회적 효과

광역상수도는 대규모 취수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단일 시설로 다수의 급수지역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성 측면에서도 개별 상수도보다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원거리까지 수송이 가능하므로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며, 수질이 나쁜 하류에도 깨끗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용수량의 지역간, 유역간 불균형이 상존하는 우리나라 수자원 특성에서는 광역용수 공급체계 확대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역상수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첫째, 대단위 취수원의 개발 및 확보로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 둘째, 하천 중하류의 수질 악화로 인해 양호한 수질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양질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 셋째, 대규모 시설의 통합건설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 사업의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넷째, 한정된 수자원의 지역별 적정 배분을 통해 국토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 III. 개발도상국 수자원 인프라 개발과 ODA

#### 1. 수자원 ODA의 중요성

물은 인간의 생존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 물부족의 해소는 국가 발전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환경요소이다. 또한, 21세기 국가적·지구적 최대 현안과제로 물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수자원 분야의 공적개발자금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서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수자원 분야 ODA의 중요성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은 인간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MDGs<sup>14)</sup>의 주요한 목적인 지속가능한 환경확보의 세부목표(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환경에의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의 반감)와 일치한다. 이를 위해 OECD DAC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수자원분야 ODA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8%대를 유지하고 있는 등 저가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공여를 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분야 ODA는 MDGs의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목표3. ‘성 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개발목표):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서밋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둘째, 물은 전력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1960~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역점을 둔 사회기반시설 중의 하나가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의 건설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외국의 공적개발자금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력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건설이 이루어졌다.

셋째, 우리나라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세계 물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 물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석유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물산업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수자원분야 OD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세계 물시장은 프랑스 (Veolia, Suez, Saur), 영국 (Severn Trent, United Utility), 독일 (RWE) 등 유럽에 기반을 둔 다국적 물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물기업들은 저개발국의 열악한 식수 및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해외 물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기금 총액이 10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연합 물 기금’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77개국의 상하수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럽의 다국적 물기업들은 이러한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분야 컨설팅이나 운영관리분야 세계시장 진출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ODA의 수자원분야 비율을 점차 OECD DAC 회원국 수준으로 늘여가고, 국내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수자원 분야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점차 늘어나는 세계 물시장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수자원분야 ODA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 가. 수자원분야 ODA 현황

수자원분야 ODA의 경우, 2005년 전체 ODA의 4.6%에서 2008년도에는 9.4%로 규모가 두 배 정도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규모 확대는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추세에 맞추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우리나라 수자원분야 ODA 현황 및 비율

(단위: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ODA 총계	351.3	316.5	412.6	452.4	496.5	
- 식수공급 및 위생분야	16.2	13.7	21.1	42.5	41.3	
비율 (%)	4.6%	4.3%	5.1%	9.4%	8.3%	
무상원조 총계 (KOICA)	201.9	193.1	270.1	272.4	272.8	
- 식수공급 및 위생분야	6.6	3.5	4.9	10.0	11.1	
비율 (%)	3.3%	1.8%	1.8%	3.7%	4.1%	
유상원조 총계 (EDCF)	149.4	123.4	142.5	180.0	223.7	
- 식수공급 및 위생분야	9.6	10.2	16.2	32.5	30.2	
비율 (%)	6.4%	8.3%	11.4%	18.1%	13.5%	

※ ODA 총계: KOICA의 무상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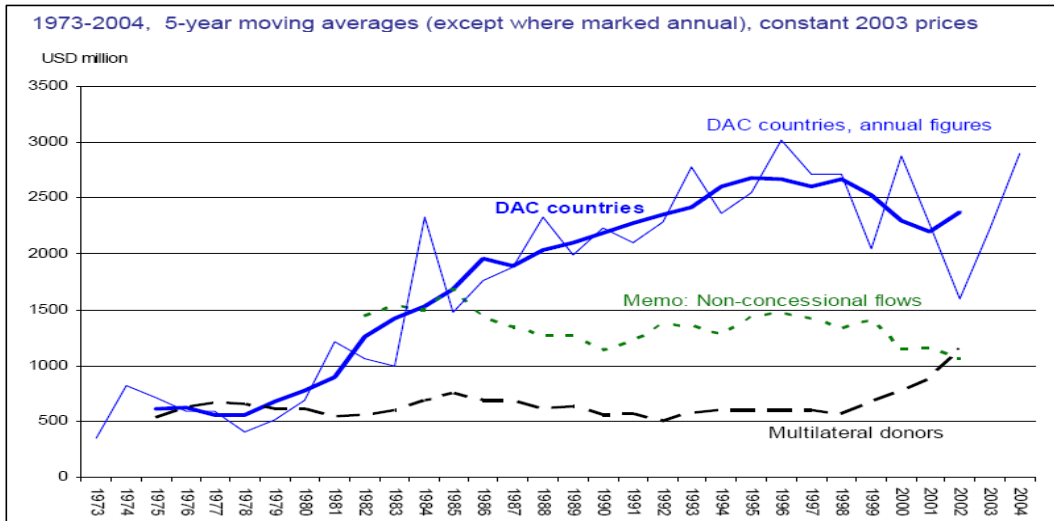
또한, 사업범위가 아시아권을 넘어 아프리카, 중남미를 비롯한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수자원분야 ODA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자원분야 ODA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역시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나. 우리나라 수자원분야 ODA

첫째, ODA 시장규모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ODA 지원규모를 점차 늘여왔으며, 2009년 OECD DAC의 가입을 계기로 정부에서

도 ODA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자원분야의 DAC 회원국 양자간 ODA 자금은 2004년 3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여 역시 2004년 1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줄어들기 시작한 이래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림 3] 수자원분야 ODA 추세



출처 : OECD DAC statistics, Creditor Reporting System

둘째, 물부족이 심각한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부존자원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아프리카의 경제개발을 위한 수요 증대, 빈곤 극복 등 MDGs 달성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분야 ODA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녹색성장 산업에 대한 EDCF 지원규모를 승인 총액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으며, 또한 ADB에 운영 중인 미래탄소펀드에 2010~2013년간 2천만불 출자, JICA(日) 및 AFD(佛)와 공동으로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 지원 등 녹색 ODA 분야 공여를 강화하고 있다.

#### 다. 효율적 ODA 사업의 추진방향

원조사업의 혁신을 통하여 그 효과와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이는 길은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잘 살려 원조의 본래 목적인 국제사회의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효율적인 ODA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유사한 상황에서 ODA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 원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보다 특화시켜 ODA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향후 ODA 사업은 단순 물자지원보다 SOC 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수자원, 상하수도 등 수자원분야 SOC 사업은 수인성 질병 등의 감소를 통해 수원대상국 국민들의 삶의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산업발전의 기본요소인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KOICA 사업을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상원조사업(EDCF)과의 연계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공동 참여를 통해 공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 이슈인 녹색성장분야 사업 발굴에 집중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 IV. 맺음말

수자원은 빈곤, 교육, 성 평등,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근본요소이다.

수자원 인프라 개발은 개발도상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SOC 분야 지원 확대, 무상원조사업과 유상원조사업의 연계지원 강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ODA 중점추진 대상지역의 전략적 변경,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공동 참여, 기후변화 대응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분야 사업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 원조 및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ODA 사업 추진방향으로 판단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해외 물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수자원 및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수출로 국익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ODA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고, 민간기업과 공동 추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관련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공동 참여는 신규 물시장 개척은 물론 공기업의 신뢰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발전에 동참해야 함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의무사항과도 같다. 우리가 수원대상국이었던 역사를 되새기며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ODA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OECD DAC 가입과 함께 국민과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 참고문헌

김계호 외 (1997), “한국의 수자원 개발 30년”, 한국수자원공사

마크 드 빌리어스 (2001), “물의 위기”, 세종연구원

크라폰리강 유역 다목적 수자원개발 타당성조사사업(2005), 한국국제협력단·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2006)

전승훈 외 (2006),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한국국제협력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7), 한국수자원공사

과학기술부 (2007) “물부족! 제대로 알자”

유종익 외 (2008),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한국 환경기술진흥원

노재화 (2008) “수자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2008년 주요정책”, 물과 미래

정호성, 김화년, 이종규 (2009),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삼성경제연구소

권 율 외 (2009),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해양부

류문현 (2011), “광역상수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수자원공사



## Korea an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Cooperation beyond trade

Dr. Darwish Almoharby<sup>1)</sup>,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Sultan Qaboos University

### Abstract.

Korea is often cited as a benchmark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A question that is frequently posed: how could Korea, small in size as it is and with recognizable paucity of natural resources occupies a leading economic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While this paper does not endeavor to address this and other related questions in details, it however seeks to highlight some important elements that may provide some preliminary suggestions, and to stimulate further discussion on enhancing and sustain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The paper attributes the Korean success to its human element and entrepreneurial mentality as much as its industrial advancement. Hence, in developing the central thesis of this paper, the role of entrepreneurialism is brought to the fore as a crucial strategy vis-à-v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beyond the oil era, and as a mechanism for sounder and more sustainable cooperation. The paper hopes to stimulate discussion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by means of explanation of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ducation. From a presentation of assorted ideas and issues, propositions for future cooperation are formulated to serve as foundations for objective and sustainable collaborative engagement.

1)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anagement, Sultan Qaboos university; Academic program reviewer and Quality Assurance expert for the UNDP.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management decision making which he confines to areas of small & medium enterprises, 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p.

## I . Introduction

A cursory glance at the history of South Korea (hereafter referred to as Korea) shows that it experienced long periods of insulation particularly in the last quarter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addition, it shows that as a result of many divergent reasons, the country's economy has witnessed crippling phases. A notable one of these is the North/South partition. According to Muller (1997), this adversely effected the South but not as much the North which enjoyed superiority in natural resources necessary for industrialization. These resources generated most of the peninsula's hydroelectric power and produced 86 percent of the region heavy industry output. Moreover, and as a direct result of the partition, Korea lost its natural market as well as its supplies of electricity and coal from the North.

The situation was aggravated further by acute shortage of trained personnel, food and housing, coupled with severe unemployment and inflation. Korea was made to face huge waves of refugees and repatriates from Japan which according to Reeve (1989) swell then 6 million population by additional 2.5 million between 1945 and 1949. The Korean War (1950-1953) brought about additional and overwhelming layers of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and perhaps brought various national aspects to a halt. It is only during the sixties that Korea started to put more emphasis on economic growth under the leadership of Park and his successor Chun Doo Hwan. Korea experienced unprecedented encouragement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provision of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decades to follow, and with the worldwide turbulences, Korea experienced unique economic fortunes and was able to navigate its international strategic policies and national decision making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style. Indeed, during the 1997 region-wide financial catastrophe, Korea experienced its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Korean war but it made a speedy recovery where in 1999 the economy grow at 10.7 (OECD, 2000).

Today, Korea stands as a world-class ‘industrial front’ and an inspiring exampl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or a rather extended period of time and decades of continuous and sustainable and perpetuated growth since the sixties of the last century, Korea’s real capita GND increase at an annual rate of almost 7 per cent making it the most rapid economic growth ever achieved by a country with large population (Mahler, 1990). According to the World Bank (1993) attribute this to four interconnected and equally important phases: (1) Export take off (1961-1973), (2)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HCI) drive (1973-1979), (3) Functional incentives and liberalization (1980s).

## II. Korea, the Experience and the lessons

World Bank (1993) affirms that future-outward-looking strategy coupled with low inflation, macroeconomic stability, a strong global connec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n adaptive educational system were major factors for the advancement of the economy. In fact Korean economy has been witnessing marked and rapid growth and higher standards of living than mos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Salih (2005), policy makers in Korea were instrumental in their indiscriminative approach to industrialization.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had their appropriate share of encouragement and institutional care. There has been a tremendous effort to generate and further enhance a cooperative culture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the government, public services and the private sector, a well planned and a coordinated approach with arch type effects (Wade, 1990). According to Lee and Naya (1988), Korea paved the way for systematic liftoff of industry through strategic policies both in electrical equipments and heavy engineering products (e.g. ships, machinery, oil rigs, etc).

Appropriate coordination of national effort is fundamental to success in areas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Almaharbi & Khan, 2007). With these coordinated policies and their spillover, Korea’s international trade was able to secure its position respectable among the most dynamic economies of all

developing countries. Salih (2005) suggest the following eight reasons, listed below due to their importance:

- (1) High savings which have been channeled into meaningful and successful domestic investments.
- (2) Encour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culminated in a recur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icultural and the industrial sectors. Specifically, for the case of Korea the agricultural sector was pulled along by a dynamic industrial sector, thereby generating an accelerator impact on the whole economy.
- (3) Adaptive institutions that have facilitate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economic agents,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society at large.
- (4) Concerted and concurrent manpower programs that have been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 (5) Intellectual ability which has facilitated the adoption of new ideas.
- (6) Fiscal responsi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financial systems.
- (7) Conformity to - Western and American -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 (8) Stable, capable and responsible governments that are more motivated by economic than political determinants.

Notwithstanding these elements and their ever-active and sustainable role, we argue here that Korea perhaps excelled due to its entrepreneurial mentality and enterprise culture. This is extremely important and would continue in the decades to come. We single out the entrepreneurial mentality because resources and availability of capital may not always result in economic and human prosperity. It is sometimes puzzling to the mind how stagnant other countries; those with abundance of resources and massive financial and human capital. It is equally bewildering how many countries failed to assert themselves in the arena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ism. Here we contemplate that it is this innovative and creative state of affairs that perhaps makes today's Korea which now speeds ahead of international players into the knowledge age, boasting the most

networked society on earth, a mass of highly educated people and a ubiquitous innovation system (Innovations, 2007). This has been made possible due to active involv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According to Innovation (2007), both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investing in a national undertaking with staggering figures that read as follows:

1. Total R&D investment has reached nearly 3 percent of GDP, amounting to US\$25 billion in 2006, the sixth highest rate in the world. Private industry accounts for 75 percent of this.
2. Ten next-generation technologies were designated in 2003, intended to be drivers of Korea's 'second leap' to GDP of US\$20,000 per capita by 2012.
3.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was only 200,000 in 1970 and now tops 3,500,000, a 18-fold increase. Over the same period, R&D investment grew tenfold. Government aims to increase the R&D workforce to 270,000 in 2007.
4. Ten ministries are investing in biotechnology, aiming to put Korea in the top three countries in biotech by 2015.
5. Government plans are for Korea to have ten cutting-edge nanotechnologies and 12,600 nanotechnology experts by 2010.

### III. Why entrepreneurship-based cooperation

This paper endeavors to promote an entrepreneurial-based cooperation for two reasons. First, as mentioned earlier, Korea serves as a world-class model. Second, entrepreneurialism is required by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Khan & Almoharby, 2007).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e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 generation is widely recognized (OECD: 1998). Since the early 1980s,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enterprises has been growing steadily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encourage and stimulate entrepreneurship, many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universities, colleges, and institutes around the world have launched numerous programs and initiativ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now increasingly seen as the savior of economies particularl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Many argue that some big projects, no matter how attractive they may appear, are in most cases capital intensive. This means that if solving unemployment is one of the aims, creation of jobs may not figure extensively. Small businesses require smaller budgets and smaller number of employees. Individuals as such may contemplate creation of their own opportunities, and hence become more innovative. In all its forms, private sector nowadays plays a major role in economic prosperity of many countries. Most of these have witnessed huge numbers of young entrepreneurs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ention just a few, SMEs now account for 99 percent of activity in the EU, according to the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3). Korea estimates show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ntribute 99 percent of the GNP, with the existence of more than 2.4 million of such businesses. In the UK there are more than 4 million small businesses, employing 12.6 million people representing 56 percent of private sector workforce. Together they account for more than 99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UK firms and generate 52 percent of total national turnover (Griffiths, 2004). Canada on the other hand has the second highest rate of new business creation among industrialized nations. There are 2.6 million small businesse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in Canada account to 60 percent of all private sector employment and almost half of private sector GDP (Doucet, 2002). There is a spectrum of achievement in this front in the Scandinavian countries both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market-oriented SMEs. Other examples can be cited in Malaysia, Thailand, Singapore, India, Hong Kong, and China. As a result of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ny young graduates increasingly aspire to establish new business start-ups or become self-employed. In many cases this aspiration meets success, but for others this may become a financially disastrous endeavor.

Many of these perhaps lack necessary training, experience, and more importantly enough financial support to cater for their businesses. In many cases, some of these assume the risk of establishing business ventures, driven most of the time, by important factors to them such as guaranteed employment and other financial rewards. In many cases these end up suffering failure and incurring huge financial burden as many of them resort to money lending agencies or to family and friends' support (Almoharby & Choudhry 2007). Governments on the other side aspire to maintain economic stability, growth, and sustain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on of appropriate jobs. In so doing, the two strands, the individual and the government, confront different but interrelated sets of challenges. Changes in international arena, such as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WTO, and politics in general add other layers of difficulties i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Governments and individuals often find themselves forced to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benchmarking with all that they bring along.

#### IV. Points of concern and debate

All this been said, and as entrepreneurship sustain its vibrancy, and as more governments realize its adequacy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ts role becomes more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warding. And as small businesses nullify larger organization, at least in the creativity aspect, entrepreneurship looks set to gain more momentum and wider recognition. No doubt that during the post Second World War area, and in the period when large firms had not yet assumed their powerful position of the 1960s and 1970s, small business was not seen as pressing tool for economic efficiency, but was seen appropriate for political and social purposes (Turik and Wennekers, 2004). This collides head-on with earlier thoughts that supported larger firms. For example, although scholars such as Schumpeter argue that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of a nation comes from the entrepreneurs, or what he refers to as 'wild spirits' (Schumpeter

2007, Wikipedia), small business will eventually fall victim to its own inefficiency. Consequently Small businesses dissolve in history, leaving the future solely in the hands of larger firms. The other view held and for which Schumpeter is known is the notion of 'creative destruction' where he believed capitalism would eventually perish of its own success, giving way to some form of public control or socialism (Schumpeter 2007, Britannica). Since then, and in view of current affairs of the economy world-wide, the fortune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surely has changed dramatically. Entrepreneurship and SMEs seem to be driving many economies, and with this comes a challenging task. A heavy weight is now placed on business schools and others to make sure that graduates are entrepreneurially viable.

But first, how do economies reach a stage where entrepreneurship is both effective and beneficial for governments and individuals? In the narrow sense, the elements of education and systems vis-à-vis policies and governance need to be illuminated. With the simplest definition of management being working with and through people, the human element abounds. The whole issue of entrepreneurship and systems need to be modularized in order to understand its wide range of consequences.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also a vital need to differentiate between entrepreneurship as a form of business operation and entrepreneurial conduct. Since entrepreneurship is considered sometimes synonymous to creativity, then its ramification is archetype and its conduct helps shape entire systems. As such, innovators regardless of their functional and ideological background are often involved in the radical entrepreneurial tasks in organizations which are often dictated by turbulent business environments (Foxall & Minkes, 1996). It is perhaps fitting to argue here that entrepreneurial conduct is the grease that keeps the wheels of nations moving properly and smoothly. This conduct requires nurturing and good care and comes through a spectrum of elements not least through proper education. At any rate, it does not serve justice to entrepreneurship viewing it in the narrow tunnel of self-employment, since it provides wider contribution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varied careers (Young, 1997).

It may also be appropriate to argue that when economic and social affairs in countries huff and puff, policy makers usually resort to education as their savior. Education and economy have an interdependent relation, success or failure in one makes it either easier or more difficult to address the other. With its apparent role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education also ‘underpins the functions of citizenship and everyday life, including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 child-rearing and family life, and recreational activity in the broadest sense’ (Bynner, 1998). With regard to business education, in the last few decades, waves of students have been undertaking business programs for two interconnected hopes. Through business education, governments on the one side aspire to find solutions to their nat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on the other side, individuals aspire to take active role, guarantee good living and generate an income that see them through daily life.

As mentioned earlier, more and more, universities and business schools in particular, are now placed on sharper focus; this is where business education takes over in countries; with important roles they are expected to assume in building capable management workforce, one that is able to cope with the ever-increasing challenges (Gill & Lashine, 2003). As argued previously,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seen as an important mechanism to address the many issues that government and individuals face. And with this important responsibility comes accountability. In addition to increasing competition in academic market (Melcher, 1998), education system confront ever-increasing difficulties in maintaining requisite funding levels from governments and fee-paying students and parents, and more importantly in legitimatizing their existence (Liu & Dubinsky, 2000). So what questions may confront governments and business education,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ntrepreneurship?

Four important questions that lend themselves here are asked by Levenburg et al (2006): (1) To what extent do students across the university population possess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commonly viewed as indicators of entrepreneurial intent, (2) To

what extent do students have an interest in innovating new products or services? (3) What is the level and extent of interest in taking new venture courses (i.e., entrepreneurship)? (4) Are there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non-business entrepreneurship in regard to their entrepreneurial intent and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curricula? Findings of this research illustrate clearly that 'entrepreneurial spirit is alive and well across the university population' since a recognizable percentage of students showed aspiration toward engagement in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regardless of their academic specialization.

Taking these finding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by Levenburg et al suggest that business schools look beyond their own traditional constituent and majors. This they recon will position them well to widen their role by asserting a more interdisciplinary approach by serving a wider university students' population. This in turn means that series of actions should take place. First business schools should redefine their visions and missions. Second they need to reshape their market scope to evaluate the roles that they may play in supporting this new initiative. Thereafter more micro level actions are required. These range from developing the curriculum and courses, to modifying their marketing and admission criteria and beyond. Here wee however recognize that this particular study is limited to students enrolled in a U.S. university and calls for more research from other countries to provide a much needed comparison and to establish a much clearer worldwide picture. University-wide entrepreneurial programs were found a worthy undertaking.

Moreover, Souitaris et al (2007) reached a variety of conclusions that emphasized the inspirational role of such education contending that 'universities that want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ir programs should capture not only how much their students learn about entrepreneurship or whether they are satisfied with the course, but also whether they are inspired from the program'. It is this inspirational element that they found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had more intention towards self-employment. This supports earlier findings by Kolvereid & Moen (1997) who found entrepreneurship to some extent is a function of factors which can be altered through education, and similarly

by Hanns et al (2007) who give engineers higher cushions over other professionals in organization for their developmental and innovative mentality that is most suited for entrepreneurship. These findings also suggest that graduates who have taken a major in entrepreneurship have stronger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 more entrepreneurially than other graduates. This ties well with theory of planned behavior (see for example Ajzen 1991 and Shapiro & Watson, 2000) which argues that inherent ambitions of individuals can be treated as helpful predictors of potential for future careers.

The call for more worldwide research in this area of business is justifiable and extremely necessar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spiring to create conducive environment for the growing interest in business ventures. This aspiration is not geographical or region-specific since countries in the developed West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require remedies to divergent problems and challenges. In fact there is numerous research work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recent years to address some of these issues. In a longitudinal study that spanned from 1995 to 2004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K, Matlay & Cary (2007) found that at least 40 universities provided some courses in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Similar findings were reported by Bennett (2006) who found 68 percent of vacancies advertised by student recruitment web sites of 121 British university-level institutions included the word “entrepreneurship” or a similar term.

Nevertheless, during the past decade, entrepreneurship and SMEs education have not had an easy ride; the area has been marked by a slow pace and continuous doubt. Matlay & Cary argue that during the first five years (1995-1999) it appears that new universities were keener and more proactive than older higher education institutes, in their offering of designated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urses. This they reiterate explains the consensus amongst policy makers, researchers and business observers in the UK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significantly increasing both in number and quality of graduate entrepreneurs entering the economy. Still much is needed in order to boost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the UK since as argued by Bygrave et al (2001) little attention is paid to teaching entrepreneurship at all levels of British educational system offering a

remedy by introduction of entrepreneurial projects in schools and more creative teaching methods and by what he terms 'can do' culture and 'confidence'. Thurik (2003) argues that in the UK, the overall business environment is pernicious when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considered. He explains that there exist many barriers to small business start-up and development. These include negative attitudes towards self-employment and wealth generation, lack of attention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lack of sound entrepreneurial teaching methods, financial gap small and risky, potentially high-growth ventures, burden of start-up procedures which inhibits creation of employment and expansion of existing businesses.

Nevertheless, there is an assumption that those who ha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be positively influenced towards an alternative career pa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seen to simultaneously equip the would-be entrepreneur with the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to start up, manage and develop an economically viable business. It is also seen to create wealth and reduce unemployment. Not many will dispute the notion that entrepreneurs contribute to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y improve living standards and tax revenues from their enterprises contribute to a nation's treasury (Dana, 2001). However, this forecasted and perceived good comes with some caveats. Matlay & Cary (2007) argue that policy makers are still left to question the relevance and efficiency of a growing number of entrepreneurship courses as well as the viability of allocating funding for this particular sector. In fact for decades, business education has been under the scrutiny of viability. Traditional business education in the more established majors (i.e. management, finance, and accounting)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doubts.

## V. Discussion and Concluding Remarks

Korea serves as a fine exampl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It is also a benchmark for innovation, industrialization and human development. Historical underpinnings and out-looking strategies provided the country with tremendous experience

and hence have been able to be a major international economic and industrial force. In a span of few decades Korea underwent a total transformation from a consumer of technological appliances to a leading manufacturer of internationally acclaimed brands. This has been viewed as a commendable act in the form of economic and social miracle.

Over the past few decades, Korea and many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enjoyed beneficial bilateral relations in areas of natural resources, industries, and international trade. Today there are a number of long-term agreements that have forged business partnerships with local companies (e.g. Oman, Saudi Arabia, and Qatar). According to the Korean Ambassador to Qatar HE. Kim Jong-yong (<http://www.korea.net/News>), Korea depends on the Middle East for 80 percent of its energy and for marketing and selling Korean products which he estimates 50 percent of air conditioners and 90 percent of flat-panel TVs. In addition, he iterates that the Middle East has a great potential to grow into a market for Korean luxury goods including expensive car and other sectors such as construction. According to Kim (2007), for example, bilateral relation with Dubai scored an impressive trade volume of almost US\$10 billion in 2005.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are now taking active role in the development boom; one of these is currently building 'Burj Dubai', which will be the world's highest building when completed 162 stories, 800m around, with the goal of completion by the end of 2008. With the current and forecasted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Korea may act as a catalyst in the area of entrepreneurship and SMEs. Spurred by improvements in corporate innovation, market efficiency and financial industry, the latest statistics (31 Oct 07) on global competitiveness ranking reports that Korea jumped 12 notches from last year housing itself in 11th place in 2008.

In addition, Korea is ranked 26th, up from 42nd place in terms of institutions, 16th spot in terms of infrastructure, 8th in terms of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9th in terms of business sophistication. This is very commendable achievement and a marked change from the its economic situation post 1997 crisis. The World Bank then emphasized that Korea needed to create 'a flexible, adaptable,



market-based network economy and creative Society (World Bank, 2000). The World Bank at that time also recommended that Korea changes the government role, promotes competition, entrepreneurship, and deregulate the market in order to unleash the creative energy of individuals and the private sector. Woo and Suh (2007) believe that Korea benefited from its KBE master plan 1999. The plan was a transitional masterpiece which endeavored to make the entire society more suitable for the creation, dissemination, and exploitation of Knowledge. Judging by these assertions and the latest world ranking, it leaves no doubts that a great deal have already been achieved.

This is one strong attribute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innovation experience that Korea has been enjoying. According to local circumstances,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may endeavor to put in place strategic and long term plans in order to establish or enhance their industries and to boost their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This we argue here must take a grass root approach through entrepreneurial education. This is an area that can be developed for a more sustainable and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This should not be understood to be the local markets in these countries per se but also for the Korea market. The base for this argument is that persistent and more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calls for cross-border innovation in order to sustain market position and competitive advantage. Globalization has exposed virtually all national economies to more intense competition than ever before (Mrak, 2002). This was a lesson learned by electronic giant Samsung and many other Korean firms. According to Kim (1998), Korean firms have been meeting increased competition, particularly from Japanese producers that have recovered their competitiveness by investing in low-cost offshore production. Korea has been responding to this by increasing overseas production beyond the ASEAN region.

This we understand to be constituted through a strategic and systematic approach to international trade that glocalises innovation; in a sense starting at a local level to global

level. For example, Korea and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may try to embark on entrepreneurial activities beyond their own locality in a fashion that circulates local mentality for maximum utilization. The days wh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 depended solely on physical presence in maintaining their business operations may have shrunk a great deal or worse; gone forever. Entrepreneurial activity in the form of virtual business is increasing in width and breadth that they may leave many countries in the handicapped legacy of incapability. The power of plastic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etc) seems to capture more business by the hour across many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deologies. Great business such as Amazon.com, Yahoo, and Google generate more income than major countries i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this in mind, the development and wide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uter networks and the internet have transformed the mode of operation of many businesses and at the same time have created unprecedented business opportunities (Choi W, 2007).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Korea have great cooperative potentials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appropriate enterprise culture. This undertaking has no bearings unless it stems from proper entrepreneurial business education. An immediate sector and a candidate for cooperation are information systems. Although Kim (2007) quite rightly assert that Oil has been the only engine of industrialization of the twentieth century of the Modern world, policy makers in international trade will require no convincing that knowledge is the source of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Stakeholders in economies and the academic world have recognized knowledge-based management of enterprise as a mean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Lee and Suh, 2003). In addition, they argue quite rightly that existing knowledge has a limit in its acquisition and application. Knowledge can lose its value unless the source of new knowledge flows in.

An organization has to convert the knowledge of individuals into that of an organization, and it has to create new knowledge by sharing external knowledge.

Korea can exert efforts to help countries establish entrepreneurial education through joint badging and other programs. This will provide many countries a fresher approach after decades of tunneled educational programs. Korea may contemplate establishment of branches of universities in some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or entrepreneurial programs and centers. This human grass-root approach is envisaged to bring people in the two geographical streams much closer, and will identify their relations on more social platforms beyond the boundaries of industry. A more lasting effect of economy and trade comes from the human element, trade and industry will be the eventual and natural byproducts of the process of economic socialization and cooperation.

In addition, Korea can benefit a great deal from many capable individuals in many fields. For example, indigenous marketing experts can help make Korean products more competitive in the region. These specialists are much closer to local markets and many have done research that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part of their academic endeavors. Korea may also benefit from other experts in areas of operation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management, business communication and many others. This is extremely important as discovered by Fadiman (1989) where he points out that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none Western business methods can provide obvious alternatives; much so as argued by (Ricks, 1983) that even the most tested US commercial concepts have periodically proven inefficient. Almoharby and Khatib (2007) support this empirically as they found that culture enters all aspects of social life including economic activities. Furthermore, in order for Korea to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arena, it needs to make more efforts in forging more collaboration by helping other countries enhance their microeconomic capability, particularly in areas of human resources, capital resources, physical infrastructure,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Finally, we suggest establishment of bilateral research agenda to address these issues and others.

## REFERENCES

Ace Z (2003). Entrepreneurial Capitalism: If America Leads will Europe Follow.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0. No. 1, pp. 113-117.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pp. 179-211.

Almaharbi D & Khatib N (2007). Oman's Keritsu, Cultural Money Walks, And The Economy. *Humanomics*. Vol. 23, No. 1, pp. 39-57

Almaharbi D and Choudhry D (2007). Entrepreneurs in Bidbid: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y. (Working Paper).

Almaharbi D & Khan G (2007). Towards Setting up a Center for Entrepreneurship and SMEs in Oman.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IBC Conference, 29-31 Aug 07. Mauritius.

Audretsch D & Keilbach M (2003). In Lawton H, Glasson J, and Chadwick A (2005). The geography of talent: entrepreneurship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Oxfordshire.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Vol. 17, No. 6. pp. 449-478.

Bennett R (2006). Business Lecturers'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Vol. 12, No. 3, pp. 165-188.

Bygrave et al (2001), cited in Thuik R (2003). Entrepreneurship and Unemployment in the UK.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0, No. 3, pp. 264-290.

Bynner J (1998). Education For What? *Education + Training*. Vo. 40, No. 1. pp. 4-5.

Choi W (2007). Industrial information programs in Korea: an overview.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Vol. 35, No. 2, pp. 60-6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3),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Brussels.

Dahlman C and Anderson T (2000). Korea and the Knowledge-based Economy: making the transition. OECD, World Bank Institute. Paris: OECD Publication. pp. 1-8.

Dahlstrand A (2007).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Sweden. European Business Review. Vol. 19, No. 5, pp. 373-386.

Dana L (2001).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Entrepreneurs in Asia. Education + Training. Vol. 43, No. 8/9, pp. 405-415.

Davies T (2001).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 South Africa: redefining the role of tertiary institutions in a reconfigured higher education system. South Afric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15, No. 1, pp. 32-9.

Doucet K (2002). The Benefit of Small Business. CMU Management. Vol.76.No. 1.pp: From the Editor.

Executive Summary (2007). Tough Choices, Tough Times. Washington: National Center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Fadiman J (1989). Should Smaller Firms Use Third World Methods to Enter Third World Markets: the project head as point man overseas. Th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 6. No. 4. pp. 15-26.

Frank H, Korunka C, Lueger M, and Mugler J (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ducation in Austrian Secondary Schools: Status quo and recommend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2 No. 2, pp. 259-273.

Fuller-Love N , Midmore P, and Thomas D, and Henley A (2006). Entrepreneurship and Rural Economic Development: a scenario analysis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Vol. 12. No. 5, pp. 289-305.

Galloway L, Anderson M, Brown W, and Wilson L (2005). Enterprise Skills for the Economy. Education + Training. Vol. 47, No. 1, pp. 7-17.

Gill A & Lashine S (2003). Business Education: A strategic market-oriented Focu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Vol. 17, No. 5, pp. 188-194.

Griffiths N (2004). Why Small Business is a Big Issue. *Caterer & Hotelkeeper*. Vol. 193. No. 4344. pp: 28-30.

Hanns C. Menzel H, Aalti L, and Ulijn J (2007). On the Way to Creativity: Engineers as entrepreneurs in organizations. *Technovation*, In Press, Corrected Proof.

Hart D (2001) in Ace Z (2003). Entrepreneurial Capitalism: If America Leads will Europe Follow.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0. No. 1, pp. 113-117.

Hytti U (2004), in Nurmi P and Paasio K (2007). Entrepreneurship in Finnish Universities. *Education + Training*. Vol. 49 No. 1, pp. 56-66.

Innovations (2007). The New World of Innovation. *Strategic Directions*. Vol. 23, No. 9, pp. 32-35.

Jesselyn and Mitchell (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South Africa: a nationwide survey. *Education + Training*. Vol. 48 No. 5, pp. 348-359.

Khan G & Almaharbi D (2007). Towards Enhancing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 Oman. 4THAGSEConference,6-9Feb07.Brisbane, Australia.

Kim J (2007). Discovery of Arab "DUBAI". *The Dongguk Post*, Dongguk University's English magazine. Edition: 11 Nov 2007.  
<http://www.dgu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48>,accessedon13Nov2007.

Kim Jong-yong(2007).  
[http://www.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70405023&part=111&SearchDay](http://www.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70405023&part=111&SearchDay). (Accessed on 7 Nov 07).

Kim Y (1998).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Samsung Electronic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 in East Asia. *Management Decision*. Vol. 36, No. 8, pp. 517-527.

Kimenyi M and Mbaku N (2003) in Saitoti G (2003). Reflections on African Development.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Vol. XX, No. 2, pp. 13-29.

Kolvereld L & Moen O (1997). Entrepreneurship Among Business Graduates: Does a major in Entrepreneurship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 21, No. 4, pp. 154-160.

Lee C and Naya S (1988). Trade in East Asian Development with Comparative Reference to Southeast Asian Experien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6, pp. 123-52.

Lee H and Suh Y (2003). Knowledge Conversio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of Korean Companie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Journal*. Vol. 9, No. 3, pp. 317-336.

Levenburg N, Lane P, and Schwarz T (2006). Interdisciplinary Dimension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 81, No. 5, pp. 275-281.

Liu S & Dubinsky A (2000).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 A panacea for universities-in-transi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 34 No. 11/12. pp. 1315-1337.

Mahler W (1990). In Müller A (1997). The Creation of a Growth-oriented Societ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4 No. 1/2/3, pp. 178-189.

Mahler W (1990). The Growth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Finance Development*. Vol. 27, No. 21, pp. 41-45.

Melcher R (1998). An Old University Hits the High-tech Road". *Business Week*, 31 August, pp. 94-6.

Mrak, M. (2002), *Globalization: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ountries in Transition*.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Vienna.

Müller A (1997). The Creation of a Growth-oriented Societ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4 No. 1/2/3, pp. 178-189.

Nurmi P and Paasio K (2007). Entrepreneurship in Finnish Universities. *Education + Training*. Vol. 49 No. 1, pp. 56-66.

Poutziouris P, Wang Y, and Chans S (2002). Chinese Entrepreneurship: The development of Small Firm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9, No. 4, pp. 383-399.

Rauch J (1991). Modeling the Informal Sector Formall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5 No. 1, pp. 33-47.

Reeve W (1963). In Müller A (1997). The Creation of a Growth-oriented Societ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4 No. 1/2/3, pp. 178-189.

Ricks D (1983). In Fadiman J (1989). Should Smaller Firms Use Third World Methods to Enter Third World Markets: the project head as point man overseas. *Th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 6. No. 4. pp. 15-26.

Economic Development and Geopolitics: a tale of two reg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32, No. 10, pp. 857-867.

Schumpeter J (2007).

Britannica, <http://www.britannica.com/eb/article-9066242/Joseph-A-Schumpeter> (accessed 25 Oct 07).

Schumpeter J (2007).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Joseph\\_Schumpeter#Summary](http://en.wikipedia.org/wiki/Joseph_Schumpeter#Summary) (accessed 25 Oct 07).

Shapiro D & Watson A (2000). Teaching Idea,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Induce Problem Solving in Schools. *Negotiation Journal*. Vol. 16, No. 2, pp. 183-190.

Souitaris V, Zerbini S, and Al-Laham A (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s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2, No. 4, pp. 566-591.

Thurik R and Wennekers S (2004).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1, No. 1. pp. 140-149.



Tinker T (2004). The End of Business School? More that meets the Eye. Social Text 79, Vol. 22, No. 2, pp. 67-80.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in East A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o C and Suh J (2007). Korea as a Knowledge Economy: evolutionary process and lessons learned. WBI Development Studi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World Bank Institute. Washington: World Bank Publication. pp 47-52.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World Bank (2000). Republic of Korea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Global Competitiveness. (2007).

[http://www.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71101001](http://www.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71101001)

Accessed (8 Nov 07).

Young J (199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Learning for University Students and Practicing Entrepreneurs. In Young J (2000). Entrepreneurship 2000, Chicago: Upstart Publishing.

## II. 개발협력 포커스

1. The Aid Effectiveness Discourse from Paris, to Accra, and Busan: The Rhetoric and the Reality  
(Kenneth King, University of Edinburgh & NORRAG)

2. 한국과 일본의 ODA 결정요인:  
공여국 이해, 수원국 필요, 세계사회의 규범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The Aid Effectiveness Discourse from Paris, to Accra, and Busan: The Rhetoric and the Reality

Kenneth King<sup>1)</sup>

University of Edinburgh & NORRAG

### 국문 요약

올 해 부산에서 있을 제 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은 주최국임과 동시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리고 DAC 회원으로 전환한 중요한 경험을 가진 국가로 참여하게 된다. 독특한 개발 경험을 가진 한국이 이 포럼에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PD) 및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에 드러난 원조 효과성이라는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부산 고위급 회의에서는 그간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에서 선언한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평가를 함에 있어 PD/AAA의 목표 및 지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목표의 지향점이 모든 공여국과 수원국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원조 효과성을 위한 중요한 목표 중 협력(cooperation)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AC외에도 원조를 제공하는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단체 및 개인이 존재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협력보다는 원조를 제공하는 당사자 사이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원조가 제공될 수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sup>1)</sup> Emeritus Professor in the School of Education and of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His research interests have focused on skills development in both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of the economy and on aid policy towards all sub-sectors of education, including higher education.

이런 상황에서 부산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DAC 회원국으로 기존 DAC의 원조 효과성 논의에 대한 헌신을 표명하거나; 둘째,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강조하여 개발 효과성 논의에 기여하거나; 셋째,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입장에서 DAC 회원국이 아닌 다른 공여국들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PD/AAA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부문별 원조, 특히 인적자원개발(HRD)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Since the Rome conference on Harmonisation (2003), the 2005 Paris Declaration (PD) and the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AAA), a very particular language on aid effectiveness has increasingly been incorporated into the discourse of many of the Western donors who are in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ECD. The five key principles of the PD, its 12 indicators, and their respective targets to be achieved by 2010 may be quite widely known in donor circles. But like other elements of the global aid architecture, such a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Targets (IDTs) of 1996, their successor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of 2000, and the Education for All (EFA) Dakar Goals, also of 2000, they are probably much better known in DAC donor circles than in the national ministries of the developing world. It is also entirely possible that they are better known in the traditional DAC donor community than in the large and highly diverse community of what has been termed Non-DAC donors.

These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are certainly well-known in South Korea's (hereafter Korea's) development constituency. Korea was the only Non-DAC donor to participate in the aid industry's monitoring survey on the PD in 2006; it was open to an OECD/DAC peer review of its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08; it offered to host the 4th High Level Forum (HLF4)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 in late November/early December in 2011. And of course, it successfully and uniquely, made the transition from being a Non-DAC donor to a DAC donor in January 2010.

When it was reviewed on its ow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DAC peer review, it turned out to have done well on the dimension of 'building national capacity by coordinated support' but to have done poorly on other DAC criteria such as tied aid and proportion of loans vs. grants in the ODA portfolio.

This short paper is about the multiple challenges that Korea faces as the host of the 4th and last HLF on aid effectiveness. There are a series of issues that will be briefly discussed. To what extent can Korea as a nation that has moved from Non-DAC to DAC donor play a key role in highlighting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Non-DAC donors? Should Korea seek to foreground its own unique experience in making the transition from recipient to DAC donor? Or should it seek to identify a series of commonalities with

other Asian donors, both DAC and Non-DAC, that are relevant to the achievement of the PD principles? Are there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are rated very highly by Korea and other Asian donors but which get short shrift in the formal specifications of the PD?

## I . A status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There are major concerns about where the Paris Declaration has actually reached after more than five years. If we look outside the official website of the OECD/DAC, then it is possible to find in 2011 some very sharp reviews of progress on the PD. For instance, the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GMR) of 2011 has just a short section on the status of the Paris Declaration. It would claim that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on donors using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procurement systems. It asserts that only 1/5 of donor missions to developing countries are jointly coordinated; and there are continuing low levels of aid predictability. Indeed, it asserts that many aid effectiveness targets will simply not be achieved (GMR, 2011: 111). The KOICA/JICA/Brookings supported review also states 'It is safe to say that at least some of the indicators will not be met and that a significant agenda will remain to advance the Paris principles' (Kharas et al. 2010: 12). From several other quarters, there is a need to interrogate why progress has been so poor on the PD/AAA agenda.

Yet there is a vast monitoring and evaluation industry that has been underway since 2005. In the most recent third phase of the monitoring of the achievement of the Paris Declaration no less than 26 recipient countries have been analysed for their progress towards PD/AAA goals; and some five donors have also submitted to evaluations under the Phase II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What does this amount to? The formal results of the third evaluation to be submitted in Busan are not yet publicly available from the consultants (IOD Parc) charged with this review task, but it will doubtless prove difficult for the reviews of country and donor

process on the PD principles to be anything like as negative as the GMR 2011 comments just referred to. Nevertheless, the report on Japan, which was one of the five donors, comments on quite a few initiatives of the Government of Japan that appear to comply with Paris Declaration principles, but admits to a ‘somewhat ambiguous stance’ in relation to the principles of harmonisation and accountability. It admits also that knowledge of the detail of the Paris could be more widely disseminated within the agency; and it comments significantly that on harmonisation there is a tension between a general public in Japan that looks to see aid with a Japanese face (‘visibility and distinctiveness of Japanese aid contributions’), and the PD rhetoric of harmonisation (OECD/DAC, 2010b). Equally, the evaluation of Ghana, amongst the 26 country reports, while acknowledging that modest improvement has been made on the PD principles, also admits to some very major challenges remaining in progressing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How the reports of 26 very different countries and 5 very different agencies will be synthesised therefore remains to be seen,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built-in tendency in reports coming from national cooperation agencies and national governments to report on some positive achievements on the PD/AAA agenda. For instance in the Indonesia workshop on the emerging evaluation findings in December 2010, the word ‘positive’ appeared 10 times, the word ‘negative’ once, and the word ‘mixed’ just three times (OECD/DAC, 2010a)!

## II. The methodological challenge of compliance with PD/AAA

On such a demanding agenda, covering multiple donors, countries, indicators and targets,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re are enormous challenges in assessing progress. For instance, what do some of the most basic terms in the PD discourse really mean? If we take the term ‘alignment’, for instance, is it necessarily a good thing for donor agencies to be aligned with country policies? In the case of the Middle East, for example,



several donors have been ‘aligned’ for decades with governments that have actually been overthrown recently or are being suddenly declared illegitimate. At the more micro level, donors may have developed activities which look like they may be declared examples of ‘programme-based approaches’ (PBA), favoured by the Paris Declaration, but can the evaluations really get inside these claimed PBAs to see whether they still illustrate many of the features of the old project-based approach? There are examples where sector budget support may continue to have elements of the project approach with use of specialist consultants, tied aid etc etc.

A very particular methodological challenge relates to tied aid. A substantial number of donors, both DAC and Non-DAC, give very large importance to the provision of training in the donor country, to the sending of national experts in large number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the support of large-scale volunteer programmes. All of these can be considered tied aid; but in the Paris Declaration, surprisingly, tied aid is not given any target for reduction; all that is said is that ‘there should be continued progress over time’ (OECD/DAC, 2005: 10). Training, scholarships and awards are not mentioned at all in the PD/AAA discourse.

### III. Other approaches to aid futures

At a time in 2011 when elements of aid effectiveness will be reviewed more seriously than almost ever before, there are a number of voices questioning where this PD/AAA should proceed. At one end of the spectrum, there are people like Dambisa Moyo (2009) who, perhaps wisely, makes no mention of the discourse of Paris and Accra in her populist account of Dead Aid. For her, the whole apparatus of the PD/AAA was probably seen to be too specialised and abstruse to be discussed as part of her critique of aid.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there are people like Shafik, the permanent secretary of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of the UK who is also raising major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aid’ (Shafik, 2011).

He sees the PD/AAA agendas as ‘valiant attempts’ to harmonise and coordinate the aid agenda, but he judges that these have not been able to keep pace with the growth of the industry and the proliferation of players (Shafik, 2011: 14). Doubtless, one part of his concern with the need to go beyond PD/AAA has been the awareness of the sheer number of actors involv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would include the private actors which are responsible for \$60bn of aid, the Non-DAC donors \$10bn, multilaterals \$28bn, and the DAC bilaterals \$73bn<sup>2)</sup>. Coordinating this diverse aid world would involve much more than a check on some DAC bilaterals and their recipient countries. Arguably, the DAC donors, around which the Paris and Accra accords were framed, only account now for some 60% of total aid flows, if that (Kharas et al, 2010: 14).

Intriguingly, however, Shafik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n this new and very complex aid environment it may be competition rather than coordination that should drive the agenda. Increasingly, donors are being obliged to show ‘results’ and ‘value for money’. These are likely to lead to an emphasis on an individual donor’s comparative advantage and niche in the complex aid world. The ‘results’ orientation required for so many donors by their own national governments leads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Paris and Accra agendas. Equally, ‘Some of the Paris concepts, such as untying of aid and provision of aid through programmatic means, go against the perceived advantages of new development partners, namely the provision of their own development experiences in a speedy way’ (Kharas et al. 2010: 18).

#### IV. The unique challenge for Korea of Busan

In this very complex situation, Korea has offered to host the 4th and final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Although our earlier comments would suggest that the future of aid is beginning to move on from Paris and Accra, there may still be some considerable additionality to be derived from this HLF4.

<sup>2)</sup> The figures seem very different in the JICA/KOICA/Brookings document: DAC bilaterals: \$122 bn; private actors \$53-75 bn; \$14 bn from emerging economies (Kharas et al. 2010: 9)

On the one hand, Korea could play the OECD/DAC game, and could organise a conference that basically judges recipients and donors against the established criteria of PD/AAA. As a new DAC club member Korea could show its own concern to meet the PD/AAA targets.

A different tack would be to recognise the unique contribution that Korea could make, as a recipient of aid that has made a transition to being a donor, and from being a Non-DAC to a DAC donor. It could seek to present its very particular insights and lessons in moving out of poverty, and point to specific aspects of its own development cooperation history. Much of this might focus on the very particularity and comparative advantage/niche just discussed by Shafik in his 'Future of Aid'.

On the other hand, Korea might well be able to make a much greater impact if it could present itself as speaking along with the Non-DAC donors of which community it was a member until very recently. These donors, which are hugely diverse, cover countries as different as Saudi Arabia, Venezuela, South Africa, Brazil, India and China. They received no attention in the Paris Declaration and just a few sentences in the Accra Agenda for Action. These few lines are rather bizarre, as they suggest that non-interference is a key principle in South-South cooperation. But they emphasise, nevertheless, that the Paris Declaration is the gold standar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e encourage all development actors, including those engaged in South-South co-operation, to use the Paris Declaration principles as a point of reference in providing development co-operation.....

South-South co-operation on development aims to observe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equality among developing partners and respect for their independence, national sovereignty,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and local content.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s a valuable complement to North-South co-operation.....

We acknowledge the contributions made by all development actors, and in particular the role of middle-income countries as both providers and recipients of aid. We recognise the importance and particularities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acknowledge that we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countries. We encourage further development of triangular co-operation. (AAA, 2008: 4)

In Busan, by contrast, there may be a chance for Korea to take the lead in capturing and synthesizing an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is not merely ‘South-South’ as described in the awkward phrases of the AAA above.

Rather, there may b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present an ‘Asian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would underline a number of key approaches, including towards infrastructure, growth, and job creation, that are common to many Asian donors, whether DAC (Japan and Korea) or Non-DAC (China and Malaysia).

At the moment, the PD/AAA discourse says nothing about development sectors, but only about aid modalities. It could be argued, however, that the absence of any substantive discussion of sectors makes it more difficult to consider aid coordination. For example some DAC donors massively support basic education; others provide priority support to post-basic education. These major differences are probably equally evident in other sectors such as health, industry,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In the area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moreover, there are areas of support which are very high priority for Asian Non-DAC donors as well as Asian DAC donors. These would cover overseas training in the donor country, and the use of donor country experts and volunteers as a key element in the transfer of technology. These HRD elements are critical to the sharing of successful development experience. Countries that pay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se elements would include, China, India, Japan, Australia and Korea, to mention just five.

Of course in PD terms, these items are almost certainly regarded as tied aid, and may not reflect well in terms of compliance with PD. But as they are items of high visibility in much Asian aid, it would be valuable to consider them as areas of aid priority, even if, by definition, they cannot be easily coordinated amongst donors. Surprisingly the Paris Declaration discussion of capacity development does not really cover these crucial dimensions of HRD.

Arguably, such HRD elements remain at the very heart of what can be called bilateralism in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haring of unique expertise in development. Rediscovering and re-emphasising the vital contribution of this human el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could be another Busan addition to the aid effectiveness agenda.

## REFERENCES

Accra Agenda for Action (AAA),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Thi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Accra.

Kharas, H., Jung, W., and Makino, K. 2010. Overview: an agenda for the 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Kharas, H., Jung, W., and Makino, K. (Eds) Catalysing development: a new vision for aid. A joint study for preparation of the Busan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supported by KOICA/JICA/Brookings, KOICA, Seoul.

Moyo, D. (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nother way for Africa, Allen Lane, London.

OECD/DAC, 2005.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ECD, Paris.

OECD/DAC, 2010b. Case study of Japan. Final report, December 28th, 2010.

OECD/DAC, 2010a. Summary update briefing. Emerging findings. Core evaluation team. 2 December 2010.

Shafik, M. 2011. The future of aid. DFID Strategy Development Conference, 18.2.2011, DFID, London..

## 한국과 일본의 ODA 결정요인: 공여국 이해, 수원국 필요, 세계사회의 규범

구 정 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II  
개발협력  
포커스

### I. 들어가며

그간 한국의 ODA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까? 어떤 국가들이 주로 한국 ODA의 혜택을 누렸을까? 외교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였을까? 아니면 시장적 가치가 높은 국가였을까? 혹시 민주주의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쓰는 국가들을 배려하지는 않았을까?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써 이에 걸맞은 공적원조 수행을 표방해 온 한국에서 누구나 쉽게 물어 봄직한 질문들이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지난 수십 년 간 ODA를 수행해온 많은 공여국에서 오랜 동안 제기되어 온 것들이고, 세계 학계 역시 이렇듯 간단하지만 깊은 사색과 연구를 요구하는 질문들과 꽤 오랫동안 씨름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에서 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책입안자, 학자, 정치인 모두 마찬가지이다. 올 가을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개발 원조총회”를 앞두고 한국인들은 오히려 상당히 앞서가 있는 느낌이다. “공적원조 배분요인” 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원조의 효과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원조결정 기준 및 요인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방치한 채 원조의 효과성과 씨름하는 것은 ‘기반과목’을 듣지 않고 ‘심화과목’을 수강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각종 정책 보고서를 읽다 보면 한국 원조 수행의 기준에 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명쾌한 답은 어디에도 없다. 2010년 현재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아시아 50%, 아프리카 20%, 중남미 15%, 중동 및 동구·CIS 15%라는

지역별 배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과거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 중구난방으로 ‘뿌려졌던’ 공적원조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재무장하였고 협력대상국에 95% 이상을, 이중 특히 중점협력국에 60%를 그리고 일반협력국에 40%를 집중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아세안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외교 및 반테러정책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조향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준을 검토하다보면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 든다. 과연 중점협력국은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것일까? 일반협력국과 중점협력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별협력국은 과연 왜 만들어진 것일까? 이 모든 분류가 그저 재외공관에 있는 외교관들의 행정편의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카스”라 불리우는 국별지원전략(CAS)이 수립되어 운영된다곤 하지만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왜 특정 국가에, 왜 특정 금액이 지정되는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에는 답하지 않는다.

## II. 한국 ODA 결정요인

이러한 배경에서 저자는 ‘기반과목’의 주요 주제를 다뤄보기로 했다. 즉,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 공적원조 배분이 어떤 기준 및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통계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을 해보기로 한 것이다. 김대욱과 함께 『한국사회학』의 최신호에 게재한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은 이러한 기반과목 탐색의 1차적 성과를 담고 있다.

우선, 이론이 필요했다.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다 보니 원조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미 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집적된 성과도 매우 방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분석의 이론틀과 통계적 방법론이 정교하게 발전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틀은 이랬다. 우선,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수원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원조의 동기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데 합당한 개도국을 원조 수혜의 대상으로 삼고, 이해관계가 깊을수록 더 많은 원조금액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소위, “공여국의 이해” 모델이다.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인간관을 그대

로 국가에 투영시켜서 국가의 행위동기를 설명하려는 대단히 경제학적인 모델이다. 물론 합리적 선택 이론을 옹호하는 정치학자들 역시 이 관점에 동조한다.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공여국의 원조배분 행위가 많은 경우에 이상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공여국들은 대개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원조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본의 지진 피해에 대한 공여국들의 즉각적인 긴급원조 제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여국들은 가난하고, 교육기반이 미비하며, 각종 질병과 싸우는 국가들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원조 공여국들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국가들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필요가 많을수록 자연히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세계학계는 “공여국의 이해” 그리고 “수원국의 필요”라는 이중적 설명모델을 발전시켜 온 셈이다.

그러나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왕에 발전되어 온 이중 모델은 자명한 한계를 안고 있는 듯했다. 우선, 정책행위의 주체를 국가를 중심으로 너무 좁게 바라보는 문제가 있다. 가령, OECD DAC의 경우 자체의 국제규범을 확립하여 이를 공여국들이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민간단체(INGOs)의 경우(가령, Action Aid, Oxfam, Aid Watch 등)도 어떤 국가를 어느 정도로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확립하여 공여국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해왔다. 문화적 글로벌리제이션이 가속화 되면서 TV,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공여론에 힘이 실리고, 원조의 배분도 여론의 엄정한 심사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공여국의 원조 배분도 이러한 세계사회와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한국의 ODA 관련 결정 역시 세계사회의 기준과 원칙에 일정 정도 보조를 함께 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국가의 행위를 세계문화의 영향력에 배태(embedded)된 것으로 보는 “세계정체이론(world polity theory)”을 활용하기로 했고, 한국의 원조행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러한 세계적 모델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탐색해보기로 했다. 또 이 결과의 정책적 함의도 따져보기로 마음먹었다.

연구의 핵심인 종속변수로 한국의 개별 수원국에 대한 연간 양자간 ODA 총액을 고려하였다. 유상과 무상이 그 목적, 대상, 이념 등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험분석 결과 양자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연구의 일반



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무상 원조를 합친 총액을 종속변수로 고려했다. 한국의 ODA 예산 국가별 배분 액수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공신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DAC의 온라인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설명변수가 미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으로부터 ODA를 수령한 경험이 있는 130개 국가를 포함한 총 142개의 국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론적 틀에서 끌어낸 각종 설명 변수들은 우선, “공여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규모, 한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액 등을 활용했다. 즉 무역규모 및 직접투자액이 클 경우 자연히 원조의 규모가 커진다는 가설이다. “수원국의 필요”를 측정하는 변수들로는 수원국의 일인당 GDP, 인권지수(가령 자유지수) 등을 고려하였다. 공여국이 수원국의 필요를 원조금액 결정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활용했다면 GDP가 낮은 국가를 수원국으로 선정하고, 그 규모가 적을수록 많은 원조를 집중했을 거라는 가설이다. 또한 인권의 향상을 수원국의 사회적 필요라고 보고, 인권을 보다 잘 준수하는 국가에 더 많은 ODA를 집중했을 거라는 가설 역시 가능하다.

한편, “세계정체이론”에서 중시하는 세계사회의 유행 혹은 규범이 한국 정부의 ODA 금액 배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국이 여타 공여국으로 받은 총원조액, 수원국의 INGO 가입률 등을 활용하였다. 전자가 전세계 공여국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수원국이 얼마나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고 노력하는 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한국도 여타 공여국들의 원조 패턴을 좇을 것이라는 가설이며, 세계사회에 보다 개방성이 높은 국가들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한편, 2002년 몬테레이 UN 개발재원 국제회의, 2005년 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 등 굵직한 원조관련 국제회의 개최를 전후로 한국 ODA의 금액이 늘었는지도 시간더미 변수의 통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토빗(tobit) 모델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웠다. 우선, 수원국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액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원조금액의 배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 대해 비교적 많은 ODA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국가들의 인권관행은 한국 ODA 배분과 별반 관련이 없었다. 이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한국은 ODA 예산 배분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경제적 이해 증진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인 반면, 인권 증진 등 개도국의 사회적 이해 반영에는 무관심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중요한 원조 관련 세계회의가 있었거나 전 세계적으로 원조 총액이 늘어난 시기에 한국도 ODA 금액을 확대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여타 공여국들로 부터 ODA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국가들에 대해 한국도 원조를 집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수원국의 국제사회 편입 정도를 보여주는 INGO 가입률은 한국의 ODA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도 세계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도외시 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 III. 일본의 ODA 결정요인

저자가 『한국사회학』을 통해 소개한 한국 사례 분석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따져 보기 전에 이웃국이자 ODA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 분석의 결과를 잠시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전후 배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경우로 알려져 있다. 한국 보다 49년 앞선 1960년에 OECD DAC의 회원국이 되었고, 1980년 후반에는 미국을 제치고 원조규모 1위를 기록하여 원조 수퍼파워로도 불리었던 나라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 불황, 엔화 약세, 국민적 지지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원조 선진국으로써의 위상에 걸맞게 일본 원조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가 있었다. 기반연구에 해당하는 일본 ODA 배분의 기준과 조건에 관한 연구 역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창출과 수출 증대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이러한 목표에 공적원조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미국의 원조패턴을 유사하게 모방한 사례로도 꼽고 있으며, 한편 90년대 이후로는 인권 등 수원국의 사회적 필요에도 일정 정도 부응한 사례로도 인용하고 있다.

유사한 연구 설계를 활용했다. DAC의 온라인 통계시스템을 참고하여 일본이 그간 원조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명단을 추리고 이 각각의 국가에 시계열 별로 얼마의 ODA를 제공했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한국과의 차이는 분석

기간이 한국에 비해 29년이 앞선 1960년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개별 수원국에 대한 연간 양자간 ODA 총액이 종속변수로 활용되었고, 한국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일본 버전을 설명 혹은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수원국을 중심으로 총 144개의 국가가 토빗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기존의 일본 ODA 배분 조건 연구의 결과와 상당한 정도로 일치했다. 수원국과의 무역관계 그리고 직접투자 관계가 일본 ODA 배분에 핵심적인 고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이해 관계는 상당 정도 아시아 지역을 매개로 관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모델에서 “공여국의 이해” 변수의 영향력이 견고했다. 이는 일본의 ODA가 지나치게 자국 기업중심 그리고 자원 확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비판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국이 ODA를 많이 제공한 국가들에 대해서 일본 역시 많은 금액을 제공함이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일본의 원조정책이 미국의 그것을 상당 정도 쫓아가는 패턴이라는 기존의 분석을 재확인 하는 것이었다. 60년대 케네디 행정부가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원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래 미국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분석의 결과는 “수원국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일본의 ODA는 일인당 GDP가 적고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개도국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의 경우 “정치적 테러 지수”와 “자유지수” 모두에서 유사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역시 90년을 경과하면서 일본이 수원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수준을 원조공여의 기준과 연관시키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일본이 세계적 모델 및 추세를 어느 정도로 쫓아 원조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 설명변수들 역시 일본의 ODA와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타 공여국들로부터 ODA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국가들을 원조공여 대상으로 선호했고, 다른 공여국들이 원조규모를 확대했을 때 동시에 그 규모를 확대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한국 분석과는 달리 INGO 가입률이 높아 세계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수원국에 대해 일본은 원조를 통해 이를 보상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일본의 경우 다른 DAC 멤버들에 비해 국제규범 및 관행을 충분히 따르지 않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으나,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 IV. 이론적, 정책적 함의

저자의 경험적 연구가 2011년을 사는 한국인이라면 궁금해 할 물음, 즉 “한국의 ODA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까?”라는 질문에 얼마나 충분한 답을 하고 있는지는 이를 읽는 독자가 평가해야 할 몫이다. 이 연구가 모든 해답을 제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연구가 한국의 ODA 전 기간에 대해 분석한 최초의 계량적 연구라는 점이다. 그만큼 한국 공적원조 공동체는 기초에 취약하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적 관계와 문화를 분석의 중심에 두는 사회학이 기존의 경제학적, 정치학적 분석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공여국 이해 - 수원국 필요”라는 기존의 이론적 틀이 세계사회와 문화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관점에 의해 좀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자평한다. 보다 선진화된 한국의 원조 정책을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전통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본다.

한국과 일본 사례를 포함한 ODA 배분 기준 혹은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수준으로 ODA의 규모를 늘려갈 계획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ODA 배분 기준 (왜 특정 국가에, 왜 특정 금액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단순히 지역별, 국가그룹별 배분 기준이 아니라 특정 국가 수준에서 왜 이 국가를 수원국으로 정했는지, 왜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금액을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 외교공관이 있다는 이유로 ODA 제공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지원이 결정되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때 다른 공여국들의 국가선정, 금액선정 기준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국가선정과 금액선정의 두 단계를 분리해서 결정하는 미국식의 2단계 정책결정 방식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여국 이해”의 추구는 ODA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고, 자국의 이해를 추구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본성상 피할 수 없는 ODA의 목표이다. 사실 원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공여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거리낌 없이 ODA의 목표로 설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와 중동평화 정착의 수단으로,

독일은 전범으로써의 이미지 실추를 만회하려는 외교적 목적으로, 프랑스는 아프리카 구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공여국의 이해라는 기준에 따라 수원국의 명단과 지원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고 단순히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ODA를 자원외교와 결부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한가지의 논리로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공여국들이 이러한 기준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캠페인의 중심에 서고자 했다. 또한 국제 규범이 이러한 집단적 노력을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도 곱씹어 볼만한 대목이다.

또 다른 정책적 함의는 “수원국의 필요” 그 중 특히 사회적 필요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원조를 외교정책의 첨병으로 활용했던 미국 역시 인권의 원칙을 ODA와 연결시키려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현재에도 수원국과 지원액을 결정할 때 해당 개도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을 고려한다. 인권을 외교정책 및 ODA에 반영하려는 케네디, 카터대통령의 선구적인 노력, 민주주의 확산과 ODA를 연결시키고자 한 부시, 클린턴대통령의 구상, 거버넌스와 ODA를 접목시키려 한 부시대통령의 노력, 이 모든 역사적 이니셔티브는 현재의 미국외교정책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상업적 이해를 전면에 내세운 일본 역시 1992년 원조헌장 제정을 계기로 수원국의 인권 준수 노력을 ODA에 연결시키는 정책을 펴왔고, 통계분석 결과 역시 일본이 인권 기준을 ODA 금액 배분에 활용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1995년 10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금 해제를 인권개선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미얀마에 원조 증액을 한 사례는 일본이 어떻게 인권과 ODA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원국에서 DAC의 회원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 한국이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 등의 원칙을 수원국 선정 및 금액 배분에 연결시키는 정책을 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유행 및 추세를 측정하는 설명변수의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어느 정도는 국제적인 추세 및 흐름에 동조해 온 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원조레짐의 기준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의 문제는 2차, 3차의 분석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DAC 그리고 개발 관련 국제민간단체(INGO) 등이 생산해 내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계량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자는 시기별 DAC의 기준 및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각 시기별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의 리스트와 랭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보다 세련된 국제기준의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1990년대의 DAC의 주요 규범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거버넌스, 인권, 여성의 권능화 등이었으며, 2000년대의 주요 규범은 최빈개도국 지원,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위험 축소, 개도국의 주인의식, 상호책임성 등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규범 및 기준은 각 공여국의 ODA 배분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 공여국으로써 한국은 이러한 국제기준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본다. 원조 선진국 일본이 실제로 기여한 것에 비해 저평가 받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제규범과 원조관행을 소홀히 여긴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 ODA를 통한 세계사회의 참여를 “국격제고” 및 DAC 가입에 따른 “가입비”의 지불 등과 같이 도구주의적, 실용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경계해야 한다. 물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원조의 수행이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발생 자체를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단기간의 외교적 이해추구에 골몰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과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넓은 표용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원조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 중장기적으로 한국만의 캐릭터가 형성될 것이며, 이 캐릭터의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정우. 2007. "세계사회와 인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978-2004." 「한국사회학」 41집 제3호.
- 구정우·김대욱. 2011.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한국사회학」 45집 제1호.
- 김은미·김지영·김지현·조혜림. 2010. 「선진원조기관의 DAC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 현황과 KOICA의 대응방향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삼성경제연구소. 2009.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CEO Information」, 11월 11일 (제730호)
- 이경규. 2004.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우리나라의 수원 규모와 분야 효과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이계우, 박지훈. 2007.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한국개발연구」 2007년 II호
- 이재우. 2005.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의 자원배분 결정요인분석", 「수은해외경제」 2005.10
- 이태주. 2003.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선진국 만들기'와 발전 담론", 「비교문화연구」 제9집 1호
- 한국국제협력단. 2009. 「2010년 KOICA 예산(안) 설명자료」. KOICA
- Abrams, Burton A., and Lewis, K. 1993. "Human Rights and the Distribution of US Foreign Aid.", Public Choice 77: 815-821
- Alesina, A., and Dollar, D.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33-63
- Berthelemy, J., and Tichit, A. 2002.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 : A three-dimensional panel analysis" WIDER Discussion Paper, vol. 2002/123.

Boli, John and George Thomas (ed.), 1999. *Constructing World Culture-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Cingranelli, David L. and Thomas E. Pasquarello. 1985. "Human Rights Practices and the Distribution of U.S. Foreign Aid to Latin Americ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539-63.

Furuoka, Fumitaka 2005. "Human Rights Conditionality and Aid Allocation".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Volume 4, issue 2

\_\_\_\_\_2007. "A History of Japan's Foreign Aid Policy: From Physical Capital to Human Capital", MPRA Paper 5654,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Germany.

Gates, Scott and Anke Hoeffler. 2004. "Global Aid Allocation: Are Nordic donors different?", Working paper, Center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Hook, S.W., Zhang, G., 1998. "Japan's aid policy since the Cold War: Rhetoric and reality". *Asian Survey* 38

Katada, S.N., 1997. "Two aid hegemons: Japanese-US interaction and aid allocation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orld Development* 25

Koo, Jeong-Woo and Francisco O. Ramirez. 2009. "National Incorporation of Global Human Rights: Worldwide Adopt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1966-2004." *Social Forces*. 87: 197-216.

Lancaster, Carol. 2006.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chner, Frank J. and John Boli. 2005. *World Culture: Origins and Consequences*. Blackwell Publishing.

Maizels, A. and Nissanke, M. K., 1984. "Motivations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12

McGillivray, Mark 2003. "Modelling aid allocation: Issues, approaches and results", UNU-WIDER Research Paper DP 2003/49



McKinlay, R. and R. D. Little. 1977. "A Foreign Policy Model of US Bilateral Aid Allocation." *World Politics* 30: 58-86

Meyer, John W., John Boli, George M. Thomas, and Francisco O. Ramirez. 1997. "World Society and Nation-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144-81.

Neumayer, E., 2003. "Is respect for human rights rewarded?" An analysis of tot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flows. *Human Rights Quarterly* 25, 510-27.

Okuizumi, Kaoru. 1995. "Implementing the ODA Charter: Prospects for Linking Japanese Economic Assistance and Human Right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tics*, Vol. 27

Poe, S. C. 1992, "Human Rights and Economic Aid Under Ronald Reagan and Jimmy Carte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 147-167.

Riddell, Roger. 2007.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Schraeder P. J., Hook S. W., Taylor B., 1998. "Clarifying the Foreign Aid Puzzle: A Comparison of American, Japanese, French, and Swedish Aid Flows.", *World Politics* 50

Soh, Chang-Rok. 2010. "Theoretical Considerations Why Countries Provide Development Aid,"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15, No.1.

Stein, H., 1998. "Japanese aid to Africa: Patterns, motivation and the role of structural adjustment.",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5, 27-53

Tuman, J.P., Ayoub, A.S., 2004. "The determinants of Japane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Africa: A pooled time series analysi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0: 45-57

Tuman, J.P., Strand, J.R., 2006. "The role of mercantilism, humanitarianism, and gaiatsu in Japan's ODA programme in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6

### Ⅲ. 개발협력 분석자료

1. 2010년 DAC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2. 대륙적 관점에서 본 콩고민주공화국 인프라
3. “DAC 언타이드 권고” 이행현황과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확대 계획
4. MDGs Goal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현황



## 2010년 DAC ODA 잠정통계 주요 내용

우 빈 나

한국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 I. 잠정통계 개요

2010년,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상 DAC)에 가입한 이후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009년 대비 25.7% 증가하여 DAC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2005년 대비 56%가 증가하는 등 여타 DAC 회원국들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ODA 통계 작성기관으로서 2011년 2월부터 각 공공기관의 2010년 ODA 실적(잠정)을 취합하여 3월 중 OECD 앞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DAC은 회원국들의 자료를 취합하여 지난 4월 6일 “2010년도 ODA 실적에 대한 잠정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동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및 DAC 회원국들의 2010년도 ODA 실적에 대해 분석·정리해보고자 한다.

### II. 2010년 우리나라의 ODA 현황

2010년 우리나라의 ODA 실적은 순지출 기준으로 2009년 816백만불에서 43.1%로 대폭 증가한 1,16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원화 금액 실적은 2010년 13,492억원으로 2009년 10,396억원에서 29.8% 증가하였다. 2009년 불변가격·환율기준으로는 원화기준 전년대비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기준 증가율에 비해 원화기준 증가율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이유는 DAC의 적용환율<sup>1)</sup>(원/달러)이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달러기준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명목국민소득(GNI)이 전년보다 크게(21%)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DA 규모의 대폭 증가로 인해 명목국민소득(GNI) 대비 ODA 규모(ODA/GNI 비율)는 2009년 0.10%에서 2010년 0.12%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 2010년 우리나라 ODA 현황(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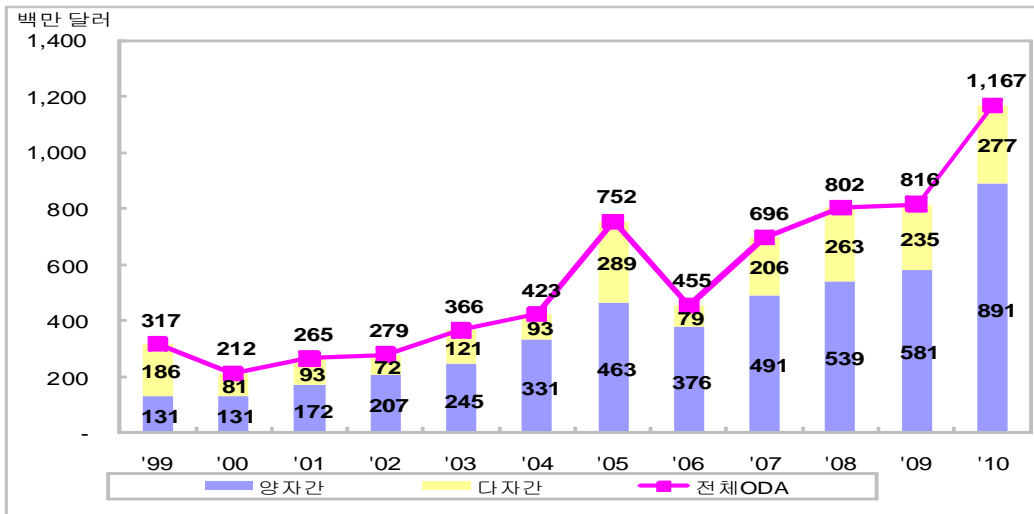
구 성 항 목	2009	2010	증감		비중(%)
			금액	비율(%)	
양자간 ODA (A)	581.1	890.5	+309.4	53.3	76.3
무상협력	367.0	566.8	+199.8	54.5	양자 중: 63.6
(KOICA)	(272.8)	(446.8)	+174.0	63.8	(무상 중: 78.8)
양허성차관(EDCF)	214.1	323.7	+109.6	51.2	양자 중: 36.4
다자간 ODA (B)	234.9	277.2	+42.3	18.0	23.7
(한국은행)	(153.7)	(143.8)	△9.9	△6.4	(다자 중: 51.9)
ODA (A+B)	816.0	1,167.7	+351.7	43.1	100.00
GNI	837,241	1,014,584	+177,343	21.2	-
ODA/GNI(%)	0.10	0.12	-	0.02%p	-

## 1. 양자간 원조 (Bilateral ODA)

2010년 양자간 원조는 891백만불로 전년(581백만불) 대비 53.3% 증가하였다. 양자간 원조 중 무상협력은 567백만불로 전년대비 54.5%, 양허성 차관은 324백만불로 전년대비 51.2% 증가하는 등 무상협력 및 양허성 차관이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금년 양자간 원조 중 양허성 차관의 비중은 2009년 36.8%에서 2010년 36.4%로 비슷한 수준이다.

1) OECD DAC은 통계 작성을 위해 사전에 OECD Economic Department에서 제공하는 적용환율을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있다. 2009년 및 2010년 우리나라의 적용환율은 각각 1,273.9원 및 1,155.4원이다.

연도별 우리나라 ODA 지원 추이



가. 원조유형별 현황

DAC 산하 통계작성반(WP-STAT)에서는 통계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조유형 코드를 신설하고 이에 맞춰 통계표(DAC Table)의 항목을 수정한 New Typology를 2010년 ODA 통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행(Lines)에 원조형태(Types of Aid)과 재원형태(Types of Finance)가 혼재되어 있어 행(Lines)에 중복되는 하부 항목들이 존재하였으나, New Typology에서는 행(Lines)에 원조형태, 열(Columns)에 재원형태를 배치하여 분류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잠정통계 조희 양식도 바뀌어서 양자간 ODA 전체 금액을 원조유형별로 분류하고, 무상협력 및 양허성 차관은 하부 항목 없이 총액만 나타내었다.

양자간 원조 891백만불을 구성하고 있는 원조유형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유형의 비중이 67%로 가장 크며,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협력 20%, 행정비용 3.7%, 국내 NGO 지원 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프로젝트 유형 원조가 전년대비 대폭 (261백만불, 78.8% 증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KOICA 및 EDCF 각각 123백만불, 109.6백만불이 늘어난 데에 따른다. KOICA의 양자간 ODA 규모 중 프로젝트 유형 비중이 2009년 39%에서 2010년 56%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양자간 원조의 원조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금액	비중
양자간 ODA	890.57	100
예산 지원 (Budget support)	-	-
국내 NGO 및 민관 파트너십 지원 (Core support to national NGOs and other private bodies)	18.51	2
프로젝트 원조(Project-type interventions)	592.84	67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협력 (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	181.08	20
채무구제 (Debt relief grants)	-	-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33.11	3.7

#### 나. 무상협력 (Grants)

2010년 무상협력 실적은 전년대비 54.4% 증가하여 567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양자간 원조의 63.6%를 구성하고 있다. 무상협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조유형은 프로젝트 원조(49.7%)이며, 그 다음은 세미나·워크숍 개최, 개발 조사, 리서치 등 기타 기술협력(16%),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10%),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10%)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sup>2)</sup>은 17.5백만불로 2009년 17백만불과 비슷한 수준이며, 2009년에는 긴급 식량 원조가 47%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하여, 2010년은 아이티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물자 및 현금지원, 자원봉사단 파견 등 긴급 구호 원조의 비중이 59%로 가장 높았다.

기관별 무상협력 실적을 분석해보면, KOICA가 전체 무상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2010년 78.8%로 전년(74.3%)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OICA의 무상협력 실적은 전년보다 174백만불이 증가하여 대폭 늘어났고, 기타 기관의 실적 또한 25.8백만불이 증가하였다. 기타 기관 중 무상협력 실적이 증가한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각각

2) OECD DAC 통계의 CRS 목적코드가 70000번대(인도적 지원)인 사업을 기준으로 실적 산정

전년보다 7.8백만불, 4.9백만불, 3.9백만불 증가하였으며, 일부 기관(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도 대부분 무상협력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상협력의 원조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금액	비중
프로젝트 원조	281.7	49.7
기타 기술협력	91.4	16.1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58.0	10.2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57.8	10.2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	33.1	5.8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21.4	3.8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지원	18.5	3.3
개발에 대한 인식 증진	5.0	0.9
합계	566.8	100.0

#### 다.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s)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양허성 차관으로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A 자금이다. EDCF의 승인 실적은 1999년 213백만불에서 2010년 1,104백만불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 집행 실적은 순지출 기준 324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 214백만불 대비 51.2%가 상승하였다. 전체 양자간 원조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6.8%에서 2010년 36.4%로 비슷한 수준이다. 양허성 차관의 큰 증가는 2007년 이후 양허성 차관의 승인 규모가 꾸준히 증가<sup>3)</sup>하면서 그 효과가 2~3년 후 집행 실적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승인 규모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집행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DCF는 1987년 설립 이래로 2010년까지 모두 46개국 수원국에 대해 25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적 승인 규모는 6조 9,341억원에 이르고 있다.

3) EDCF 승인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2004년까지 1,600억원대로 승인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이후 승인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EDCF 연도별 승인·집행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승 인	집 행	
2005	3,365	1,643	
2006	3,908	1,361	
2007	6,427	1,553	
2008	10,626	2,371	
2009	12,358	3,128	
2010	12,476	4,107	

### 라. 지리적 배분

2010년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125백만불로 전년(95백만불)보다 32% 증가하였으나, 양자간 원조 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6.3%에서 2010년 14%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 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배분된 원조 규모는 102백만불로 전년(75백만불)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에 대한 지원 규모는 DAC 잠정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201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그룹별로는 최빈개도국(LDCs)에 대해 전체 양자간 원조의 37.1%인 330백만불이 배분되었으며, 이는 전년(161백만불)대비 105% 증가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각각 전년 24백만불 및 7백만불에서 94백만불 및 12백만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 2. 다자간 원조 (Multilateral ODA)

2010년 다자간 원조는 2009년 235백만불에서 18% 증가한 27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UN기구에 대한 출연 증가(21백만불) 및 세계은행그룹에 대한 출연·출자(22백만불) 증가가 다자간 원조 증가의 주요인이었다.

다자 기구별로 세분화해보면, IDA·IBRD 등 세계은행그룹에 대한 출연 및 출자 규모가 115백만불로 가장 크며, UN기구 77백만불, 지역개발은행(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67백만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 순으로는 UN 기구가 전년대비 39% 증가하면서 가장 높았으며, 세계은행 그룹도 24%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은행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UN기구 중 IAEA, WHO, UNDPKO에 대한 출연이 전년대비 각각 9백만불, 6백만불, 4백만불 증가하였고, 세계은행그룹 중 IBRD에 대한 출연이 14백만불, IDA에 대한 출자가 7백만불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부터 다자 기구에 대해 양허성 차관을 지원한 바 없으며,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양허성 차관도 모두 회수하였다.

#### 다자간 원조 현황

(단위: 순지출 기준, 백만불)

구분	2009			2010		
	출연	출자	합계	출연	출자	합계
UN	55.80	-	55.80	77.32	-	77.32
세계은행	21.90	71.31	93.21	35.99	79.10	115.10
지역개발은행	55.93	12.79	68.72	47.10	19.41	66.51
기타 다자기구	17.20	-	17.20	18.25	-	18.25
합계	150.83	84.1	234.94	178.66	98.51	277.17

### Ⅲ. 2010년 DAC 회원국의 잠정통계 주요 내용

#### 1. 전반적인 평가

2010년 DAC 회원국의 ODA 실적은 1,287억불(순지출, 명목기준)로 전년(1,198억불) 대비 6.5%가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DAC 회원국의 ODA/GNI 평균비율도 1992년 이후 최고 수준인 0.32%를 기록하였다.

채무구제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양자간 원조(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원조, 기술 협력)는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양허성 차관의 증가율(13.2%)이 무상협력(6.8%)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AC 회원국은 아프리카에 대해 전년대비 3.6% 증가한 293억불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사하라 이남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265억불이었다. 그러나, 채무구제로 인한 ODA 증가분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0.1% 감소, 사하라 이남에 대한 지원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DAC 회원국별 ODA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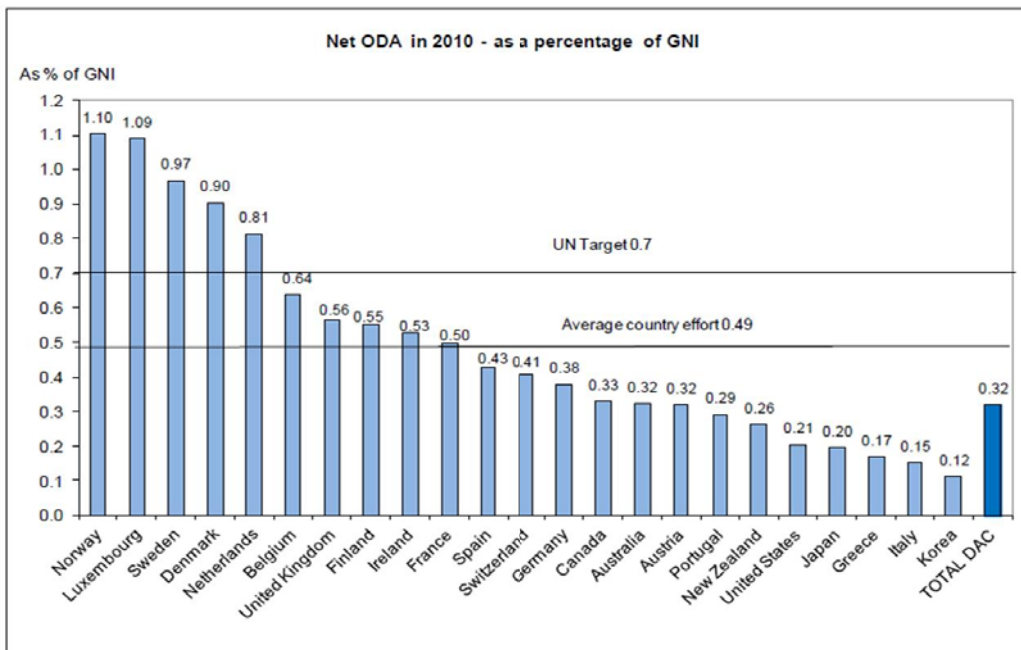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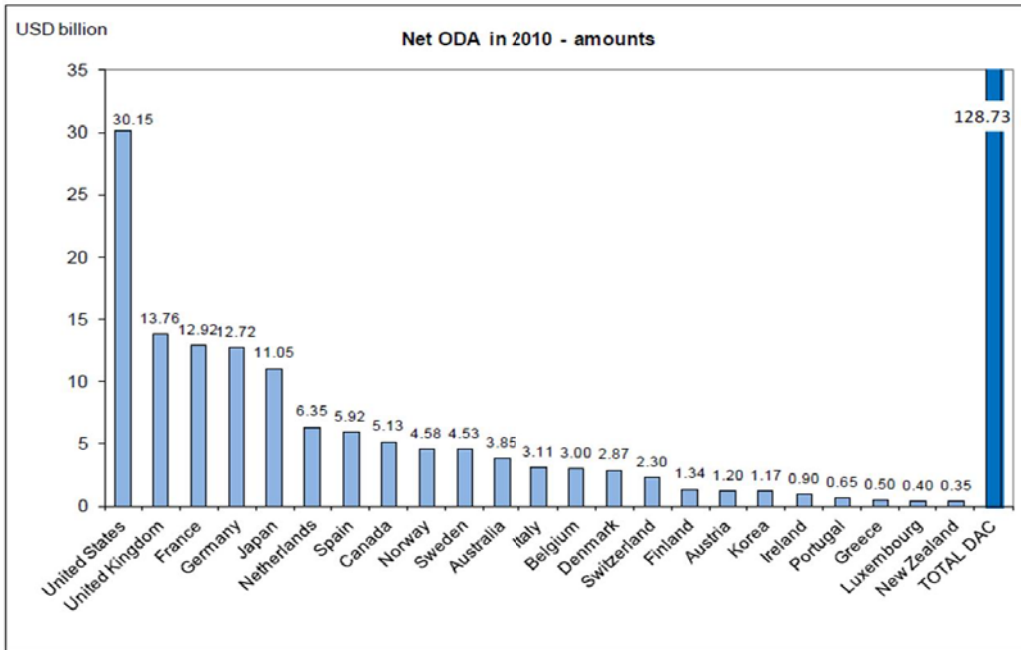
2010년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지원한 5대 공여국은 미국(302억불), 영국(138억불), 프랑스(129억불), 독일(127억불), 일본(110억불)으로 나타났다. UN의 목표인 ODA/GNI 0.7%를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1.10), 룩셈부르크(1.09), 스웨덴(0.97), 덴마크(0.9%), 네덜란드(0.81) 5개 국가이다.

전년대비 ODA 실적 증가율(실질 기준)은 포르투갈(31.5%), 한국(25.7%), 영국(19.4%), 벨기에(19.1%), 캐나다(12.7%), 호주(12.1%), 일본(1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ODA 규모는 11.7억불로 32개 OECD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0.12%로 27위를 기록하였다.

미국은 총 302억불의 원조를 시행한 최대 공여국으로서, 이는 전년보다 3.5% 증가(실질 기준)한 규모이며, 이는 단일 국가로서 최대 지원규모이다. ODA/GNI 비율은 전년과 같이 0.21%를 기록하였다. 양자간 원조 중 특히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16.2% 증가한 94억불로 기록적인 규모이다. 이는 주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아이티에 대한 지원이 11억불로 전년대비 241%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 외에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 실적 또한 14억불로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다.

DAC 회원국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15개 EU 국가들의 ODA 규모는 전년보다 6.7% 증가한 702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DAC 회원국 ODA 규모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DAC-EU 국가들의 평균 ODA/GNI 비율은 전년 0.44%에서 올해 0.46%로 증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인 0.3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0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및 ODA/GNI 비율



출처 : ODA in 2010, OECD DAC

15개 DAC-EU 국가들 중 ODA 규모가 증가한 국가는 포르투갈, 영국,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등 9개 국가로, 대부분 양자간 원조의 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전례 없는 재정악화로 원조 규모가 16.2% 감소하였으며,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의 경우도 예산 부족으로 각각 5.9% 및 4.9% 감소하였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은 양허성 차관 증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은 무상협력 증가, 오스트리아 등은 채무탕감 때문인 것으로 DAC은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원조 규모는 전년대비 11.8% 증가(실질 기준)한 110억불을 기록하였고, ODA/GNI 비율 또한 작년 0.18%에서 올해 0.20%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최빈국 앞 양자간 무상협력과 세계은행 앞 출연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전년대비 25.7%(실질 기준) 증가한 11.7억불이며 DAC 회원국 중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Non-DAC 국가 중에 터키의 원조 규모가 전년대비 23.8% 증가한 9.7억불을 기록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3. 원조확대 공약 이행 결과

2005년 Gleneagles (G8) 정상 회담 및 여러 회의에서 공여국들은 원조 확대 공약 (commitment)<sup>4)</sup>을 표명한 바 있다. 여러 공약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800억에서 1,300억불이 증가되어야 한다(2004년 물가 기준).

15개 DAC-EU 회원국들은 2010년까지 ODA/GNI 비율 0.51%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등 6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들은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미국은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이남에 대한 지원을 두 배 증가시키기로 하였고, 2009년에 이미 이를 달성하였다. 캐나다는 ODA 규모를 2001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고, 호주는 40억불 규모를 지원하기로 계획하여 이를 달성하였다. 노르웨이는 목표로 했던 ODA/GNI 비율 1%를 초과하였고, 스위스는 0.41%를 달성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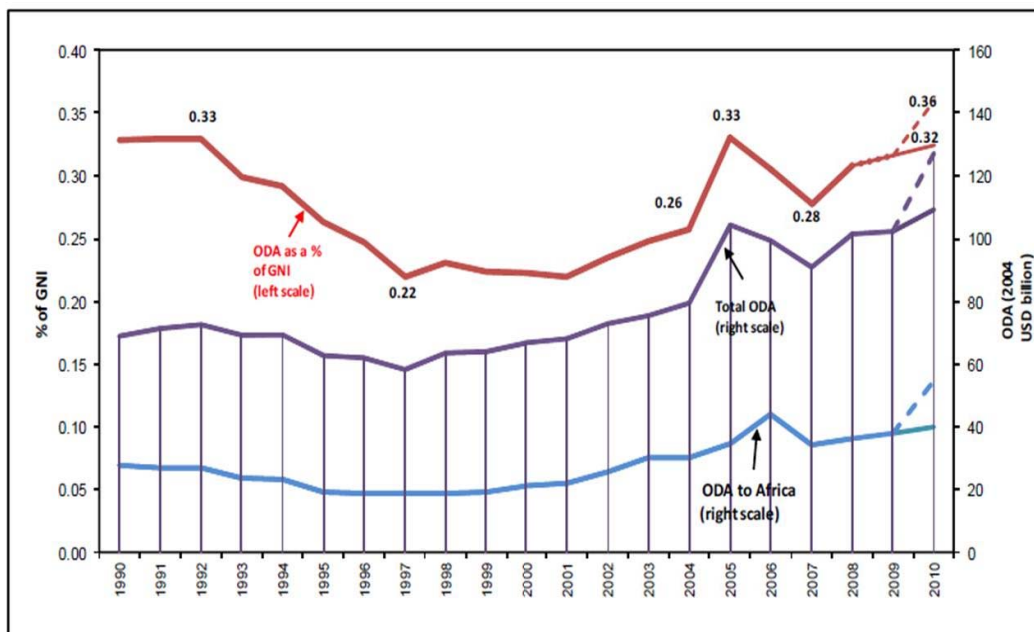
4) 2005년 Gleneagles G8 정상회담에서 공여국들은 MDG 달성을 위한 ODA 확대를 공약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 2010년까지 연간 250억불 규모의 ODA 확대를 약속하였다.

일본은 G8 Gleneagles 정상 회담에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ODA를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10년 일본의 ODA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당시 DAC 회원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원조 확대에 대해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ODA 지원 규모가 2005년 이래 56%가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공여국들의 실적을 종합해볼 때 ODA 규모는 실질 기준으로 2004년 대비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약 300억불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0년과 2005년 실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약 상의 목표 대비 약 190억불이 부족하다. 부족금액 중 약 10억불은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180억불은 공여국들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Gleneagles 정상 회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250억불까지 늘리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지원 규모는 110억불이었다. 이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공여국들의 실적 부진 때문이었다.

1990년~2010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및 ODA/GNI 비율주



출처 : ODA in 2010, OECD DAC

주) 실선 : 실제 규모,

점선 : Gleneagles 공약의 목표치

원조 확대에 대한 공약의 명확성, 현실성,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DAC에서는 공약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n Good Pledging Practice)를 마련하였다. 이는 공약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4. Aid beyond 2010

OECD는 최근 ODA(양자 및 다자지원) 관련 공여국들의 2013년까지 향후지출계획(Forward Spending Plan)에 대한 설문문을 완료하였다. 동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적 지원, 채무구제 등을 제외한 ODA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인 8%를 크게 밑도는 2%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저소득국 앞 ODA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설문 결과 향후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 수준으로 예상되어, 저소득국의 인구 증가에 맞춰 적절한 원조 규모가 뒷받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ODA/GNI 비율을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를 달성한다는 중기 ODA 확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말 DAC 가입 후 ODA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ODA 선진화 계획, 2011~2015년 기본계획, 2011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ODA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통합 국별 지원전략 수립 및 운용, 개발경험공유, 언타이드 확대, 대외협력 강화,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등이 있다.

2011년 3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ODA 실적은 전년 1.3조원에서 1.6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로 우리나라는 ODA 증가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0년 OECD 회원국의 ODA 실적

(단위: 백만불, %)

OECD	국가	2010년도(잠정)		2009년도	
		ODA	ODA/GNI	ODA	ODA/GNI
DAC 회원국	미국	30,154	0.21	28,831	0.21
	영국	13,763	0.56	11,283	0.51
	프랑스	12,916	0.50	12,600	0.47
	독일	12,723	0.38	12,079	0.35
	일본	11,045	0.20	9,457	0.18
	네덜란드	6,351	0.81	6,426	0.82
	스페인	5,917	0.43	6,584	0.46
	캐나다	5,132	0.33	4,000	0.30
	노르웨이	4,582	1.10	4,086	1.06
	스웨덴	4,527	0.97	4,548	1.12
	호주	3,849	0.32	2,762	0.29
	이탈리아	3,111	0.15	3,297	0.16
	벨기에	3,000	0.64	2,610	0.55
	덴마크	2,867	0.90	2,810	0.88
	스위스	2,295	0.41	2,310	0.45
	핀란드	1,335	0.55	1,290	0.54
	오스트리아	1,199	0.32	1,142	0.30
	한국	1,168	0.12	816	0.10
	아일랜드	895	0.53	1,006	0.54
	포르투갈	648	0.29	513	0.23
	그리스	500	0.17	607	0.19
	룩셈부르크	399	1.09	415	1.04
	뉴질랜드	353	0.26	309	0.28
	DAC전체	128,728	0.32	119,781	0.31
DAC 비회원국	터키	967	0.13	707	0.11
	폴란드	378	0.08	375	0.09
	체코	224	0.12	215	0.12
	이스라엘	141	0.07	124	0.06
	헝가리	113	0.09	117	0.10
	슬로바키아	74	0.09	75	0.09
	슬로베니아	63	0.13	71	0.15
	아이슬란드	29	0.28	35	0.35
	에스토니아	18	0.10	18	0.10

출처: ODA in 2010, OECD DAC





## 대륙적 관점에서 본 콩고민주공화국의 인프라

양 현 식

한국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 I. 들어가며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인프라 상황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계속된 내전의 결과로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성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었으며, DR콩고에 현존하는 인프라 자산의 절반은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내전이 전에도 기초 인프라 부족은 DR콩고의 이질적인 경제 및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는바 DR콩고의 방대한 국토, 낮은 인구밀도, 넓은 삼림, 십자형의 강은 인프라 네트워크 개발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문제는 2003년 DR콩고 종전 이후 다소나마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민간 GSM 통신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총인구 2/3 이상에 보급되고 도로망 개보수를 위한 상당한 재원이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항공기 현대화 뿐 아니라 국내항공편의 취항편수 증가도 목격되고 있다. 또한 DR콩고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도 내항성(耐航性)개선 가능한 내륙 수로는 저렴한 ‘노면교통’(surface transport)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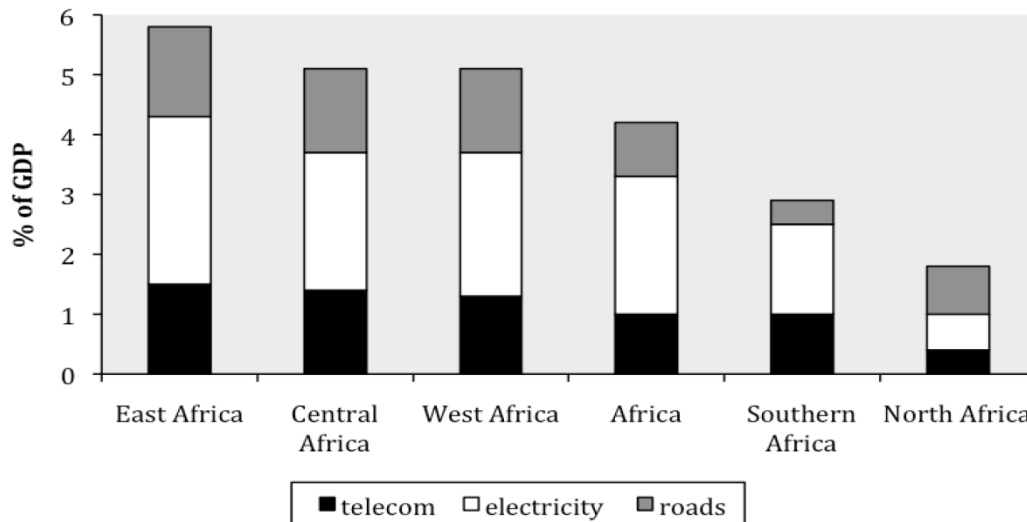
현재 DR콩고의 가장 시급한 인프라 과제는 전력생산용량 증설과 송전 비용 절감이다. DR콩고 발전소의 절반은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하며,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06년~2015년 전력생산 용량은 35%이상 증가되어야 한다. 도로와 철도 인프라 또한 열악한 수준인바 현재 철도망은 거의 사용불가한 수준이며, DR콩고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도로투자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약이 필수적이다.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DR콩고는 국가 재건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매년 5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2006 GDP의 75%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 중에서 비효율 개선, 최적 인프라 기술 사용 및 창의적 국외 자원 사용으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매우고 신규 재원을 개선된 정책 및 제도 환경과 결합시킨다면 인프라 투자재원부족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II. 왜 인프라가 중요한가

2001년~2005년 동안 DR콩고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1995년보다 평균 2.1%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초 4%~8%의 성장수준은 M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7% 성장’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통신 인프라’ 향상으로 경제성장률의 1.1%p를 담당하였다. 반면 ‘전력 인프라’ 결합은 같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을 0.25%p 감소시켰는바, 시뮬레이션 결과 중앙 아프리카의 인프라 플랫폼이 아프리카 최상위권인 모리셔스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경제성장률은 매년 5%이상 증가 가능하고, 이중 절반은 ‘전력부문’ 향상에 의거한 것이다.

인프라 향상에 따른 1인당 잠재 경제성장률



사하라 이남지역에 진출한 기업앞 설문조사 결과 인프라 제약이 생산성 저하 요인 중 40%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거버넌스, 관료주의 및 재무적 제약이 그 뒤를 이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전력공급 불량은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큰 제약으로 DR콩고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없으나 추정컨대 전력은 주요 제약요인으로 꼽힐 것이다.

### Ⅲ. DR콩고 인프라 현황

DR콩고의 인구와 경제활동은 남서부에 수도인 킌샤사, 남동부의 루뎀바시 및 북동부의 키산가니 등 삼각형을 이루는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고, 이 세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는 도로와 철도 등이 특히 열악하다. 이 중 전력과 ICT 인프라는 킌샤사~루뎀바시 축으로는 다소 발달되어 있으나, 이 또한 광통신 네트워크 부재와 주전력 송전망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GSM이 동부지역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지역은 전력과 ICT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DR콩고의 남동부와 북동부지역은 국내보다는 인접국가 인프라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 표에 서술된 DR콩고의 인프라에 대해 전력, 도로 및 ICT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DR콩고 인프라 부문별 성과 및 목표

분야	성과	목표
항공	국내선 증편 및 항공기 현대화	질 낮은 항공수송안전실적 향상을 위한 규제 강화
ICT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GSM 수신기반 확충	해저케이블 연결을 통한 휴대전화 송수신지역 확대
항구	Kinshasa의 배후항구로서의 Matadi항 상용화	Matadi항 서비스 개선(단기), 심해항 확보(장기)
전력	낮은 단가의 방대한 수자원 및 향후 전력 수출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전력생산에 막대한 투자, 전력운용개선
철도	목재 및 광물 수출지원을 위한 전략적 철도망 신설	도로수송으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되찾기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질 개선
도로	도로망 재건을 위한 외부 자원활용	도로망 유지, 교역에 대한 규제 현대화, 하천수송에 대한 시각전환
상수도/ 위생	재래식 화장실 개선	식수 및 위생 향상, 상수도 이용 향상

## 1. 전력

DR콩고는 콩고 강의 잉가(Inga) 폭포에서 나오는 방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비용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국가로, 잠재적으로 100,000mW(메가와트) 전력이 생산가능한데, 현재 사하라이남 국가 전체의 발전용량이 48,000mW인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DR콩고의 발전의 장기한계비용은 1.4¢/kWh로서 에티오피아의 6.9¢/kWh, 기니의 5.8¢/kWh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DR콩고는 이미 잠비아, 짐바브웨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상당량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데, 만약 DR콩고의 수자원이 완전히 개발된다면 이를 남부아프리카 전력공동체(SAPP)의 51.9TWh(테라와트시)만큼 수출하여 앙골라, 짐바브웨, 모잠비크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남부아프리카전력공동체 전력 공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kWh당 1¢의 순이익 발생으로 DR콩고 GDP의 5% 이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DR콩고의 잠재발전용량 100,000mW 중 개발된 발전용량은 2,540mW에 그치고, 이마저도 1,100mW만 작동가능하다. 또한 DR콩고에는 잉가 지역에서 수도인 킨샤사와 브라자빌을 거쳐 잠비아로 연결되는 서남권 전력선과 키부주에서 르완다와 부룬디로 연결되는 북동부 전력선 등 두 개의 주요 전력선이 있으나 모두 광범위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 결과 전력공급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전의 위험 때문에 민간부문 생산활동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는데, DR콩고의 기업 중 약 40%가 자가발전기를 운용하여 빈번한 정전에 대비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생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발전과 송신용량 증설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10년 동안 증가하는 국내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전면 개보수와 이에 더해서 발전용량을 35% 증설하는 등 총 3,000mW의 전력이 필요하다. 또한 DR콩고가 전력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7,600mW의 용량증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7.5억불이 소요되며 이는 GDP의 8.8%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게다가 DR콩고 전력청(SNEL : Societe Nationale d'Electricite)의 취약한 재무성과는 대규모 자산 손실로 이어졌으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 전력회사와 비교하더라도 비효율적인 DR콩고 전력청은 배전 손실률의 최우수 벤치마크가 12%일 때 40%를 기록하였으며, 전기요금 청구액의 40% 가량만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DR콩고 정부와 정부기관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결과 전력청은 수익의 595%라는 예외적으로 높은 가격외 비용발생으로 인해 기대수익의 20%만을 수익으로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DR콩고의 관세율이 아프리카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전력분야의 주요기관인 DR콩고 전력청의 취약한 재무성과는 시급한 발전용량 증설에의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잠재적 전력수출국으로서의 전환을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 2. 도로

DR콩고의 도로망은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붕괴되고 국가경제 및 인구밀집지역 간의 도로연결 또한 매우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 종전 이후 도로망 개선은 항상 최우선분야로 간주되었으며 그 결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양/다자 공여주체로부터 도로분야에 자금지원승인을 얻어냈다. 이러한 지원은 동부연결도로 뿐 아니라 킨샤사~루분바시 연결도로 등 주요 구간을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 3,000km에도 못 미쳤던 포장된 도로망은 상당히 개선되어 아프리카 여타 저소득국가와 유사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DR콩고의 도로망은 30,000km 이상의 비포장도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 42%만이 '괜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DR콩고는 서유럽과 유사한 넓이의 방대한 국토, 낮은 인구밀도, 광범위한 하천 지류 등으로 도로망 개발이 특히 어렵고 국토가 열대림과 십자형의 강으로 이루어져 도로 건설시 다수의 교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DR콩고는 다른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 비해 낮은 도로망밀도를 기록하고 있다.

도로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로망 재건 뿐 아니라 도로망 개보수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금 창출이다. DR콩고의 현재 주요한 관심은 내전시절 소실된 도로망 재건이지만 이 목적이 완수된다면 재건된 도로망의 개보수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데, DR콩고의 방대한 도로망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수송 인프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만도 매년 4억불이 소요된다. 이 수치는 GDP의 5%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지난 몇 년간 DR콩고의 공공투자 예산의 몇 배이기도 하다. 도로 개보수를 위한 자금 확보 뿐 아니라,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역시 큰 과제인데, 2010년에 ‘도로펀드’의 설립으로 도로망의 ‘지속가능성’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한편 도로를 이용한 DR콩고의 화물수송비 또한 아프리카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수송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육상화물수송비(surface freight haulage)인데, DR콩고의 세부적인 도로화물에 대한 관세자료는 없으나 현존하는 자료에 따르면 DR콩고의 육상화물수송비는 1톤-km당 15 $\text{C}$ 로서 남부아프리카 평균이 5 $\text{C}$ 임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최고 수준이다. 이론적으로 도로 인프라 개선은 수송비 감소와 관세 인하로 이어져야 하지만 중앙아프리카 교역카르텔과 대기번호에 의거 화물을 배정하는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는 수익률에 기반을 둔 가격인상(profit markup)의 요인이 될 뿐, 인프라 개선의 혜택이 낮은 화물관세로 이어져 교역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발전으로 승화되지 못한다. 여기에서 도로 인프라 개선에 있어 도로망 구축의 물질적 인프라 제약 뿐 아니라 교역산업 규제의 틀 개선의 중요성 또한 알 수 있다.

### 3. ICT

압박한 경제적 조건 하에서도, DR콩고는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GSM 수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총인구의 65%가 GSM 수신지역 안에 살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지역의 저소득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네 통신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으로 휴대전화 통화료는 아프리카 기타 지역 및 여타 개도국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DR콩고에서 매출 기준 2위 분야인 휴대전화분야(1위는 광업)에 대한 전화요금 부가세(13%) 부과로 인해 ICT 세금이 세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DR콩고의 광활한 국토특성상 GSM 수신지역 확장은 특히 어려운 과제인데 2006년 연구결과 인구의 80%는 휴대전화 서비스에 상업적 접근이 가능한 수준에 있으나, 나머지 20%는 정부 보조금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극

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가능 큰 것으로, 2010년 휴대전화 사업자간 출혈경쟁으로 통화비는 손익분기점 아래인 분당 40로 낮아지면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수신지역 확대를 중지하고 심지어는 축소하기도 했다.

DR콩고의 인터넷 보급률 및 대역폭 또한 아프리카 기준으로도 극도로 낮은 수준이며, 이 결과 해저케이블과의 연결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매우 높은 이용료(US\$74/월)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DR콩고가 서아프리카 해안의 해저케이블과 연결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해저케이블 연결만 해결된다면 통신인프라는 경쟁적으로 제공되어 이용료 또한 낮아질 것이며 최근 연구결과 대역폭 확장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알려졌다.

#### IV. DR콩고 인프라 파이낸싱

DR콩고의 증가하는 인프라 투자수요 충족과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 목표 설정에 있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비교를 위해 동일한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DR콩고의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목표

분야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
ICT	인접국 및 해저케이블과의 광섬유 연결	GSM 및 공공 광대역(broadband) 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전력	8,400mW급 신규전력용량 증설 (800mW 내수, 7,600mW 수출), 6,000mW 연결자(interconnector)	전력화율 19%로 증가 (38% 도시, 8% 지방)
수송	양질의 2차선(1차선) 포장도로 확보를 통한 지역(전국) 연결망 확보	양질의 경작지에 대한 접근성 80%로 증가 및 도시 도로에 대한 500m내 접근성 향상
상수도/위생	-	MDG 달성



이 구체적 목표에 따르면, DR콩고는 향후 10년 이상동안 매년 52억불 이상 투입이 필요하며, 이중 매년 11억불은 단순한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52억불 중 자본지출(CAPEX)에 투입되는 비용은 80% 이상으로 전력, 수송, 상수도 및 위생 분야에 매년 각각 15억불이상이 소요된다.

### 2006년-2015년 DR콩고의 인프라 소요금액

(단위: 백만불)

분야	CAPEX1)	O&M2)	합계
ICT	246	242	487
전력	1,424	49	1,473
수송	1,082	391	1,474
상수도/위생	1,278	431	1,709
합계	4,045	1,112	5,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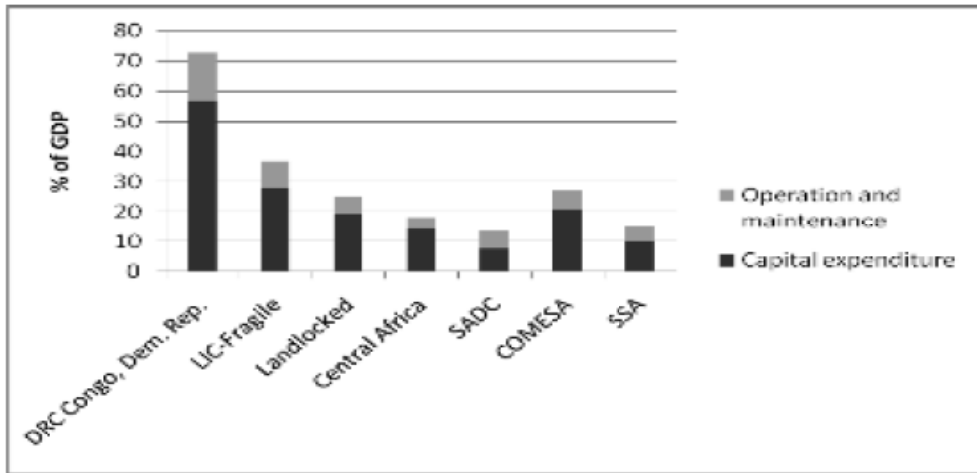
주 1) CAPEX :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2) O&M : 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

이 총 소요금액은 절대적인 수치로도 높지만 GDP와 비교시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DR콩고 인프라 소요금액 52억불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DR콩고의 경제규모와 비교해 볼 때 2006년 GDP의 75%에 육박한다. 이는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큰 인프라 부담수치로서 평균적인 저소득 취약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 중 투자 자체만으로도 GDP의 57%를 차지하는데, 최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프라 투자수치가 중국이 2000년대 중반 기록한 GDP의 15%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 수요에 비추어, 지금 제기해야하는 중요한 질문은 ‘DR콩고가 현재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이다. 비교기준년도인 2006년에는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세부 지출내역은 집계할 수 없었으나, 전력, 수송, 수자원 분야 뿐 아니라 ODA, OECD 및 민간재원에 대한 자료 등으로 추정 가능하며, 자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DR콩고의 인프라투자는 그 수요의 10% 정도만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유형에 따른 인프라 수요 부담



2001년~2006년 DR콩고의 평균 인프라 투자 개요

(단위: 백만불)

분야	O&M		CAPEX				합계
	공공 부문	공공 부문	ODA	Non-OECD	PPI1)/가구 지출	소계	
ICT	0	-2)	0	1	127	128	128
전력	≈ 50	-2)	4	0	0	4	54
수송	300	-2)	55	2	0	57	357
상수도/위생	-2)	-2)	0	0	62	>62	>62
합계	≈ 300	< 100	60	2	188	≈ 350	≈ 700

주 1) PPI : 민간투자(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2) -: 자료 없음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6년까지 DR콩고의 인프라 투자는 매년 7억불 미만의 수준에 그쳐 위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인프라 목표 달성과는 큰 간극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중 1.9억불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통신회사의 휴대전화망 증설 및 개별 가구의 현지위생시설구축 등이 포함된 것인 반면에 OECD/non-OECD국가에서 유입된 인프라 재원은 매년 62백만불 수준에 불과했다. 인프라 분야를 포함해도 전체

적인 공공부문 투자는 2006년에는 1억불 미만이었으며, 2007년~2008년에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매년 7억불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DR콩고 2006년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DR콩고의 인프라 수요 대비 상당히 낮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로 표현되었을 때 10%라는 수치는 사하라 이남 국가의 평균적인 인프라 지출과 유사하다. 하지만 문제는 DR콩고의 인프라 수요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한편, 2006년부터 OECD/non-OECD국가로부터 41억불 규모의 약정이 맺어지면서 DR콩고의 외부재원 조달상황은 크게 호전되었는데, 일례로 2009년 양/다자 ODA는 16억불에 이르렀고 이 중 절반은 도로 사업 위주의 수송 부문에, 나머지 절반은 Inga 발전소 개보수, 남동지역 고전압 송전망 확충 등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었다. 또한, 중국과 도로 및 도시인프라 프로젝트 위주의 30억불 규모의 지원계획이 합의되는 등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포함한 공공부문 투자는 2010년부터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 V. 투자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

2006년 기준으로 DR콩고는 40억불의 인프라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60%에 해당한다. 50억불로 추정되는 인프라 소요액 중 위에서 언급한 7억불은 2006년에 집행되었으나 이중 최소한 4억불은 각종 비효율로 인해 낭비되었다. 이 비효율을 모두 개선하더라도 투자수요와 공급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간극은 상수도 및 위생이고 그 뒤로 수송, 전력, ICT를 꼽을 수 있다.

투자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목표와의 정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적정가격의 기술 도입을 통한 비용조절로서, 이를 통해 14억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수도 및 위생부문에서는 그 동안 도입했던 첨단기술이 아닌 양수기, 시추공, 수세식 화장실 등 저가 시설 도입으로 MDG 목표 충족시 8.3억불이 절약되고, 수송부문에서는 보다 더 실리적인 조합-아스팔트 포장 대신 단면표면

처리기법(single-surface treatment)로, 유지보수도 최고가 아닌 괜찮은 수준-으로 6억불 절약가능하다. 위 사례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지만, 기술수준의 최적화를 통해 예산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DR콩고의 전력수출잠재력 개발을 위한 국외파이낸싱 기법의 신규 도입은 연간 7.5억불 간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DR콩고의 인프라문제는 해결이 요원해 보이지만, 여기에도 희망은 있다. 실제로 DR콩고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심각한 인프라 문제에 직면에 있는데, 인프라 소요금액은 절대적(52억불)으로나 상대적(GDP의 75%)으로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현재 DR콩고의 인프라투자금액이 소요금액의 10%를 간신히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만약 비효율 개선을 통해 4.3억불을 보전해도 40억불의 간극이 여전히 남아있고, 적정한 기술선택과 창의적 국외 자원 사용으로 간극을 20억불로 줄일 수 있으며, 공공투자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 재원을 개선된 정책 및 제도 환경과 결합시킨다면 인프라 투자재원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VI. 시사점

DR콩고의 인프라 투자수요 및 공급의 간극 해소를 위해서는 인프라 효율성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어 그 성과물을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인프라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부문에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효율성 개선만 기다리며 자원 확충을 주저하는 것 또한 경제 성장과 인적자원개발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공여국 또한 추가적인 인프라 재원을 수원국 정부의 효율성과 합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접근성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인프라 사회정책은 ‘차선책’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동안 인프라 확장의 수혜소외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편, 공여국은 수원국앞 ODA지원 관련 채무탕감이나 채무재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자원유입(flow)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2002년~2009년까지 국제사회의 DR콩고앞 연평균 ODA 지원액은 순지출기준 23억불을 기록했으나, 이중 채무탕감이 평균 10억불로 지원액의 44%를 차지하였고, 2003년의 경우 ODA 지원액은 54억불이었으나, 채무 탕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유입은 6억불에 그쳤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프라 간극이나 인프라 자원확보 노력과 동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유입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문헌

Vivien Foster, Daniel Alberto Benitez :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s Infrastructure, A Continental Perspective, The World Bank, African Region,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March, 2011

Vivien Foster, Cecilia Briceno-Garmendia : Africa's Infrastructure, a Time for Transformation,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2010

## “DAC 언타이드 권고” 이행현황과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확대 계획

이 룬 경

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Untied aid is aid that is procured through open international competition."  
Eckhard Deutscher (前 DAC 의장)

### I. 서론

2001년, DAC 회원국들은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한 원조를 비구속화하기로 합의했다. (DAC 언타이드 권고) 이 권고에서 독립적 기술협력 사업과 식량원조는 비구속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한계는 70만 SDR 이하의 사업, 13만 SDR 이하의 투자관련 기술협력이었다. 2006년에는 이러한 한계가 폐지되었고 2008년에는 LDCs를 제외한 고채무빈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까지 해당 권고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2005년 파리선언(PD), 2008년 아크라 행동강령(AAA)까지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는 원조 논의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

원조의 비구속화를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비구속화에 의한 원조 효과성의 증대이다. 구속성 원조는 일반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조달하는데 수원국 측의 비용을 15%~30%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구속성 원조는 각 공여국 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공여국간 협력을 저해하고,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진행,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형성에 방해 요소가 되는 점이 지적되면서 원조의 비구속화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한국 역시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2007년부터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원조 비구속화 현황 및 DAC 언타이드 권고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정리해 보고, 더불어 DAC 회원국의 원조 비구속화 현황 및 DAC 언타이드 권고 달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DAC 회원국들이 언타이드 권고의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현 상황에서 DAC 권고 너머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원조 비구속화 논의의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II. 비구속성(Untied) 원조의 정의 및 범위

DAC 언타이드 권고에 따르면 비구속성 원조는 “상당수의 개발도상국과 OECD 국가들을 전부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자유로이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차관 또는 증여”<sup>1)</sup>를 의미한다. 즉, 원조의 조달이 공개된 국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면 비구속성,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급자들이 제한되는 경우 (많은 경우 공여국의 공급자로만) 구속성 원조라고 한다. DAC 언타이드 권고에 의해 비구속성 원조로 합의된 ODA는 LDCs 및 HIPC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 기술협력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 및 식량 원조를 제외한 양자(bilateral) ODA이다.

DAC에서는 매년 회원국들에게 원조 제공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 중 양자 원조의 구속성 상태에 대한 자료 역시 포함된다. 회원국들은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하는 ODA에 대해 DAC에 보고하며, 증여와 차관에 대한 (전체 차관 금액 중 프로젝트 지원 차관의 금액을 함께 보고)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DAC의 통계보고 지침에는 비구속성 원조에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DAC 통계보고 지침에 따르면 DAC 언타이드 권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구속성 원조와 각 회원국에서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DAC 언타이드 권고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조달 형식을 통해 구속성/비구속성 원조를 구분하는 반면, DAC 통계에서는 이 기준과 더불어 수원국에 제공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 재화 및 용역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지 여부

1) DAC 언타이드 권고(2008 개정본, DCD/DAC/M(2008)5, July 2008) Annex I의 정의에 따름

를 통해 구속성/비구속성 원조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수원국이 제공받은 자금을 공여국과 관계되지 않은 영역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본질상 ‘비구속성’ ODA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위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 지원, 현지 경비 지원, 채무 재조정 등이 제공될 경우, 해당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비구속성 원조가 제공된 것으로 보고되며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통지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b>비구속성 원조 해당 거래<sup>2)</sup></b>
i) 예산 및 국제수지 지원 수원국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외화의 제공.
ii) 현지 경비 지원 현지 시장에서 재화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 지원. 재화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된 재화일 수 있고, 현지 판매를 목적으로 현지 기업에 의해 수입된 재화일 수 있음. 현지인 고용에 따른 임금 및 급여 제공 역시 이에 해당.
iii) 채무 관련 조치 채무 탕감, 상환 재조정 등의 조치로 해당 금액만큼 수원국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제공의 효과.
iv) NGO 지원 및 ODA로 기록되는 직접 투자를 위한 공적 자금 흐름 사실상 구속된 <sup>3)</sup> 것으로 판단할 만한 공식적/비공식적 제약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 III. 한국 원조의 비구속화

2007년 이전까지 한국의 양자 원조의 대부분은 구속성 원조로 이루어졌다. ODA의 비구속화 현황에 대한 자료가 꾸준히 축적되기 시작한 98년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원조는 2006년까지 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전체 양자 원조의 95% 이상을 차지해왔다. 구속성 원조의 비율은 2007년을 기점으로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따라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에는 35.8%, 2009년에는 48.4%의 양자원조가 비구속성 원조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2)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DCD/DAC(2010)40/REV1

3) 사실상 구속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속성에 대한 공여국과 수여국 사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호이해가 있는 경우; 2) DAC 및 OECD 수출신용협약 회원국들이 구속성 혹은 부분 구속성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상의” 구속성 ODA는 따로 보고되지 않는다.



[표 1] 비구속성 ODA 비율 (양자 ODA)

(단위: 백만불, %)

구분	DAC 전체		한국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도	2002	21,124.5	84.6	3.4	1.6
	2003	30,059.2	91.1	6.7	2.5
	2004	30,744.1	90.2	17.2	4.2
	2005	48,980.8	91.4	14.3	2.6
	2006	62,158.0	88.3	10.0	1.9
	2007	60,349.0	83.9	199.7	24.7
	2008	80,459.3	86.6	428.8	35.8
	2009	71,102.9	84.4	614.6	48.4

출처: OECD 통계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은 편이며, 그렇기 때문에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비구속화에 대한 요청을 받아왔다. 한국의 DAC 가입을 위한 특별 심사 보고서는 한국의 DAC 가입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DAC 언타이드 권고에서 합의한 비구속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조 비구속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5년까지 원조 비구속화 확대를 위한 지침을 결정하였다.

한국의 비구속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15년까지 ODA의 비구속성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에는 75%의 원조를 비구속성 ODA로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상원조는 100%, 유상원조는 50%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달성하고자 하며, DAC 권고에 맞춰 LDCs와 HIPC를 대상으로 한 ODA의 비구속화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구속화 비율을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2015년까지 이 수치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2012년까지는 기술 협력을 제외한 분야에서 무상원조의 75%, 유상원조의 40%, LDCs 및 HIPC를 대상으로 한 ODA는 80%까지 비구속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2] 한국의 비구속성 ODA 달성 목표

구분	2012년			2015년		
비율	60%			75%		
	무상	유상	LDCs/HIPCs	무상	유상	LDCs/HIPCs
	75%	40%	80%	100%	50%	90%

#### IV. DAC 언타이드 권고 달성 현황<sup>4)</sup>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ODA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양자간 ODA의 79%, 2008년에는 82%, 2009년에는 79%가 비구속성 원조로 이루어졌으며, 구속성 여부가 보고되지 않은 원조는 각각 4%, 3%, 5%에 해당됐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비구속성 ODA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루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구속성 원조 통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2007년에는 양자 ODA 부문의 미보고 비율이 높았던 그리스(75%)나 포르투갈(56%)이 2009년에는 모든 원조에 대해 CRS에 보고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2011 DAC 언타이드 권고 이행 보고서에서는 DAC 언타이드 권고의 투명성 조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공여국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여국들의 비구속성 원조 제공이 실질적(de facto)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권고에서 명시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원조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입찰이 아직까지 상당부분 공여국 내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DAC 언타이드 권고가 명목적인 비구속화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사전통지 현황

DAC 언타이드 권고는 모든 비구속성 원조 제공에 대한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사전통지를 하도록 명시한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구속성 원조 제공

4) CRS에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01 DAC 언타이드 권고 이행 보고(2009, 2010, 2010-2011)에 따름

에 대한 경쟁을 장려하는 동시에 원조 비구속화가 명목적(de jure)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de facto)으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주기 위함이다. 실제로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된 배경이 비구속성 원조의 운영이 구속성 원조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양허성 수준이 낮은 프로젝트 형식의 양자 ODA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에 통지된 DAC 언타이드 권고와 관련된 원조는 약 150건, 금액으로는 약 49억불 가량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국 한 국가에서만 통지된 것으로, 아직까지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통지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제한적인 수의 DAC 회원국만이 정기적으로 비구속성 원조 통지를 하고 있으며, 몇몇은 아무런 통지를 하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은 지난 몇 년 사이 전혀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상당한 금액의 비구속성 원조가 통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예산 지원과 같이 직접적인 조달 과정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자금 흐름이 비구속성 ODA로 집계되고 있기에 프로젝트 구매를 통지하는 사전통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2010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 보고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사전통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이 통지의 실효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DAC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 2. 입찰결과 통지현황

비구속성 원조 제공에 대한 사전 통지 외에 재화 및 용역 공급자 선정에 대한 입찰결과 역시 통지 대상이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입찰이 공여국 또는 수원국 사업자에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으며, 비구속성 원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발도상국의 경제 주체에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입찰결과 통지의 수와 금액은 2007~2008년에 비교해서 2009년에 상당 부분 증가되었다. 건수로는 4488건, 금액은 86억불에 이르렀다. (2007년 3503건, 39억불, 2008년 3442건, 40억불) 건수 증가는 호주의 보고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금액에 대한 증가분은 2009년에 제기된 일본의 보고와 미국의 보고 증가분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 등 몇몇 국가들은 입찰결과에 대해서 2009년에 거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산 지원과 같이 조달이 필요하지 않는 형태의 원조 제공과 관련된 것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찰결과에 대한 불완전한 보고로 볼 수 있다.

[표 3] 낙찰 보고 (사후 보고)

(단위: 백만불)

구분	건			금액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호주	500	399	1,144	152.0	171.4	318.3
프랑스	1,140	1,570	1,700	1,091.3	1,396.9	654.2
일본	23	-	166	0.0	-	3,897.9
미국	180	101	174	1,946.3	1,230.5	2,771.5
다른 DAC 회원국	1,660	1,372	1,304	704.2	1,160.8	998.7
합계	3,503	3,442	4,488	3,893.8	3,959.6	8,640.6

출처: Contract Award Questionnaires, DCD/DAC(2011)4/FINAL 재인용

입찰에 성공하는 사업자의 지역적 분포와 관련, 2009년에는 사업 금액의 51%, 계약 건수의 46%에 해당하는 사업이 공여국 사업자에게 낙찰되었다. 여기에 다른 DAC 회원국이나 OECD 회원국의 사업자가 낙찰 받은 사업은 전체 사업 금액의 7%, 건수로는 9%였다. LDCs나 HIPC의 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는 전체의 4%(계약 건수로는 19%)밖에 되지 않으며 이것은 LDCs나 HIPCs 국가의 사업자들이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금액이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 사업자들의 사업 낙찰이 증가하였으며, DAC 공여국과 LDCs 및 HIPCs 사업자들의 낙찰이 그만큼 줄어든 모습이다.

[표 4] 사업 낙찰의 지역적 분포 (2009년)

(단위: 백만불, %)

구분	전체 낙찰		공여국		DAC 외 국가, OECD 회원국		LDCs, HIPC's 외 개발도상국		LDCs, HIPC's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호주	1144	318.3	837	292.5	141	10.0	110	7.2	46	8.7
오스트리아 <sup>1)</sup>	-	-	-	-	-	-	-	-	-	-
벨기에	36	21.8	1	0.3	2	1.9	3	1.5	30	18.1
캐나다 <sup>1)</sup>	-	-	-	-	-	-	-	-	-	-
덴마크	388	47.4	325	36.0	59	11.1	3	0.2	1	0.0
핀란드	115	86.9	88	84.8	13	1.9	12	0.2	2	0.0
프랑스	1,700	654.2	286	152.7	63	34.1	741	372.4	610	95.0
독일	210	188.2	97	70.1	23	49.3	18	9.2	72	59.6
그리스	26	6.2	-	-	-	-	5	0.1	21	6.1
아일랜드 <sup>1)</sup>	-	-	-	-	-	-	-	-	-	-
이탈리아 <sup>2)</sup>	-	-	-	-	-	-	-	-	-	-
일본	166	3,897.9	32	880.5	15	329.0	117	2,681.9	2	6.4
한국 <sup>3)</sup>	-	-	-	-	-	-	-	-	-	-
룩셈부르크	94	29.2	4	2.6	16	5.2	51	14.6	23	6.9
네덜란드 <sup>2)</sup>	-	-	-	-	-	-	-	-	-	-
뉴질랜드	208	21.2	126	17.0	33	2.3	26	1.0	23	0.8
노르웨이 <sup>1)</sup>	-	-	-	-	-	-	-	-	-	-
포르투갈	34	2.4	19	0.6	-	-	5	0.6	10	1.1
스페인 <sup>2)</sup>	-	-	-	-	-	-	-	-	-	-
스웨덴	19	3.2	11	2.0	8	1.2	-	-	-	-
스위스 <sup>1)</sup>	-	-	-	-	-	-	-	-	-	-
영국	174	592.3	157	387.7	11	24.7	4	179.8	2	0.2
미국	174	2,771.5	102	2,474.0	9	103.3	41	28.7	22	165.5
DAC 전체	4,488	8,640.6	2,085	4,400.9	403	573.9	1,136	3,297.4	864	368.4
비율	100	100	46.5	50.9	9.0	6.6	25.3	38.2	19.2	4.3

출처: 2009 Contract Award Questionnaire, DCD/DAC(2011)4/FINAL 재인용

주: 1) 입찰결과 미보고 국가

2) 권고 규정 범위에 해당하는 입찰결과 부존재

3) 한국은 2010년에 DAC 가입, 2009년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 없음

평균 수치는 위의 자료와 같으나, 각 공여국의 입찰결과를 분석해 보면 공여국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호주,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들 국가의 사업 낙찰의 상당 비율은 공여국 내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비구속성 원조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여국 내 사업자가 수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두 번째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룩셈부르크로, 사업 낙찰이 첫 번째 그룹 국가들과 비교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사업 낙찰과 관련된 자료가 없는 국가들(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한국)은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5] 사업 낙찰의 지역적 분포 (2009년, 그룹별)

(단위: %)

구분	1 그룹 <sup>1)</sup>		2 그룹 <sup>2)</sup>					
	공여국		공여국		LDCs, HIPCes 외 개발도상국		LDCs, HIPCes	
평균 비율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73.8	85.7	19.0	23.1	42.2	64.3	33.9	3.9

주: 1) 호주,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2)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각 국가마다, 그리고 매 해마다 사업 낙찰을 받는 사업자의 지역 분포는 변동되어왔지만 비구속성 원조를 통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상당부분이 공여국 또는 다른 OECD 회원국 사업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우려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구속성 원조가 실질적으로는 구속성 원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LDCs 및 HIPCes 사업자들이 입찰 계약을 성사시킬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 두 가지이다. 따라서 수원국들이 실질적인 (de facto) 비구속성 원조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하고, LDCs 및 HIPCes 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된다.

## V.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계획

DAC의 언타이드 권고는 개발도상국 중 LDCs와 HIPC를 대상으로 한 기술 협력 및 식량 원조를 제외한 ODA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듯이 제한적인 영역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AA에서는 각 회원국이 비구속성 원조의 최대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DAC에서는 이러한 AAA의 요청에 기하여 회원국들에게 DAC 언타이드 권고 너머 각국의 원조 비구속화 확대 계획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DAC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원조 비구속화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 계획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회원국의 비구속화 원조 확대 계획에 따른 분류

- i) 대부분, 또는 모든 원조가 비구속화 된 국가 그리고/혹은 구속성 원조를 완전히 또는 상당히 비구속화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i.e. 목표 및 시기별 계획표)이 있는 회원국.  
해당국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 ii) 원조의 상당 부분이 구속성 원조이며 구속성 원조를 비구속화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i.e. 목표 및 시기별 계획표)이 없는 회원국.  
해당국가: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 iii) 기타  
해당국가: 일본, 미국

ii) 그룹은 원조 비구속화 확대의 어려움을 표하거나 확대 계획이 없는 국가들이다. 오스트리아는 (원조의 70%가 비구속성) “원조 비구속화를 위한 다른 약정을 보고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리스는 (원조의 20%가 비구속성) 구속성 원조 축소를 위한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이나 시기별 계획표가 없는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원조의 63%가 비구속성) 지역 내 구매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택하였는데, 차관의 경우 그 차관의 일부분은 구속성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이 경우 DAC 정의에 따라 그 차관 전체가 구속성 차관 제공으로 남게 된다.

iii) 그룹 국가들은 AAA가 DAC 언타이드 권고 이상의 비구속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즉, DAC 언타이드 권고 이행이 AAA의 원조 비구속화 확대 요청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AAA가 DAC 언타이드 권고 이상으로 원조 비구속화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회원국들은 개별 사정에 따라 원조 비구속화 확대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AAA의 비구속성 원조 확대가 DAC 언타이드 권고의 범위에 제한된다고 해석한다.

한국은 현재 명확한 원조 비구속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 i) 그룹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원조 비구속화 계획은 2015년까지 ODA의 75%를 비구속화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무상 원조 제공 기관인 KOICA에서는 이 기간까지 본부 및 해외 사무소에서 국제 경쟁 입찰을(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완전히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sup>5)</sup>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원국의 조달 시스템 활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무상원조 뿐 아니라 유상원조 부문도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이 제공하는 유상원조인 EDCF는 2015년까지 50% 수준의 비구속화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LDCs, HIPC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70%, 2015년에는 85%까지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하고자 한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AC 공여국들은 형식적으로 원조를 비구속화 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공여국 밖에서 재화 및 용역을 조달하는 데 존재했던 법률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였다. 양자 원조 중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1999~2001년에 46%였던 수치가 2008년에는 82%까지 큰 성장 폭을 보였으며, LDCs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비율도 54%에서 87%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DAC 언타이드 권고가 파리선언(PD) 등 다른 국제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조 비구속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현재 KOICA의 수원국 현지 사무소에서는 ICB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음.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수원국의 맥락에서 본다면, 수원국은 이제 공여국이 아닌 제 3국 또는 자국 사업자를 통해 재화 및 용역을 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비록 의도적이지 않을지라도 비구속성 원조에 여전히 구속성 원조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어서 실질적 (de facto) 원조 비구속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여국들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DAC에서는 원조 비구속화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비구속성 원조 사전통지 및 입찰결과 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DAC 회원국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통지 제도의 강화가 국제사회에서 원조 비구속화 논의 가운데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LDCs 및 HIPC를 대상으로만 하는 양자 ODA 중 기술협력과 식량 원조를 제외한 ODA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AC 언타이드 권고의 범위보다 원조 비구속화를 더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파리선언(PD)과 AAA에서 나타난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계획도 그 중 하나이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각국이 어디까지 원조 비구속화 확대를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여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한국은 2010년에 DAC에 가입하여 최근에서야 DAC 언타이드 권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는 아직 구속성 원조 비율이 전체 양자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 2007년을 기점으로 비구속성 원조를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한국의 원조 비구속화 목표는 우선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DAC 언타이드 권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함과 동시에 현재 국제사회에서 원조 비구속화와 관련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de facto) 원조 비구속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여 향후 국가적 ODA 계획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OECD DCD/DAC/M(2008)5,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July 2008

OECD DCD/DAC(2009)21/REV2, Implementation of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DCs 2009 Review, May 2009

OECD DCD/DAC(2010)16/REV3, Implementing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Aid: 2010 Review, December 2010

DCD/DAC(2010)40/REV1,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December 2010

OECD DCD/DAC(2011)4/FINAL, Implementing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Aid: 2010-2011 Review, March 2011

주동주·김학기·김석환·김계환(2009), 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산업연구원



## MDGs Goal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현황

### - 선진공여국의 최빈국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

김 진 희

한국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새천년개발목표(MDGs)<sup>1)</sup> 달성시한이 2015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현재 결과를 돌아보면, 당초 설정했던 목표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금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로 선진공여국과 개발도상국가간 협력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M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올해 개최되는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igh-Level Forum: HLF)’를 앞두고 MDGs 제 8목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같은 해 ‘제4차 UN 최빈국 회의(UN conferences on LDCs)<sup>2)</sup>’ 개최도 앞두고 있어 최빈국(Less 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한 선진국의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고, 주요협력분야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국제무역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00년 국제연합(UN)이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4) 아동 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총 8개 개발목표를 정하고 2015년 까지 하루 US\$1.25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http://mdgs.un.org>). MDGs는 2000년 9월 UN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국 정상(189개국)들이 합의한 계획이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상위계획으로 확정됨으로써, 이후의 개발에 대한 논의나 개발 사업이 통일적 틀을 갖고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음 (KOICA, 2008).

2) 1981년 UN이 최빈국의 빈곤경감과 세계경제 편입을 위해 1차 회의(파리)를 개최한 후, 1990년 2차회의(파리), 2001년 3차회의(벨기에)를 거쳐 2011년 4차회의(터키)개최를 앞둔 10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

## I. MDGs Goal 8 개요

MDGs Goal 8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이며, 총 6개의 세부목표(target)와 16개의 측정지표(indicators)로 구성된다. 먼저 세부목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국가적, 국제적으로 규칙에 의거한 미래지향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열린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둘째, 무관세, 무쿼터 확대 및 외채경감, 빈곤감소 추진, 개도국에 대한 보다 관대한 ODA 지원 등 최빈국의 요구를 고려한다. 셋째, 내륙(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이나 도서 지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부채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한다. 다섯째, 민간제약회사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필수약품을 제공한다. 여섯째,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정보통신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정보 등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sup>3)</sup>

MDGs Goal 8은 이와 같은 6가지의 세부목표를 4가지 주제 즉, 시장접근성(market access), 외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 필수약품 보급(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신기술 보급(access to new technologies)으로 분류하며,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선진국 및 개도국의 목표달성 현황 및 후속조치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스템으로는 ‘MDGs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UN 경제사회국의 통계국과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및 UN 아동기금의 협력 아래 운용된다.<sup>4)</sup> 이 시스템을 통해 각 개발도상국의 MDGs 8가지 목표의 이행 현황과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및 빈곤감소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

3)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E/CN.3/2008/29. New York.

4) [www.mdgmonitor.org](http://www.mdgmonitor.org)

## II. 선진공여국의 최빈국(LDCs)<sup>5)</sup> 공적개발원조 지원현황

### 1. 지원규모

2009년 기준 총 국민소득(GNI)의 0.7%를 ODA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국 중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총 5개국에 그치고, 가입국 평균 ODA/GNI가 0.31%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목표치 달성을 보이고 있다.

Goal 8에 대한 이행 현황 중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현황<sup>6)</sup>을 나타내는 지표는 MDGs Goal 8의 지표 8.1 a)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OECD/DAC 회원국의 ODA지원총액과 b)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OECD/DAC 회원국의 ODA/GNI가 있다.

[표 1]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대한 OECD/DAC 회원국의 ODA지원 총액 및 ODA/GNI (지표8.1)

(단위: 십억불)

구분		1990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ODA	개발도상국	52.8	58.6	107.8	104.8	104.2	122.3	119.6
	최빈국	15.1	15.9	26.1	30.1	32.1	37.1	-
ODA /GNI (%)	개발도상국	0.32	0.23	0.32	0.3	0.27	0.3	0.31
	최빈국	0.09	0.06	0.08	0.09	0.08	0.09	-

주: 1) Total ODA는 non-ODA 채무탕감 포함, 군사 목적 채무탕감 제외

2) 2009년도 통계는 잠정치 기준

최빈국에 대한 DAC 회원국의 ODA규모는 2008년 기준 공여국 GNI의 0.09%로 제 1차 최빈국 회의(1981)가 열린 이후부터 2008년까지 0.08%~0.1% 사이에 머무는 등 뚜렷한 증감이 없고, MDGs 목표치 0.15% 달성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1인당 GNI 3년간 평균치가 750달러 이하이고 인적자원지표(Human assets index: HAI)와 경제적 취약성 지표(Economic Vulnerability Index: EVI)가 일정치 이하인 국가를 지칭. 1971년 UN에 의해 분류가 시작되어 25개국이었던 최빈국은 현재 48개국(2011년 기준)으로 증가. 최빈국 분류는 매 3년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국(ECOSOC)에 의해 검토되며 가장 최근 검토 시기는 2009년임.

6)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Goal 8의 이행현황에 대해 매년 UN MDG Gap Task Force Report가 발행되어, 2011년 4월까지 3개의 리포트가 발행.

[표 2] '09년 OECD/DAC 회원국 ODA 이행목표 및 현황

(단위: 십억불)

구분		'09 Total ODA	ODA/GNI(%)
ODA to LDCs	목표	58.9-78.5	0.15-0.20
	이행	36.0	0.09
	Gap	22.9-42.5	0.06-0.11

자료: UN, MDG Gap Task Force Report 2010

한편, 원조규모 외에도 소득수준국별 및 분야별 원조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소득수준국별 원조의 경우 전체 개도국 지원 중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약 0.3%인 반면, 중저소득국(low-middle income countries)이 0.6%, 상위중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ies)이 0.7%에 이르는 등 최빈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원조의 경우,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점차 줄고, 노동집약적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감소하여 최빈국의 빈곤감소와 원조 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 ODA지원과 최빈국 경제성장의 관계

일반적으로 ODA 지원이 최빈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측정하기는 어렵다. 현재로는 '효율적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없지만, 다만 특정 상황에 놓인 최빈국의 경제 성장에 원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다.

최빈국을 분류하는 3가지 지표를 통한 경제분석 결과를 보면, 수혜국의 1인당 ODA규모가 높을 수록 1인당 GNI가 낮은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최빈국 중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원조가 집중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1970년대 초 '최빈국 분류'가 시작되고 공여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연간 8.4%의 성장에서 1970년대 연간 23.7%를 기록하며 거의 3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같은 시기 다른 개도국에 1960년대 3.4%, 1970년대 10%의 ODA 지원이 증가된 것과 비교하면 원조가 최빈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뒤바뀌어 1980년대 연간 6.9%, 1990

년 3.7%을 기록, ODA지원이 크게 감소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의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는 것(1971년 25개국→2011년 48개국)을 고려하면,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과 경제성장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sup>7)</sup>

한편, 원조액의 양적증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빈곤 감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ODA와 최빈국의 빈곤문제 역시 MDGs 달성의 난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빈국 중에서도 농산물과 유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가장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빈민인구 생계의 75%를 차지하는 농업이 빈곤감소 기여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ODA의 4%에 그치는 등 상대적인 소외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71년 최빈국 분류가 시작된 이래 지난 40년 동안 최빈국 분류에서 벗어난 국가가 3개 국가<sup>8)</sup>에 그치는 등 ODA지원증가와 빈곤퇴치가 유의적 관계를 보이지 않아 MDGs 달성 전략의 재점검 및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III. 선진공여국과 최빈국의 무역 협력 현황

#### 1. Goal 8과 무역협력 모니터링

선진공여국과 개도국의 무역협력 모니터링 지표는 MDGs Goal 8의 지표 8.6 ‘선진국의 개도국과 최빈국으로부터의 무관세 수입총액’과 지표 8.7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섬유 및 의류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를 들 수 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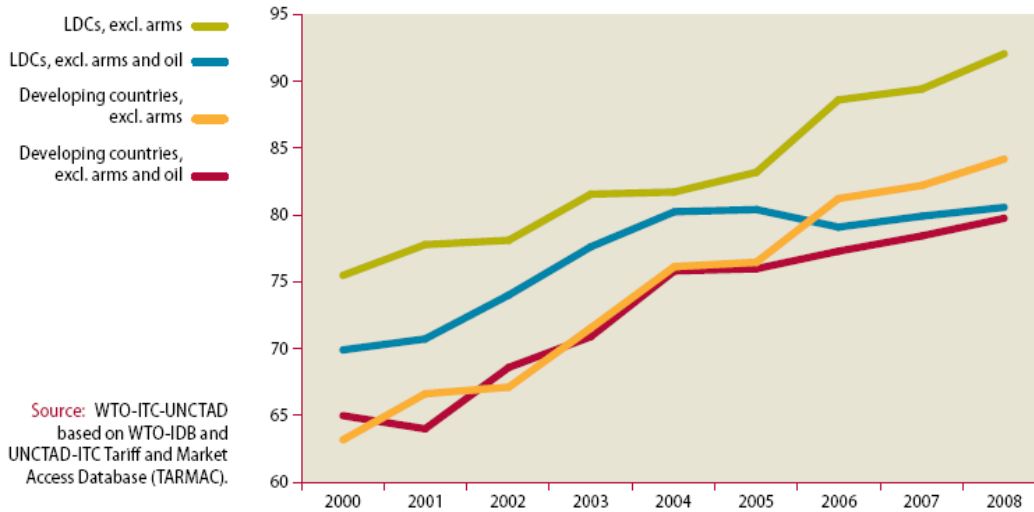
7) UN/DESA, 2010,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upport Measure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8) 최빈국 분류에서 벗어난 3개국은 보츠와나('94), 카메룬('07), 몰디브('11)인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따르면 소득기준(1인당 국민소득 750달러 이하, 900달러 시 졸업), 인적자산의 취약성(영양, 보건, 교육, 문맹률 등), 경제적취약성(농작물 생산량, 재화·서비스 수출의 안정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인구비율 등) 등 세 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2회 연속 개선되어야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할 수 있고, 기준에 가까워지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신속적으로 졸업 여부 결정이 가능하다.

9) 매년 국제무역센터(ITC),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MDGs 제 8 목표 통계자료 홈페이지(<http://www.mdg-trade.org>) 를 통해 통계치를 게시.



[그림 1] 선진국의 개도국 및 최빈국으로부터의 무관세 수입규모



주: by value, %

자료: UN, MDG Gap Task Force Report, 2010.

선진국과 최빈국의 무역협력 관련 기본전략인 무관세·무쿼터 제도(duty free and quota free)는 2001년 개최된 제3차 UN 최빈국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행동계획(Brussels Programme of Action)에 포함되어 UN 최빈국회의 정책의 중심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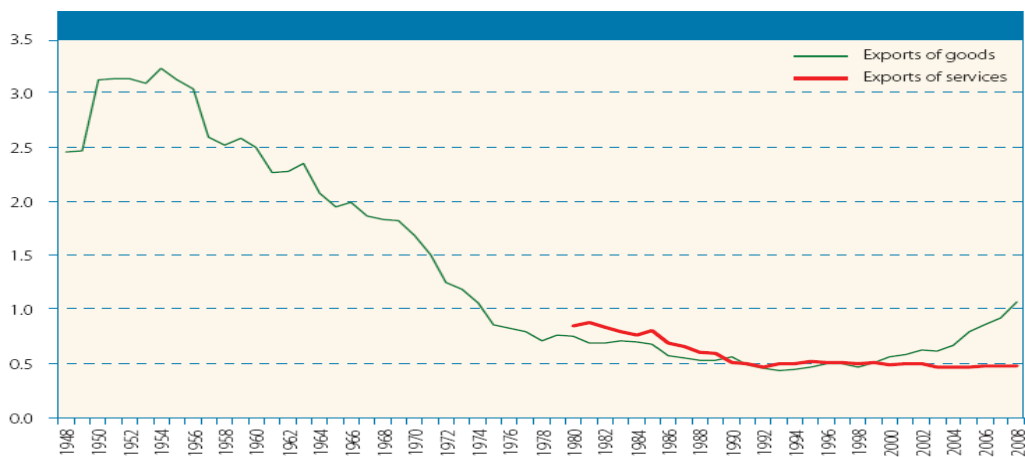
2008년 기준 선진국의 최빈국으로부터의 무관세 수입규모는 92%(무기류 제외)로 유류와 광물수입 전부, 농산물의 91%, 비농산물의 74%가 해당되었다. 한편,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 중 특히 농산물에 두드러진 특혜가 주어졌는데, 실제 유럽연합을 포함하는 몇몇 선진국들은 농업분야를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자국의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정책이 개발도상국 농산물의 가격수준이나 시장접근성 그리고 생산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은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Everything but Arms)원칙’에 따라, 48개 최빈국 생산물에 대해서 최대 농산물 수입지역인 유럽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와 쿼터의 제약을 없애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빈국 수출의 급격한 성장은 오늘날 최빈국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와 광물의 국제기준가 상승의 힘이 컸다. 이것은 유류, 광물, 의류 등 3가지 품목이 최빈국 전체 수출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출품목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2009년 세계경제위기로 말미암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던 최빈국들이 2009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최빈국은 수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산 및 수출기반을 다양화하여 강화된 통합체제(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가 최빈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10)</sup>

선진국의 개도국 및 최빈국으로부터의 무관세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시장에서 최빈국의 수출시장규모는 오히려 꾸준한 감소를 기록해 최빈국의 국제무역통합 현황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그림1,2). 국제무역시장에서 최빈국의 수출규모는 1950년대 3%, 1971년 1.5%, 그리고 1980년대에는 0.75%, 1990년에는 0.56%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1995년 급격히 재도약 하며 2008년에는 1.1%를 달성하였는데 이것은 원유수출 5개국(앙골라, 적도기니, 미얀마, 수단, 예멘)의 성장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실제, 위의 5개 원유수출국을 제외하고 최빈국의 수출 비중은 1995년 이후 0.33%에 머물러 원유수출국이 최빈국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10).

[그림 2] 국제무역에서 최빈국 상품수출 비율 (1948~2008)



Source: Based on the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unctad.org/templates/Page.asp?intItemID=1890&lang=1>.

자료: UN/DESA, 2010,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upport Measure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10) WTO, 2011, Market access for products and services of export interest to least-developed countries, Sub-Committe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1971년 25개국이었던 최빈국 수가 2011년 48개국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국제무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최빈국의 무역참여도는 선진공여국과 최빈국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무관세 및 무쿼터 지원이 최빈국의 세계경제 편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음을 통해 볼 때, 기존의 관세혜택 등과는 다른 방식의 최빈국의 수출시장 크기 자체를 키우는 프로그램 제공이 MDGs 달성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세계 무역을 이끌 새로운 플레이어인 신흥개발도상국이 최빈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43%에서 2009년 49%로 증가하는 등 최빈국 수출 시장으로써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브라질,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이 최빈국과 교역확대를 넓히고 있어 수출대상국이 점차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국도 특정 개도국들을 그룹화하여 ‘아프리카 성장 기회촉진 법안(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경제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s Agreement)’과 같이 기존의 일반적, 비호혜적인 특혜(non-reciprocal preferences)외의 방식으로 무역참여를 촉진하고 있다.<sup>11)</sup>

## 2. 무역을 위한 원조와 국제기구들의 협력

무역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는 원조와 일반적 경제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원조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OECD의 DAC와 무역위원회는 원조의 특정유형에 따른 정의 대신 특정 원조가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상의 무역 관련 개발 우선분야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즉, 원조활동의 종류보다는 원조목적에 중요시하는 분류인데, 통상 정책 및 제도/생산역량 강화/무역 관련 조정/기타 무역 관련 필요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을 ‘무역을 위한 원조’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지원은 무역 및 직접투자의 촉진이 수원국의 고용증대 및 민간부문 활성화, 신기술의 개발 및 유입을 촉진시켜 최종적으로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전형적인 경제성장 지향형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다(OECD/DAC, 2006).

---

11) WTO, 2011, 전계 자료

한편, 최빈국의 경우 취약국가(Fragile states)<sup>12)</sup>와는 달리 사회 정치적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역량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선진공여국은 물론 많은 국제기구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반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경우, 아프리카 및 최빈국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Africa,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pecial Programmes)을 운영하며 무역과 투자를 통해 80개가 넘는 국가들의 성장기회를 촉구, 최빈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최빈국 보고서(LDCs Report)’와 ‘아프리카 경제개발 보고서(Economic Development in Africa Report)’를 발행하여 정책관련 분석을 돕고, ‘강화된 통합체제(EIF)’ 및 ‘LDC 신탁기금(LDC Trust Fund)’ 등의 제도를 통해 최빈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무역관련 여신을 증대시키고, 무역통합예측연구(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ies) 등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대상국의 국제 무역체제 통합 지원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 종합계획의 경우, EIF 운영 위원회를 설립하여 22개의 공여국이 신탁기금을 통해 최빈국의 국제 무역통합을 위해 지원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협력이 원조와 국제교역체제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도하라운드와 함께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계기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12) 빈곤퇴치 정책을 발전시키거나 이행할 역량 및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국가로, 파트너십이 곤란한 국가(Difficult partnerships) 또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등의 개념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

## IV. 시사점

국제 경제 및 정치와 함께 개발협력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 가운데,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촉구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DGs 이행지표에 대한 최근의 모니터링 결과는 대부분의 지표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없어 2015년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DP는 MDGs 이행현황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MDGs를 달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먼저, 개도국에 대한 예산지원(budget support)이 MDGs 달성과 연결된다는 자료를 근거로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를 증가하거나 양허성 차관의 상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등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 및 금융거래세와 같은 국제수준의 혁신적 금융메커니즘을 통해 MDGs와 관련된 투자 재정을 마련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신흥공여국, 민간부분, 국제 NGO 등 새로운 원조주체가 등장함에 따라 국제 원조체계(Aid architecture)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의 개발경험은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sup>13)</sup>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sup>14)</sup> 등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남남협력의 경우 DAC 원조효과 작업반의 남남협력 태스크포스팀<sup>15)</sup>의 주도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참여자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접근을 도입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다양한 공여주체들의 등장으로 새로운 원조체계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이 주목되고 있다.

13) DAC 회원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전통적 지원방식인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도국과 개도국간의 개발협력 관계를 의미. 남남협력은 개도국간 무역·투자의 증가, 호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평등성, 수원국 여건 및 수요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 신속한 절차 등으로 전통적인 북남 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개발협력 메커니즘으로 대두.

14) 선진원조국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도국간 개발협력.

15) DAC 원조효과작업반의 남남협력 태스크포스팀은 2012년부터 MDGs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평적 파트너십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및 기준 마련.

## 참고문헌

United Nations(200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2010), The MDG Report 2010.

UN/DESA(2010), The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t a Critical Juncture, MDG GAP Task Force Report 2010.

UN/DESA(2010),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upport Measure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UNDP(2010), What will it take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 international assessment.

UNDP(2010), Beyond the midpoint,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TO(2011), Market access for products and services of export interest to least-developed countries, Sub-Committe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한국국제협력단(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IV. 개발협력 단신

1. EDCF 원조효과성 특별 토론회 개최 주요 내용
2.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남남협력회의 주요 내용
3. DAC 고위관리회의(SLM) 주요 내용





## EDCF 원조효과성 특별 토론회 주요 내용

### 1. 행사 개요

- 아시아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영국 에딘버러 대학 Kenneth King 교수의 원조 효과성 관련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의 Roundtable 방식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1. 4. 6(수), 09:30~11:30, 수출입은행 대회의실

### 2. 주요 논의 내용

- 발표1 : EDCF Activities toward Aid Effectiveness



발표1: 경험기획실/서정화 선임심사역

- 2010년 EDCF 지원 규모, 분야별 및 국가별 실적,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 달성목표 등 중기계획 설명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EDCF의 노력

**【 ODA 정책기반 강화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ODA 선진화 계획, ‘11-’15 기본계획, ‘11년 시행계획 등 새로운 ODA 정책 수립
- (주요 정책) 통합 국별 지원전략, 개발경험공유, 언타이드 확대, 대외협력 강화,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 파리선언과 EDCF 】**

- 수원국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국별지원전략 수립, 수원국의 구매 시스템 전적 활용 등 주인의식 및 일치성 달성 노력
- MDB와 협조용자 확대, 아시아개발협력회의, 베트남 6 Bank 활동 등 타 공여 기관과 협력을 통해 원조조화 추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 설치, 외부평가제도 도입(‘10년) 평가에 수원국 참여 확대 등 성과관리 및 공여국·수원국간 상호책임성 제고 노력

**【 원조효과성의 이상과 현실 - 베트남 사례 】**

- 2010년 US\$295백만 지원(승인기준) 등 급격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단계에서 저조한 사업진행속도가 저조한 집행율, 투자율, 승인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남
- 공공투자 정책간 불일치, 정부승인절차 지연, 사업관리 역량 부족 등 Bottleneck 또한 존재함
- (교훈 및 제언)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현지 실무능력 향상, 현장에서 공여국 간 조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행동계획,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조 등 개발효과성으로의 발전 필요

**□ 발표2 : Paris Declaration Discourse : Rhetoric and Reality**

**【 글로벌 원조체제의 주도권 】**

- MDG, EFA(Education for All) Goals,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PD/AAA) 등 세계의 주요 개발목표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주도권은 개도국이 아닌

공여국에게 있음

- 한국은 DAC 비회원국일 때부터 원조활동 모니터링 설문에 참여하였고, HLF-4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등 원조사회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줌
  - DAC 가입심사 때, 한국은 기술협력을 통한 역량제고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흡

#### 【 원조효과성 달성 미흡 】

-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원조효과성 달성 미흡(Little progress)
  - 수원국 금융시스템 활용 저조, 원조사업 심사에 수원국 참여 저조, 낮은 원조 예측가능성 등
- 기존 원조효과성 논의의 적합성에 대한 재고 필요
  - 친빈곤적(Pro-Poor)이지 않은 수원국 정책에 일치시키기 어려움
  - 기존 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 원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하며 프로그램 원조의 실제 구성요소 분석 필요
  - PD/AAA에 해외연수, 공여국 전문가 및 봉사자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Dead Aid’의 저자 담비사 모요는 빠르게 성장한 한국, 중국은 원조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PD/AAA를 간접적으로 비판함. 동 주장의 추론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PD/AAA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음

#### 【 원조효과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

- 영국 DFID 사무차관의 ‘The Future of Aid’에 따르면 PD/AAA의 원조조화 논의에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과도한 원조 참여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화가 아닌 비교우위에 따른 ‘경쟁’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할 것임
  - 브라질,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경우 고유의 개발경험에 바탕을 둔 기술 협력에 집중

【 부산 HLF-4의 과제 】

- DAC 회원국 뿐 아니라 non-DAC 공여국, 민간금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며 PD/AAA의 이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 분석 필요
- DAC의 공통된 원조효과성 원칙 추구로 배제된 공여국별 비교우위 (Unique advantages)를 고려해야 함
  - 양허성 차관 및 무상원조의 적절한 배분, 공여국 전문가 및 봉사단을 활용한 기술협력의 중요성 강조 필요



발표2: Prof. Kenneth King



질의응답 시간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남남협력회의 주요 내용

### 1. 회의 개요

- 회의명 :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Dialogue: Lesson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 일시 및 장소 : 2010. 3. 23(수) ~ 24(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의제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남남협력

### 2. 주요 논의 내용

#### 가. 회의 구성

- 전체회의는 ① 국가개발협력 프로그램 사례, ② 원조체계에 대한 시각 발제, ③ 아시아 공여국에 대한 기존 시각/비판 발제, ④ Asian Approach에 대한 교훈 및 제언 등의 순으로 진행

#### 나. 주요 내용

##### (1) 국가개발협력프로그램 사례발표

- 회의 참여국은 각국별 국가개발협력프로그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
  - 한국 EDCF는 원조효과성 지표 등에서 높은 성장을 보인 베트남 지원사례를 통한 EDCF 지원활동, 성과 및 실무적 문제점 논의를 통해 원조/개발 효과성 논의로 진행시키고자 함.
  - 지원전략 : 베트남 국가개발전략과의 연계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6 Bank 활동 등을 통한 원조기관과의 조화

- 성과평가 : 2010년 US\$295백만 지원(승인기준) 등 급격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단계에서 저조한 사업진행속도가 저조한 집행율, 투자율, 승인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남
- 교훈 및 제언 : 원조 효과성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원칙 강조를 넘어서 주인의식(Ownership) 강화를 통한 현지 실무능력(Pragmatic) 향상, 현장에서 공여국들의 조화가 필수적이며, 개발효과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별 행동계획과 현장중심의 개발 아젠다가 필요함을 강조
- 중국 사회과학원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사례를 통해 중국의 원조정책 변화, 특징 및 그 역할에 대해 발표
  - 정책변화 : 중국의 원조정책은 중국총리의 아프리카 방문을 계기로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제 1기(1956~1970후반)에서 상호경제협력 및 개발을 추구하는 2기(1970후반~현재)로 전환
  - 원조특징 : ① 내정불간섭 원칙 ② 양자간 원조 강조 ③ 인프라건설과 같은 ‘하드웨어’ 프로젝트 강조
  - 원조역할 : 중국은 800여개의 프로젝트 수행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교통, 농업 등 경제 인프라 건설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채 탕감을 통해 수원국의 채무부담 경감노력도 하고 있으나, 전통공여국과의 원조에 대한 시각차이, 원조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등은 보완해 나가야 함을 강조
- 인도 개발도상국 연구소는 기술협력과 남남협력 중심의 원조활동, 원조 효과성 향상을 위한 인도정부의 노력 등을 발표
  - 인도는 독립직후부터 남남협력 기조하에 아시아 협력회의(1946), 아시아-아프리카 협력회의(1954)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남남협력을 지원하였으나, 재원의 한계로 인해 협력은 제한적이었음
  - 또한, 네팔, 부탄 등에 대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삼각협력 지원, NGO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선정단계부터 수원국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수원국 참여도모, 비용절감 등 원조 효과성 향상 도모, UN을 통한 남남협력 지원을 통해 ‘탈국가적 원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삼각협력에 대한 인식부족,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예측성 부족, 프로젝트 영향평가 부재는 인도원조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

- 태국 국제개발협력단(TICA)은 경제개발과 기술협력에 기반한 기술협력 중심의 원조정책, 주인의식, 수원국 주도 및 참여 등에 기반한 원조원칙을 발표하였으며, 공적 영역의 지나친 관료주의, 기술협력과 실제응용에 있어서의 간극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 이외에 싱가포르 외교부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역량개발에 기반한 원조정책,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ASEAN 국가 중심의 기술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자원배분의 최적화, 원조의 중복수혜방지,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삼각협력 및 ICT 원조진출전략을 발표함

## (2) 원조체계에 대한 시각(Perspective on Aid Architecture)

- 전통적인 원조원칙, 체계에 대한 아시아적 해석을 통해 기존 체계에 대한 개선안/대안 등을 제시
  - 태국 Thammasat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아시아 공여국의 관점에서 파리선언 원칙을 재조명하고 태국원조사례를 통해 ‘파리선언 이후’ 및 개발에 대한 이정표를 설정
    - 아시아 공여국은 발전경험과 원조체계가 상이하지만, 국가주도 원조, ‘국가발전’이라는 명확한 개발목표, 수원국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는 공통점을 보유
    - 오랜 북-남협력관계에서 유래한 파리선언은 원조절차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조하여 공여국의 원조집행과 수원국의 원조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공여국 주도의 원조 및 국가 주도의 원조로 귀결됨
    - 원조는 개발 수단 중 하나로서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개발효과성, 무역을 위한 원조 등 원조를 넘어서는(beyond aid) 발상의 전환과 수원국 국민,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직접원조가 필요함을 강조
  - KDI는 개발을 단순한 기술적 해법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변형을 주도하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창의, 협조, 성과기반 보상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
    - 성장은 역량 개발에 의한 점진적인 발전과 문제점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립적 관점(bootstrapping perspective) 측면에서 점진적

역량 개발에 기반한 자립적 개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MDG beyond 2015 제안

- 이외에 중국 사회과학원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전통공여국(DAC)에 비해 미미하여 언론의 우려처럼 채무문제가 불거질 염려는 적으며 각 국가의 재정상황에 맞는 원조를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
  - KDI School은 한국의 ‘개발을 위한 원조’ 사례발표를 통해 원조의 효율적 배분, 원조누수방지, 평가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역설

### (3) 아시아 공여국에 대한 기존 시각 및 비판

- 전통공여국, 수원국 및 전문가의 관점에서 신흥공여국의 원조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UN 경제사회국은 MDG 공약실천(ODA/GNI 0.31%→0.7%),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의 조속한 도입, 원조분산 방지, 식량안보, 무역을 위한 원조 등을 시급한 국제공조과제로 선정하고, ODA 차관에 있어 이자탕감과 회수 등으로 인한 총지출과 순지출의 거대한 격차를 비판함.
    - 한편, Ownership을 위한 ODA 체계의 일치(coherence), 성장, 고용, 예산 지원에의 원조집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혁신적 개발자원, 무역을 위한 원조, 기후변화 지원 등을 새로운 이슈로 제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통공여국과 아시아 공여국들의 상호인식을 조명하고 양자의 조화 및 남남협력 가능성, HLF-4에 대한 기여 등을 발표
    - 전통공여국의 아시아 공여국에 대한 입장(Rogue Aid) : 불투명성, MDGs 등 공통목표가 아닌 자국이익 추구 및 언타이드, 무상 등 ODA 규범을 따르지 않음
    - 아시아 공여국의 전통공여국에 대한 입장(Dead Aid) : 자국이익추구는 언제나 존재하였으며, Better Aid(언타이드, 무상) 또한 이익추구 맥락으로 해석 가능 및 아시아적 모델이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가능
    - 이러한 상호 인식을 바탕으로 OECD DAC-China 포럼, G20 개발포럼, DAC-아시아 공여국 포럼 등을 통한 공여국 사이의 상호 조화 및 DAC 규범을 반영한 아시아 규범 제정을 통한 남남협력 가능성 모색 필요



- 원조효과성 자체로 개발효과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으며, 미사여구로서의 원조원칙과 현실과의 격차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

#### (4) Asian Approach에 대한 교훈 및 제언

- Asian Approach에 대한 교훈 및 제언을 바탕으로 개발효과성과 HLF-4과의 연계성 모색
  - 남남협력 작업팀(Task Team, 인도네시아)은 ‘개발효과성을 위한 원조’를 추구하는 ‘Jakarta Commitment’, 남남협력 작업팀 및 삼각협력 워크숍 활동, HLF-4에 대한 기여방안 발표
    - ODA에 있어 주요 제약은 공급부족이 아닌 활용부족으로서, ODA는 국가적 역량 및 자원 향상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Jakarta Commitment’는 원조가 개발효과성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 HLF-4를 위해서는 개발주체간의 ‘수평적 협력’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이용, 역량강화 및 글로벌 개발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도구로서의 ‘경험 공유’ 가치 인식, 남남협력·삼각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등이 필요
  - 인도는 1964년이 시작된 연대, 상호존중, 평등 원칙에 기반한 ITEC(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programme) 프로그램은 수원국 수요 중심, 다양한 방식을 존중(no one size fits all)하며 156개국 앞 누적기준 30억불을 지원했음을 강조



남남협력회의 참가자들과



남남협력 회의: EDCF 발표

## DAC 고위급 회의(Senior Level Meeting) 주요 내용

###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1. 4. 6(수) ~ 7(목), OECD 본부(프랑스)
- 의제
  - 금번 관리자회의에서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앞두고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개발재원의 확보 등 원조효과성 논의를 지속, 포괄적 접근(Inclusive Approach) 중심으로 논의
  - DAC 회원국 외 브라질, 중국 등 신흥공여국 대표가 참여하여 DAC의 포괄적 협력방식에 동의를 표하고, 비영리 단체인 Gate's Foundation도 참여

### 2. 주요 논의 내용

#### 가. 관계강화(The Engagement Agenda)

- (협력대상 확대)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Development)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 DAC 회원국 중심에서 Non-DAC 국가, 국제기구, 민간 등과의 포괄적인 협력체계(Inclusive Aid Architecture) 구성 필요
- (지식공유 활용) 새로운 개발참여자와의 협력, 특히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 지식공유(Mutual Learning)가 요구됨
- (권고사항 탄력운동) 포괄적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PD, AAA 등 기존 DAC 회원국간 권고사항의 준수를 강요하기 보다는 탄력적인 규정 적용이 필요

※ Non-DAC 회원국(기관) 참여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등 Emerging Economy 대표가 참여하여 DAC의 포괄적 협력방식에 동의를 포함. 비영리 단체인 Gate's Foundation도 참여

나. 부산총회 정치적 로드맵(The Political Roadmap to Busan)

- (원조효과성 지속관리) PD, AAA는 원조의 질(Quality)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관리(Monitor)가 요구되며, 부산총회에서 성공과 실패 사례(Unfinished Business)에 대한 규명 작업 필요
- (Linkage to Politics) Ai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원조체계의 실행을 위해서는 G-20, UN, ASEAN 등 국제적 정치협의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및 이슈의 공유가 필요
- (지식공유 전략적 활용) 개발 성공사례에 대한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를 개발재원과 같은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
- (MDGs 달성 기여) 국제사회는 부산총회에서 “MDGs 달성”을 Post- Busan 이슈의 중요 과제로 선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개발성과 도출과 홍보(Achieving and Communicating Results)

- (개발재원 형성에 기여) 결과중심 원조는 실질적 개발은 물론 Tax Payer 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재원의 형성(Mobilization)을 가능하게 함
  - \* 미국의 Communication Strategy 소개([www.foreignassistance.gov](http://www.foreignassistance.gov))
    - ① 외부 기관을 통한 원조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 ②대중의 지지 (Public Support) 유도 및 정치적 요구사항 충족 → ③개발재원 확충 가능
- (선결과제) 결과중심 원조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Collection), 측정(Measurement) 및 관리(Management)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개도국 시스템 구축과 운용인력에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이 필수
  - \* Fragile State일수록 결과중심 관리(MfDR)에 문제가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집중지원 필요성 제기

## 라. 원조와 포괄적 개발(Aid and Beyond)

- (포괄적 개발수단) “And Beyond”는 원조만으로 개발을 이룰 수 없는 한계 인식에서 출발하며, 본 세션에서는 포괄적 개발재원 및 개발정책에 대해 논의
- (개발재원의 개념 확대) Aid를 개발의 기초재원으로 활용(Leverage)함으로써 추가적인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혁신적 개발재원 (Innovative Financing) 등을 포함한 Flows of Development로 개발재원의 인식을 확대
  -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항만, 철도, 수자원 등 대규모 경제 인프라 구축 사례 소개
- (개발정책의 공유) 성공적 개발경험의 공유, 개발정책의 정합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제고 등이 주요한 개발 요인으로 논의되었으며,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Knowledge Sharing\* 필요성에 공감
  - \* 지식공유 추진 예
    - Peer Review를 통한 Best Practice 공유 필요성 다수 제안
    - 한국의 성공적 PCD 사례 발표회 개최 제안(한국 대표단)

## V. EDCF 소식

1. EDCF 지원사업 개요
2. EDCF 동향
3. 국내외 ODA 소식



## EDCF 지원사업 개요(2011.1월~4월)

### 1. 차관공여계약 체결

#### □ 인니 파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 차주(사업실시기관) : 인니 재무부 (인니 공공사업부)
- 총 사업비용 : 63.76백만불
- 지원신청금액 : 58백만 달러
- 사업범위 : Gaung-Duku간 27km 우회도로구간 확장건설  
(PSC 및 ST.Girder 교량 확장건설, 교차로 설치, Flyover 연결 등)
- 사업개요
  - 1993년 파당시 우회도로의 개통 이후, 파당시 인구 및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파당시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되어 시내 통행차량의 동 우회도로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높아짐.
  - 기존 2차로인 파당시 우회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파당시내 통행차량의 우회도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서수마트라주 파당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요 물류거점에 대한 접근시간 단축을 통해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함.
  - 2009년 12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및 2011년 1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 □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 차주(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재무부 (베트남 교육정보통계국)
- 총 사업비용 : 47.5백만불
- 지원신청금액 : 39백만 달러



- 사업범위 : 방글라데시 128개 지역 내 ICT 교육센터 신축, 교육·훈련용 기자재 공급, 교육·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 사업개요
  - 방글라데시 ICT 교육기관 대부분이 수도 다카에 밀집해있고 교육대상 및 연간 교육인원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 중등학교 교사 24만명 대부분은 전문적인 ICT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ICT 교육 훈련센터를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전국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ICT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128개 면에 ICT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여 ICT 교육기반 마련 및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방글라데시 전역에 인터넷 조기 확산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ICT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 2009년 12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및 2011년 2월 차관공여계약 체결

## 2. 구매계약 체결

### □ 방글라데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 버스 구매사업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재무부(방글라데시 도로운송회사)
- 총 사업비용 : 38백만불
- 지원신청금액 : 30백만불
- 사업범위 :
  - CNG 버스 255대 및 예비품 구매, 교육·훈련 및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다카시에는 매일 2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트럭과 버스 등 오래된 디젤차량으로 이 중 6.8%만이 대기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하고, 대중교통 수요의 상당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릭쇼의 경우 속도가 낮고 안전장치가 미비되어 있으며, 도시 인구 50%에 이르는 빈곤층의 60%는 도보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
  - 신규 CNG 버스 1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기존 구형 디젤 차량 30대와

- 비슷한 수준으로, 255대의 CNG 버스 도입은 7650대의 중고버스 운행 절감과 같은 환경적 효과가 예상되며, 또한 대형 CNG 버스의 도입으로 인한 대규모 승객운송으로 리쇼와 같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수단의 운영을 감소시켜 다카시내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06년 9월 방글라데시 정부의 EDCF 차관 지원 요청 후, 2010년 7월 차관 공여계약 체결 및 2011년 1월 구매계약 체결

#### □ 방글라데시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 차주(사업실시기관): 방글라데시 재무부(방글라데시 내륙수운청)
- 총 사업비용 : 50.95백만불
- 지원신청금액 : 26백만불
- 사업범위 :
  - 크레인 바지선과 예인선으로 구성된 재난구조선, 부대장비 및 관련 용역 구매
- 사업개요
  - 방글라데시의 높은 내륙수운 의존도에 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난구조장비의 노후화, 크레인의 용량부족, 예인선의 동력부족 및 탐지시스템 미비 등으로 침몰선박 인양 및 재난구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본 사업을 통해 250톤급 크레인이 장착된 크레인 바지선과 3,2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이 장착된 예인선을 구매하여 내륙수로에 산재한 중·소형 침몰선박을 효과적으로 인양함으로써 내륙수로의 안전성 확보 및 자연 재해에 따른 원활한 활동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005년 1월 방글라데시 정부의 EDCF 차관 지원 요청 후, 2007년 6월 차관 공여계약 체결 및 2011년 3월 구매계약 체결

#### □ 베트남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소액차관)

- 차주(사업실시기관): 베트남 재무부(하띤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3.74백만불

- 지원신청금액 : 2.98백만불
- 사업범위 :
  - 하띤성 중등직업학교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교육훈련, 유지보수 등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구매교육 및 훈련, 운영유지
- 사업개요
  - 최근 하띤성의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부 해안지역을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띤성 중등직업학교는 교직원 50명을 보유하고 하띤성 직업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자재 부족, 교육인력 및 재원의 부족 등으로 성 내 증가하는 기술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본 사업을 통해 숙련 기능인력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요 충족 및 고용창출, 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이 기대되며 하띤성과 베트남 중북부 지역의 고등 직업훈련센터의 모범적인 모델로서 베트남 직업훈련의 체제를 정비하고 개발을 촉진할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5월 베트남 정부의 EDCF 차관 지원 요청 후, 2010년 8월 차관공여 계약 체결 및 2011년 1월 구매계약 체결

#### □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1차

- 차주(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재무부(도로공사)
- 총 사업비용 : 138백만불
- 지원신청금액 : 50백만불
- 사업범위 :
  - 민루옹에서 딱까우 우회도로 진입구간까지 도로 및 교량 보수공사 (3.4km)
  - 교량을 포함하는 딱까우 우회도로 건설(6.3km)
  - 딱까우 우회도로 종점에서 투바이 우회도로 기점까지 도로보수작업 (11.6km)

○ 사업개요

- 본 사업을 통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GMS 국가간 물적 인적 이동을 위한 운송비용 절감과 농촌지역과 지방중심지와의 도로 연결성 제고 및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시내 중심지의 소음 및 공해 감소효과를 기대함. 특히, 빈곤영향비율이 38%에 달하는 해당지역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6년 10월 베트남 정부의 EDCF 차관 지원 요청 후, 2007년 8월 차관 공여계약 체결 및 2011년 4월 구매계약 체결

□ Ruhnupura 상수도 개발사업

○ 차주(사업실시기관): 스리랑카 재무부(국영상하수도공사)

○ 총 사업비용 : 115,764천 달러

○ 지원신청금액 : 76,337천 달러

○ 사업범위 :

- 상수도시스템 건설 (일산 17,500m<sup>3</sup> 규모)

○ 사업개요

-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Hambantota市를 중심으로 국제항만·국제공항·도로·산업단지·주택단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남부지역의 성장거점을 확보하는 「Ruhnupura 개발계획」을 국가 핵심개발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본건은 향후 「Ruhnupura 개발계획」에 의해 Ruhnupura 지역에 들어서는 사회기반시설과 입주기업, 유입인력 등을 대상으로 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아울러, 본건은 「Ruhnupura 개발계획」 대상지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생활여건 및 보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8년 9월 스리랑카 정부의 EDCF 차관 지원 요청 후, 2009년 4월 차관 공여계약 체결 및 2011년 1월 구매계약 체결

### 3. EDCF 통계 요약

####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승인*	집행	기금조성(누계)
2007년	5,542	1,553	21,169
2008년	12,373	2,371	23,060
2009년	12,697	3,128	24,699
2010년	12,476	4,107	26,405
2011년(3월말)	-	525	26,080

\* 각 연도 말 환율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6개국 251개 사업, 6조 8,438 억 원

- 집행 : 41개국 192개 사업, 2조 7,864억 원 (2011년: 15개국 35개 사업, 525억 원 포함)

#### □ 지역별, 분야별 승인 및 집행 누계 (1987~2011.03)

○ 지역별 승인 및 집행 누계

(단위: 억원)

지역	승인		집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45,255	66.1%	18,801	67.5%
유럽	4,277	6.3%	3,527	12.7%
아프리카	12,090	17.7%	3,141	11.3%
중남미	3,917	5.7%	1,637	5.9%
중동	2,722	4.0%	655	2.4%
대양주	161	0.2%	82	0.3%
합계	68,422	100.0%	27,843	100.0%

○ 분야별 승인 및 집행 누계

(단위 : 억원)

분야	승인		집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통	24,428	35.7%	8,255	29.6%
통신	6,149	9.0%	4,032	14.5%
에너지	6,754	9.9%	2,870	10.3%
수자원·위생	10,987	16.1%	3,215	11.5%
환경보호	228	0.3%	148	0.5%
보건	6,932	10.1%	2,999	10.8%
교육	6,401	9.4%	1,995	7.2%
공공행정	3,194	4.7%	2,171	7.8%
농수임	2,001	2.9%	1,433	5.1%
기타	1,353	2.0%	730	2.6%
합계	68,427	100.0%	27,848	100.0%



## EDCF 동향

### [EDCF 對스리랑카 정책협의 실시(1.7)]



EDCF 對스리랑카 정책협의

#### □ 스리랑카 거시경제 현황 및 개발협력 우선순위 등 설명

- 내전종식에 따른 주요 경제부문 회복으로 2010년 약 8% 경제성장 예상, 해외송금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추세 등
- 우리측의 KSP 활용제안에 대해 기존 2개 과제 외에 스리랑카 재무기획부의 경제 기획, 정책조정·평가 등 역량 향상과 제도화 등의 분야에서 KSP 등을 통한 한국과의 협력확대를 요망하여 금년도 KSP사업에 포함해 시행기로 합의
- 내전종결에 따른 북동부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인프라 수요에 부응, EDCF 지원규모 증액 요망 : 현재 4년간(2009~2012) 2억불 → 약 5억불 수준



□ EDCF 지원 요망 후보사업(11개) 설명

- 도로(4건), 상수도(2건), 행정시설구축(2건), 직업훈련(1건), 보건(1건), 항만 개발(1건)

□ 스리랑카 등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의지 표명

- KSP 소개 및 스리랑카의 적극적 활용 권유
- 스리랑카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 EDCF 지원규모 증액 검토(2009~2012년 승인 잔액 1.3억불에서 일부 증액 가능성 시사)

□ EDCF 지원요청 후보사업에 대한 협의

- 11개 후보사업 중 EDCF의 F/S 지원으로 사업준비가 완료된 ‘감파하 고등 기술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11년도 사업심사 가능
-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스리랑카 측이 보다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 해줄 것을 요청
- 필요한 경우 EDCF의 사업준비(F/S) 지원을 통해 2011년도 EDCF 지원 사업을 정하도록 함

[EDCF 對에콰도르 정책협의 실시(1.20)]



EDCF 對에콰도르 정책협의

□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를 위한 협력 검토

- 개발 경험 전수프로그램인 KSP에도 협력 사업 제안
-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제시와 구체적인 시행방법 수립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에콰도르에도 한국의 KDI같은 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

□ 중점지원분야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여타의 분야에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경우 적극적인 지원 협의

- 한국 정부는 상대국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두손으로 드리는 원조를 추구함.
- 여타 우리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유·무상 사업을 제안하면 적극적인 지원 검토

[국회 UN-MDGs 포럼 참석(2.14)]

- 주제 : UN-MDGs 활동과 우리나라 ODA 시스템 개선방안
- 주요 논의 내용 : G20 개발의제 이행, 민관협력, 국가브랜드 제고, 무상원조 통합필요성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당행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EDCF 활동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홍보

[ADB 미래탄소펀드 연차 총회 및 이사회 개최(3.7~3.8)]



ADB 미래탄소펀드 연차 총회 및 이사회 참가자들과

□ 주요 논의 내용

- 포트폴리오 전략 등 논의
  - 27개 중점추진사업을 선정, 일부 사업비중 조정 등
- 2011년 1분기 탄소배출권 구매가격 범위 승인
- 투자사업 검토 및 탄소배출권 구매계약 승인 등
  - 태국 NED 태양광, 인도 Tata 풍력 및 인도 Sawra Kuddu 수력발전사업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단 면담(3.10)]**

□ 주제 : EDCF와 국제개발협력학회간 협력방안 구축

□ 주요 논의 내용

- 양측은 국제 컨퍼런스 공동개최 등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으며, EDCF와 개발학회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ODA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

**[OECD DAC 의장(Mr. Brian Atwood) 면담(3.28)]**



왼쪽은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오른쪽은 브라이언 앳우드 DAC 의장

□ 주요 면담 내용

- 금번 HLF-4는 매우 중요하며 MDGs, 국제공공재, 보건, 식량안보 등 주요 정치적 이슈를 담은 결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현재 약 30% 수준의 비구속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 EDCF는 향후 DAC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G20을 통해 부각된 성장을 통한 빈곤퇴치 등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AusAID 부청장(Mr. James Batley) 면담(3.28)]

□ 주요 면담 내용

- 양측은 양국의 ODA 실행기관으로서 추후 협력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별 노하우 교류 등을 위해 MOU 체결을 검토하기로 함

[EDCF 對 모잠비크 정책협의 실시(3.31)]

□ 모잠비크 국가개발계획 및 개발우선분야 청취

- 모잠비크 정부는 3차 빈곤감소전략(PARP, 2011~2015)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며, 동 전략상 1. 농업 및 어업 생산성 향상 2. 고용 증대 3. 인적·사회적 개발이 최우선 역점 사업임을 밝힘

□ 모잠비크 차관도입 정책 청취

- 모잠비크 정부는 지속가능(Sustainable)한 차관 및 양허성 차관 도입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고, 무상원조가 우선이며, G.E. 35% 이상 유상차관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IDA 및 AfDB로부터 가장 많은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이자율은 0~3% 범위임

□ 지원후보사업 협의

- 모잠비크 측이 제시한 교통, 교육, 전력 분야 등의 9개 사업 중 우선순위, 사업준비상황 등을 감안, 2011년~2012년 중 우선 추진사업 선정

## [EDCF 對캄보디아 정책협의 실시(4.5)]



EDCF 對캄보디아 정책협의

- 개발협력 분야 확대 및 무역·민간투자과 연계한 정책협의 추진
  - 기존의 도로 및 수자원 분야를 계속 지원해 나가되 향후 녹색성장, 농업 개발, PPP 등 지원 분야 및 방식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합의
  - 특히, 현재 진행중인 KSP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 공유함으로써 통합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EDCF 對베트남 정책협의 실시(4.22)]

- 對 베트남 EDCF 사업 설명
  - 베측 사회·경제개발계획 상의 공항·항만 현대화 사업 등에 KSP 컨설팅결과가 EDCF 사업으로 연결되고, KOICA사후 관리 등 종합·효과적 원조모델 구축에 협조 당부
  - 또한 베트남이 중저소득 국가에 진입함에 따라 원조의 경제발전 촉매제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과 ODA 협력과 함께 개발경험, 역량강화 등 활성화 제안



EDCF 對베트남 정책협의

□ EDCF 프로그램차관제도 도입

- 베측의 소액차관 활성화 요청\*에 대해 EDCF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소액 차관사업 통합 신청(3천만불 이상), 한국 컨설턴트 고용 및 통합구매 등 검토 제안

\* 베측은 소액차관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원조효과성이 큰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

[PPP방식 EDCF 지원확대를 위한 협력활동 강화]

□ EDCF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년~2015년)”에 따라 PPP방식을 활용한 EDCF 지원확대를 추진

- ‘EDCF에 적합한 PPP 모델 구체화’를 위해 KDI와 용역진행
  -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정책연구에 특화
  - MDB·해외 공여국의 지원사례 분석,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수요 파악, EDCF에 적합한 PPP모델 제시, 주요국 후보사업 발굴(조율 중)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는 사업발굴, KSP 연계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





## 국내외 ODA 소식

### [ 한-파라과이, 경제 통상 협력 강화 합의 (1.4, 노컷뉴스) ]

- 남미 순방 중인 김 총리는 2011년부터 파라과이를 ODA 중점협력대상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서명
  - 한국과 파라과이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조속한 체결 희망을 강조

### [ KOICA, ‘녹색성장 연수 프로그램’ 실시 (2.25, 파이낸셜뉴스) ]

- KOICA는 한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 개도국 19개국 20명의 환경 정책 담당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과정 및 정책·기술을 소개, 지식을 전수

### [ 무상원조 통해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앞장 (3.18, 파이낸셜뉴스) ]

-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무상원조를 통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문화단지 내 ‘시엠립 한국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착공
  -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개발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원조 모델로 캄보디아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문화재 보호 지원



[ 재정부, 아프리카에 '조세노하우' 전수 (3.21, 이데일리) ]

-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 조세공동체(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협의체(KOAFEC)의 KOAFEC기금을 활용해 조세 분야 공동 컨퍼런스 개최
  - 지식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조세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조세 발전 및 행정사례 등 경험을 전수

[ 재정부, UAE에 세운 韓원전 신화 계속돼야 (3.23, 아시아경제) ]

- 중동은 한국의 제 3위의 교역권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배경으로 원자재, 플랜트 건설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증대
  - 중동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 고유의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석유 이후 (Post-Oil) 시대의 산업다각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을 육성, 민간부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및 중소기업육성을 지원할 예정
- 재정부는 중동 공무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기획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발전경험공유프로그램(KSP),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지원을 확대할 예정
-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구촌은 시혜적 식량지원론에서 벗어나 수원국의 식량개발 및 증산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

[ 한국정부, ODA 양자원조 20% 아프리카 지원 (3.24, 아시아투데이) ]

- 천연자원의 보고라 불리는 아프리카를 향해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
  - 중국은 아프리카 제 1위 교역국가로 지난해 투자액만 140억달러 초과
- 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는 등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함

[ 복지부, 몽골 보건부와 보건의료 손잡는다 (3.24, 파이낸셜 뉴스) ]

- 보건복지부는 몽골 보건부와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한·몽골 보건부간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진출 등을 위한 것으로 양국간 보건의료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
  - 몽골은 이번 MOU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와 우수한 의료 공급체계 분야에 긴밀한 협력, 몽골 국립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EDCF 지원을 요청

[ KOICA, 몽골 물 부족 해결에 적극 동참 (3.25, 파이낸셜 뉴스) ]

-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무상원조로 몽골 빈민촌의 식수부족 해결 위해 ‘몽골 물 랜드 마크사업’ 대한 양해각서 서명
  - KOICA는 한국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의 일환으로 몽골 물랜드 마크 사업을 추진 하는 중 몽골의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야르마그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구축, 수자원 개발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본격 지원할 예정

[ EDCF기금 투입, 솔로몬제도에 어장 짓는다 (3.30, 국민일보) ]

-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투입해 해외수산자원 확보 시작
  - 솔로몬 어항개발 사업은 민관 공동투자 사업으로 솔로몬 정부에 EDCF를 주고 솔로몬 정부와 한국 기업이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 출범, (3.31, 문화일보) ]

- 회원국의 연구인력 45명이 한국의 농업현장에 투입, 직접 필요한 기술을 습득 및 전수하는 역할을 맡게 됨
- KAFACI 사업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고 아프리카 기아·빈곤 문제를 공동 해결함으로써 자원외교 등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추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KSP ‘한강의 기적’ 세계에 전수한다 (4.5, 국민일보) ]

-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KSP 사업에 대한 각국의 지원요청이 쏟아져 수출금융정책 및 수출입은행 설립방안(베트남),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방안(알제리) 등 구체적 정책은 물론 5개년 개발계획 수립(쿠웨이트)도 지원한 바 있음
- 정부는 앞으로 사업대상국이 KSP를 토대로 실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주는 원스톱 원조체계도 추진하고, 우리의 발전 경험을 분야별로 나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작업도 진행 중

[ 에티오피아, DR콩고 “한국기업 진출 요청” (4.9, 이투뉴스) ]

- 외교부는 에티오피아를 방문, 송전선 사업 EDCF 지원 검토, EDCF 차관협정 및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
-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항공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및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합의
- 또한, DR콩고를 방문해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발효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EDCF 차관협정 등 적극적 지원 약속

[ 한-인니 경험 본격 추진 (4.11, enews) ]

- 재정부는 3년간 200만 달러의 KSP정책 컨설팅 지원과 MDB 신탁기금을 활용한 공동컨설팅 사업을 실시
  - 2013년까지 6억 달러 범위 내에서 EDCF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MDB 협조융자나 수출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또한,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간 교통협력 분야 양해각서와 해운협정 체결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인니로 파견할 계획
  -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석유가스·광물자원개발과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도 강화할 예정

[ 재정부, KSP 전담 개발정책팀 신설 (4.12, 연합뉴스) ]

- 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산하에 ‘국제개발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KSP 지원체계를 재정비
  - 한국 고유의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모듈화’ 작업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조정, KSP 컨설팅 활성화 방안 수립 등 KSP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
  - 정부는 KSP를 아프리카 경험의 중점 추진과제로 정해 경제발전 노하우를 제공할 계획

[ 공기업, 신흥국에 노하우 전수·시장 개척 '원원' (4.12, 파이낸셜 뉴스) ]

- 한국의 공기업들은 낙후된 개도국의 인프라를 원조성격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 수자원 공사는 '물산업 분야 세계 1위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으로 경영 목표를 잡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
  -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지분을 인수, 북극권 자원개발에 진출
- 공기업의 해외진출은 먼저 공기업이 진출해 신뢰도를 바탕으로 활로를 뚫고 민간기업들의 진출을 견인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 정부, 중남미 경험 5대 과제 중점추진 (4.13, 아시아투데이) ]

- 정부는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페루, 칠레, 브라질 등의 국가와 설치한 '자원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침
  -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지원해 식량자원의 해외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을 곡물 조달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
  - 또한, I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를 탄소배출권 중점 확보 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EDCF 지원을 확대하고 KSP 지원을 늘릴 방침

[ 한국 발전경험 40개 연내 모듈화 (4.14, 아시아투데이) ]

- 모듈화 사업은 대외 원조정책의 핵심기반으로 개도국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개발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5단계에 걸쳐 정리하는 사업 실시
  -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개발경험 정리사업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모듈화 작업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개발원조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

[ 해외 민자 개발 국내 업체 참여폭 확대 (4.17, enews) ]

- 해외 민자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 국내업체 참여폭 확대 기대
  - EDCF 지원은 개도국의 공익적인 성격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개도국 정부의 합의하 EDCF 자금 사용 요청 가능
  - EDCF 우선 지원국가 및 신재생 에너지 등 ODA 우선지원 분야에 중점

[ ‘국제개발컨설팅’ 마스터플랜 수립 (4.19, 머니투데이) ]

-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개발 컨설팅(Development Consulting)’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 각종 국제 개발 금융기구(MDB)의 조달시장에 민간업체들의 국제 개발 컨설팅 참여 여건을 개선해 국내 컨설팅 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개발 컨설팅 산업의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인력, 자금력, 기술 등 제반여건을 개선
  - 개발 컨설팅 분야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컨설턴트의 국제기구 등록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국제 무대 진출 지원